

주) · 약칭 : 한나라당- (한), 열린우리당- (우), 민주당- (민), 민주노동당- (노),
국민중심당- (국), 한국사회당- (사), 무소속- (무)

I. 재 ·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상반기)

○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개최 구분	개최(방송) 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참석후보자	
						참 석	불 참
대 전	서 구 을	대 담 토 론 회	4.19(목) 22:00	KBS대전	이영애 (단국대 교수)	이재선(한), 심대평(국) 김윤기(사)	
경 기	화 성 시	대 담 토 론 회	4.18(수) 14:07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박봉현(우), 장명구(노)	고희선 (한)
전 남	무 안 군	대 담 토 론 회	4.17(화) 15:00	KBS목포	정기영 (대불대 교수)	강성만(한), 김홍엽(민) 이재현(무)	
	신 안 군	방 송 연 설 회				강성현(무), 박세준(무), 서용석(무), 유정일(무)	

○ 구 · 시 · 군의 장 선거

선거구명		개최 구분	개최(방송) 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참석후보자	
						참 석	불 참
서 울	양 천 구	대 담 토 론 회	4. 20.(금) 19:00	CJ케이블넷 양천방송	김형준 (명지대 교수)	오경훈(한), 문영민(민) 추재엽(무)	
	동 두 천 시	대 담 토 론 회	4.17(화) 10:00	나라방송	우경선 (변호사)	이경원(한), 오세창(무) 홍순연(무), 노시범(무)	
경 기	양 평 군	대 담 토 론 회	4.17(화) 13:00	경동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강병국(한), 김선교(무), 유병덕(무)	
	가 평 군	방 송 연 설 회				4.17(화) 16:06	경동방송
충 남	서 산 시	방 송 연 설 회	5.20(일) 10:25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 모두방송	신기원 (신성대 교수)	유성곤(한), 명노희(민) 박상무(국), 이복구(무)	
경 북	봉 화 군	대 담 토 론 회	4.23(월) 00:30	KBS안동, 안동MBC	황시원 (교수)	우종철(한), 엄태항(무) 박현국(무)	

주) · 약칭 : 한나라당- (한), 열린우리당- (우), 민주당- (민), 민주노동당- (노),
국민중심당- (국), 무소속- (무)

II. 재 ·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하반기)

선거구명		개최 구분	개최(방송) 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참석후보자	
						참 석	불 참
경 기	안 양 시	대 담 토 론 회	12.11(화) 20:00	티브로드 ABC방송사	김갑중 (교수)	최대호(대),이필운(한)	
충 남	연 기 군	합 동 연 설 회	12.10(월) 20:20	티브로드 중부방송	주아영 (중부방송 기자)	성태규(대),최무락(한) 최준섭(국),유한식(무) 황순덕(무)	
전 북	부 안 군	대 담 토 론 회	12.11(화) 10:00	KBS전주, 전주MBC	김승환 (전북대 교수)	김호수(대),강수원(한) 이강봉(민),김종규(무) 이석기(무),최규환(무)	
전 남	장 성 군	대 담 토 론 회	12. 9(일) 14:10	광주MBC	서정성 (안과원장)	김한중(대),김홍주(민) 김양수(무),이 청(무)	
	장 흥 군	대 담 토 론 회	12.11(화) 10:00	KBS광주	박대식 (KBS광주 아나운서)	이명흠(대),백도선(민) 김 성(무)	
	해 남 군	대 담 토 론 회	12. 7(금) 13:50	목포MBC	모지환 (대불대 교수)	김충식(대),정두채(민) 이석재(무)	
경 북	영 천 시	대 담 토 론 회	12.4(수) 14:1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정경부장)	김영석(무),김정일(무) 박영환(무),이병진(무) 이성희(무),김준호(무)	
	청 도 군	대 담 토 론 회	12.6(금) 23:00	KBS대구	이창희 (KBS대구 심의위원)	김하수(무),정한태(무) 이광동(무),이광호(무)	
	청 송 군	대 담 토 론 회	12.7 (토) 22:15	안동MBC	권영두 (안동MBC 기자)	한동수(한)	배대윤 (무)
경 남	창 념 군	대 담 토 론 회	12.13(목) 17:35	마산MBC	이호영 (창원대 교수)	성낙봉(대),하강돈(노) 김충식(무),한홍윤(무)	
	함 안 군	대 담 토 론 회 합 동 연 설 회	12.13(목) 22:00	창원KBS	조효래 (창원대 교수)	조현룡(한),조영규(무) 진종삼(무)	

Ⅲ. 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결과

선거구명	개최 구분	개최(방송) 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참석후보자		
					참 석	불 참	
부	산	대 담 토 론 회	2.7(금) 09:30	부산MBC	방송주 (동아대 교수)	이병수, 정용진, 윤두수, 설동근, 임혜경	
울	산	대 담 토 론 회	12.7(금) 23:00	울산MBC	김진영 (영산대 교수)	김상만, 김복만 정찬모, 최만규 이덕출	
충	북	대 담 토 론 회	12.4(화) 00:20	KBS청주, 청주MBC	엄태석 (서원대 교수)	이기용, 박노성	
경	남	대 담 토 론 회	12.14(금) 19:30	KBS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권정호, 고영진	
제	주	대 담 토 론 회	12.5(수) 18:30	제주MBC	홍성화 (교수)	신영근, 양성언	
		대 담 토 론 회	12.13(목) 22:00	KBS제주			

문화일보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005면 종합

'TV토론' 위력 약해지나?

후보년립 상형서 합당시간 제한돼 홍보하게
여론조사서도 '선택에 영향 받아' 응답 급감

11월 15일 대통령선거에서 도입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여론이 가파르게 TV토론이 올해 대선에서도 과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15년전과 같은 과급력은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유력당이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7명의 대선후보는 TV토론 120분동안 1인당 17분 정도 할당되는 데 그친다. 백화점식 나열 정도에

그저는 전경방송도 문제이고, 후보로서는 심도있게 자신의 가치와 소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적은 탓이 부족하다.

12월 19일 대선일이 앞서 일정 기간을 충족하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합당토론회는 모두 3차례다.

국회 의석수 5% 이상 정당에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

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 30일간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김경연,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에서 TV토론의 영향력

과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 권규영 연구실장은 "냉정하게 본다면 TV토론이 주요 후보를 대상으로 5%이상의 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실장은 "다시 말해 TV토론이 이번 대선의 구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 조사결과 TV토론이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위

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방송학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지수에 따르면 지지후보 결정시 TV토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유권자는 97년 대선 당시 51.8%로 과급이 없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22.8%로 급감했다. 선거의 종류는 다르지만 2002년 17대 총선거에서는 6.5%로 아예 한 자릿수로 추락하기도 했다.

김성환기자 seoh@k

세계일보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005면 종합



대선 후보 포스터 TV 토론회 다음 주일(12월 19일) 후보자 포스터 후보등록 의무화(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심대평 국민중심당, 문국현 심초안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 서태원 기타

대선 TV토론 영향력 시들해지나

나날 6일 첫 개최... 참석자 많아 '말도 막힌' 예상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12월 19일)이 임박한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TV토론은 처음 도입됐던 1997년이나 2002년 대선에 비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선거전문가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참석자 수는 토론의 '말도'를 방어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다) 세 차례 진행되는 중앙선거위 주최 TV토론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김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 참소현국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심대평 국민중심 후보 등 7명의 후보가 나선다. 2002년 대선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민주당, 권영길 민주당 후보 3명 이 제한됐다.

7명에게 주어질 토론시간은 120분. 후보당 15분(가량)의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철학 등을 도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30일 "7명이 모여 토론을 하는 만큼 얼마나 후보의 정책이나 철학을 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명에 120분... 정책 등 알리기에 한계
후·급 지지율 고착화 현상도 반감 요인

보수진영 두 후보(이명박·이회창)의 지지율 합이 60%에 가까운 형이어서 지지율 고착화 현상 역시 유권자들에게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김형준 정치대 교수는 "시청자가 TV토론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간 대 여간'이나 '보수 대 진보'의 원대 구도가 만들어져야 시청률 절정을 볼 수 있다"

는며 이번 대선은 아직까지 선거 구도 지체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위의 경직된 토론 운영방향을 지적하는 점도 있었다.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위의 심의를 들여보면 이번 TV토론은 후보 간 상호 질문도 정책분야에 한정돼 있고, 1:1 토론도 불가능하다"며 "도론회가 자신 정권 필요를 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위는 다음달 2인까지 토론회 방식을 확정, 권고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대선에서 TV토론의 영향력 자체가 다량화 미디어의 발달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방송학회

■ 중앙선거위 주최 TV토론 일정

일시	분야	참석후보
12월19일 오후 8시~10시	정치·외교·국방 안보	이명박, 이회창, 김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11월 오후 8시~10시	사회·문화·교육·여성	이명박, 이회창, 김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12월 오후 8시~10시	경제·노동·복지·국회	이명박, 이회창, 김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12월 오후 11시~14일 오후 14시	연방어	이명박, 이회창, 김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자료에 따르면 '지지후보 결정시 TV토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유권자는 97년 대선 당시 51.8%로 과급이 없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22.8%로 급감했다.

이 같은 추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예년과 달리 TV토론으로 지지 후보가 16위까지 있다는 사실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화어론' 현상이 도드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oyo.com

세계일보

2007년 12월 03일 월요일 005면 종합

6일 TV토론 후보들 전략은...

李 ‘경제’ 비전 제시 대세론 각인
 呂 귀족 이미지 벗고 믿음 주기
 鄭 정감 있는 화법 진정성 전달

각 대선후보 진영이 오는 6일 시작되는 TV토론회를 앞두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TV토론회를 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로, 이회창 무소속,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는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TV토론회는 후보 발 주자들이 선두 주자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국민의회의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전달해 대선 승리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0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케네디 후보가 현직 부통령 출신의 공화당 닉슨 후보를 겨우러뜨린 결정적 무기도 TV토론이었다.

◆대세론 각인=이명박 후보는 ‘일 잘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 측은 ‘샐러리맨의 신화’로 대표되는 성공스토리와 서울시장 시절 정계친 복원과 교통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여준 추진력을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최대한 단문을 구사하면서 강하고 짧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기로 했다.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BBK의 흑’에 대선 정면돌파할 계획이다. 자녀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논란 등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할

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KBS 이사 출신의 김인규 선대위 방송전략실장 산하에 기획총괄과 보도분석, TV토론, 방송연설팀이 토론을 준비 중이며, 토론 콘텐츠는 객승준 정책기획팀장이 총괄하고 있다.

◆엄숙함 벗기=이회창 후보는 대선 TV토론을 두 차례 해본 경력을 심분 활용, 역전의 별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듯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TV토론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믿음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의 TV토론 때 지적된 딱딱하고 엄숙한 이미지나 ‘귀족 후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명박 후보를 공격 타깃으로 설정, 경제전문가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이 후보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방침이다. 방송기자 출신의 김병호 의원과 이영덕 공보팀장, 지상욱 홍보특보, 윤홍선 정책팀장, 유석은 연세대 교수, 전원택 변호사 등이 토론 준비를 맡고 있다.

◆진정성 전달=정동영 후보는 지나치게 완벽하게 보이기보다는 편안하고 정감 있는 화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정책과 정치신념 등이 진

정성있게 전달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깔끔한 귀공자형 마스크에 ‘방송영커’ 이미지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오히려 호소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른 후보의 정책과 그간의 발언 내용을 숙지하고 상대후보들의 토론 테이프를 보면서 후보별 토론 스타일의 장·단점도 분석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개발본부의 양형일 윤호중 공동본부장과 김현종 본부장 등 방송콘텐츠 개발본부 인력 40여명이 TV토론을 지원하고 있다.

◆군소 후보들도 벌려=‘빅3’ 후보에 비해 언론 노출 빈도와 양에서 열세인 군소 후보들은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경제대결 구도를 만들어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BBK 의혹과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이슈로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며 정공법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범여권 ‘대안 후보’로 부각시키는데,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TV토론을 준비 중이다. 이강은 기자 klee@segye.com

중앙일보

2007년 12월 05일 수요일 009면 종합

TV토론 앞둔 후보들 어떤 교육 받고 있다

별안 시간 지켜서요	늘어지는 질문 안 봐요	부담감 있고 몰려서요
문국현(기호 4번) 04일 오후 7시 - 질문 수 있는 3분 30초 대형 연방전까지 30초정 이제는 상황 - 20분 30초 생방송 대답이 될 30초 04일은 20분 30초 - 30분 30초 30초 이제는 상황 - 20 분 30초 생방송 30초 30초	권정갑(기호 3번) 04일 오후 7시 - 부유 30분 30초 상황을 정면에서 후보에게 물어 상황이 틀리지 후보는 30초 30초 04일은 20분 30초 - 30분 30초 30초 이제는 상황 - 20 분 30초 생방송 30초 30초	이인제(기호 4번) 04일 오후 7시 - 30분 30초 30초 이제는 상황 - 20 분 30초 생방송 30초 30초

980초 안에 부동층 마음 잡아라

이제까지 반수라고 판해고 있다. 이들은 자기 후보에 뛰어난 16명의 문인 유망자와 의견을 서명하여 찬성"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정치과 교육, 복지 같은 실수날 볼 자지 찬성도 표로 찍혔다. 상황이 바뀌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도 있다.

후보들 내일 시합 전 TV토론

KBS가 중계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대 총괄책임자인 이낙우사가 워해드루가 이끄를 맡는다. TV 토론회는 2007년 12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생방송으로 980초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20분 30초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30초 30초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생방송으로 980초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20분 30초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30초 30초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생방송으로 980초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20분 30초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30초 30초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黃日報

2007년 12월 06일 목요일 A10면 기획

대선후보 6명 오늘 첫 합동 TV토론

‘이미지’ 아닌 ‘정책비전’을 눈여겨보라

대선후보 첫 합동 TV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중앙선거감사소본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KBS와 MBC에서 생중계한다. 참석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몽헌,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6명이다. 이들은 초정 대상 기준인 연내 5% 이상인 정당 후보, 직전 전국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언론조사 평균 지지를 5% 이상인 후보이다.

미디어 선거전에서 TV 토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지마 후보의 자량 보다는 이미지와 말솜씨만 보게 된다는 지적도 많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부터 TV 토론 잘 보는 법이 대해 물어 봤다. "무엇을 진행 전략에 속지 않아야 - 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 이영수 선임연구원은 "후보들이 간단한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이야기로 속취 주제를 돌려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는 말

엔 대답 알고 판소리"한다는 이야가 있다. "특히 토론 참가자가 6명이나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때때로 질문자가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어려운 만큼 시청자들이 알아서 이 길은 말 풀 리기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지적했다. "말대신 명화 사살만 해도 10여 가 지인 〇〇 후보는-" "속박이제 시즈코 비바람은 〇〇 후보는-"

웃차림-인변 대신 정책인관성 여부 따지고

역질문-유도질문 등 토론 전략 속지 말아야

이러해 의혹을 가중시킬수하는 것도 정치인 사이의 규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법이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영철 교수는 "후보들의 토론 진행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되물은 역질문이나 답변을 알아 가는 유도질문, 여러 개의 질문을 섞어 고요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질문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을 말든 아니라 '역질문'도 살

짜야-선문과 신문방송학과 황근 교수는 "언변보다는 정책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며 정치적 선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는 것까지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후보자가 여겨지 만큼 박사는 이나가 때문에 정화한 수치 를 기어하지 못하는 류의 시소한 실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

다"며 "그러나 엄청난 재원이 필요 한 정책과 경제 정책을 함께 주장하 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중요 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태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 라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자리"라며 "맑은 이미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웃차림이나 눈짓, 속삭임 등 가벼운 비유는 의미 를 부여하거나 2~3초간 담뭍이는

6일 대선후보 TV토론회 좌석 배치도, 좌석 순서는 후일연구 결정



6일 대선후보 TV토론 참석자와 토론 주제

참석자	대통합민주신당 정몽헌,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이낙우(중앙선거감사소 본위원) 대선 후보도 참석 대상이나 본인들이 불참할 경우
참석 기준	· 연내 5% 이상 정당 후보 ·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 10월 28일~11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를 5% 이상인 후보
주제	한국구도 개편과 헌법 개정,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등
시간	오후 8~10시
장소	KBS 본사 스튜디오
중계방송사	KBS, MBC

모습을 보고 평가해 일 권 후보'라 고 결론을 내리는 사이에서는 논란 이라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이 스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정치 및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메시지를 전 달하는 능력이 있는지 시사자의 약 령을 공격하는 질문에 얼마나 슬기

롭게 대처하는지 등은 유아에서 따 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 6명 2차 토론은 11일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분야를 주제로, 3차 토론은 16일 경제 노동 복지 과 학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편집장 기자 www@kcpa.com 조진석 기자 cj@kcpa.com

李 “핵폐기해야 北지원” 鄭 “평화협정 체결해야”

북핵해법등 대북정책 차열한 설전

6년 대선후로 4년과 못 TV 토론을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구상과 지원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북핵 해법과 한반도 외교는 남·북의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정권-교섭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昌 “돈 주고 北핵해결 정성나간 것” 權 “昌 60년대 반공투사 연상시켜” 文 “北·美수교 통해서만 풀수 있어”

특정 북핵을 신변과 남북관심은 조우를 권유한 이광이 이광을 후 보가 대외 정책론을 권유한 정호경-김영삼 후보 4인과 4인 했다. 권·교섭을 이루는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이광이 후보의 대외정책은 사대주의적이다. 두 분은 대외정책에 180도 다른 비유에도 양자대립 내포 있다. 지원 비유의 유일한 공통점은 가장 가까운 “나는 평화협정을 만들고 중립화법을 모색한다”고 말한다.

정호경은 “교섭과 지원은 선이다. 이광이 후보는 남의 침략죄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이광이를 고르겠다고 했다. 김영삼 후보는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권영삼 후보는 “이광이를 권유하는 반공투사라고 이광이 후보도 그렇게 다짐지 않다. 북핵 해결에 나는 북한 가서 도와 해법을 논하겠다”며 “돈 주고 핵폐기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권한다.”

정호경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지지자를 방송국 앞 광장에 모인 이광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7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모습. 이광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7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모습. 이광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7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모습.

다른 경우와 달리 4인 4색에서 벗어나 “국적 문제를 풀면 북핵 해결이 가능”이라고 말한다. 정호경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정호경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정호경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정호경은 “합력 대결이 판을 칠고, 권력구분 계층은 후보들마다 방향이 달랐다. 정권-교섭을 둘러싼 정쟁의 격화도 대외정책의 대립을 부추겼다.”

한겨레

2007년 12월 07일 금요일 002면 종합

대선후보 첫 TV 합동토론

각 후보 토론스타일

이명박 여유

시간 남긴채 '방어' 주력

정동영 강공

주제 벗어나 지적받기도

이회창 단호

주먹쥐고 '대북관' 강조

6일 열린 첫 텔레비전 합동토론에 나선 6명의 후보들은 비비케이(BBK)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지켜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주어진 토론시간도 다 채우지 않은채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이 후보를 집중 겨냥하며 '공격적'인 발언 수위로 일관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제 정권교체 할 날이 1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부족한 세계 적극적 지지를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여유를 보였다. 그는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이회창 후보의 말씨에 대한 토론 때 "저와 차이가 없다. 비슷해서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짧박이 언급하고 넘어가는 등 자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았

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공격에 자극받은 듯 평소 토론회 때 자주 보이던 "허허..."하는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실한 듯 '이명박 공격'에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시작부터 "발세, 위장,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는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창피스럽다"는가 하면 "이명박 후보는 정상회담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 지금(이 후보가) 한 말을 또 언제 바꿀지 모른다"는등 이 후보를 난타했다. 정 후보는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발언 시간에도 비비케이 문제를 정평하게 언급해, 진행자(송지헌)로부터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뚜렷한 대북관'을 강조해온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통 보수'로 차별화하려는

듯 표현에서도 '단호함'을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 이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이 자신의 대북관을 보수적이라고 비판하자, "말씀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어저구니없다", "제대로 아셔야겠다"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차례 오른쪽 주먹을 짝 짝 채 발언에 힘을 주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자, 이명박 후보는 "출마를 하려고 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 일관된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무책임·무능한 정치인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명박·정동영 후보를 싸잡아 공격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헌법 개정 때) 여성평등 문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판기 발언, 마사지걸 발언으로 분노한 여성들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정동영 후보에게는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켜 가족불행시대를 만든 후보"라는 등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인제 후보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적 후보의 이미지를 내세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황은범 기자 jaybee@hani.co.kr**

중앙일보

2007년 12월 07일 금요일 005면 종합

토론 옆길로 새자 사회자 “자제해 달라”

송지현씨 한나라·신당 경선, TV토론까지 진행

6명의 대선 후보가 TV 스튜디오에서 맞붙는 토론전의 심판은 송지현(56) 아나운서였다. 그는 순발력 있는 진행으로 날카롭게 대답하는 후보들의 발언을 조율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토론 도중 BBK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이병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공방을 벌이자 그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시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토론이 끝난 뒤 송 아나운서는 “토론이 논점에서 지나치게 벗어날까 봐

일부러 한마디했다”며 “할 말은 하게 하면서도 토론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 숫자가 많아 시간관리가 어려웠다”며 “남은 두 차례 토론도 진지하면서도 활력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1, 16일 토론 방송도 송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된다.

송 아나운서는 올 한 해 동안 한나라당·신당의 경선에 이어 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 일약 ‘대선 전문 사회자’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 야후코리아가 기획한 대선 후보 초청 온라인 생중

계 인터뷰를 진행해 주요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로부터 공정하고 깔끔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에선 “책임자가 밟았다”며 빈졌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97년 방송 3사(KBS1·MBC·SBS)의 합동토론의 형식으로 처음 치러졌다. 당시 3사의 종합시청률은 1차(12월 1일) 55.7%, 2차(12월 7일) 52.5%를 기록했다. 반면 2002년엔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 3사의 종합시청률은 1차(12월 3일) 33.8%, 2차(12월 10일) 32.3%에 그쳤다.

임장혁 기자

jhim@joongang.co.kr

李 “수능 등급제 혼란 무능정권 전형” 鄭 “자사고 100개, 운하보다 큰 재앙” 曁 “나쁘게 똑같아져 교육에 빨간불”

대선 D-7 후보6명 2차 TV토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대선후보 6명은 1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차 TV토론회에서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양성평등 실현,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466면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강화 용기발전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수능등급제 혼란 등을 예로 들며 “이렇게 경험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는 “선진국이 되려면 더 깨끗해지고 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와 신뢰가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 조건”이라고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회창 후보는 “5년간 우리나라는 망가졌다”며 “정권 핵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고, 위정취업이다 팔서다 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에게 믿고 따라라

고 하느냐”고 공격했다.

교육 분야에서 이명박 후보는 “교육의 질은 평준화 명목 아래 떨어졌는데 교육 수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 후보 공약대로 자립형사립고 100개 만들면 운하보다 더 큰 재앙이 오고 자사고에 보내려면 유치원부터 사교육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평준화 교육에 대해 “똑같아지는 것은 좋은데 나쁘게 똑같아져서 교육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장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복목고 들 늘린다는 이명박 후보 정책은 5%도 안 되는 복권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거짓말하는) 이 후보는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접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교육은 시장은

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직업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사회부형성 계교 방안과 관련 “정치하는 6개월 동안 비도 딱딱 사람으로 볼랐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모는 것 같다”며 “검은돈 못 만들게 하고 공직자 비리 처벌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대구 수성구에서 위장전입 단속이 항의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장전입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회창 후보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지도자로는 법 질서와 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저는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한판 승부”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정심원기자 amot@hk.co.kr

서울신문

2007년 12월 12일 수요일 002면 종합

李·昌·濟 서울교육 VS 평등교육 鄭·文·權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1일 두 번째 합동 TV토론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 현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이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이외도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사교육에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명박·이회창·이인제 후보는 수월성 교육 내지 자율성 교육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는 평등주의 교육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박 후보는 "수능과목을 4개로 줄이고 자립형 사립고를 100여 개 만들어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사를 10만명 증원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등 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후보는 "자사고를 늘리면 사교육비가 능력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대학입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자사고를 늘리면 사



11일 밤 열린 대선후보 2차 TV합동토론회에서 6명의 후보들이 손을 맞잡은 채 웃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권영길, 이회창 후보. [최재국기자 seoworld@seoul.co.kr](mailto:최재국기자@seoul.co.kr)

교육비도 늘어나는 만큼 교사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권영길 후보는 "비평준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평준화 해체인 만큼 대학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인제 후보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인정해서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분야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가장 치명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회창·정동영 후보는 차기 지도자의 도덕성을 강조했으며, 권영길 후보는 이견해 삼성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 후보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보육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장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

김성현기자 carlos@seoul.co.kr

중앙일보

2007년 12월 12일 수요일 005면 종합

‘BBK’ 단어 한번도 안 나와

2차 TV토론 표정

11일 2차 TV토론에선 ‘BBK’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6일 1차 토론회 때와는 판판이었다.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도 공격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주제(정치·외교·안보)를 벗어나 과격한 표현을 동원한 BBK 검찰수사 공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후보들이 판단한 듯하다. 정 후보는 이날 BBK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국민이 의환위기로 허덕일 때 주조작을 일으킨 짚은이(김경준씨)와 동업한 사람”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 “내 정책을 자세히 보지 않고 온 것 같다. 알면서도 (인부라) 오해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자신을 “부피했다”고 비난한 정동영 후보를 향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심하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후보의 발언 수위는 1차 토론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명박 후보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거짓과 진실의 린판 싸움”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지너 위장취업으로 수천만원을 탈세했다가 뒤늦게 납부했는데 서민들이 그랬다면 무사했겠느냐”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

총기 탈취범 여파

무장 특공대 배치

“위장취업, 위장전입, 탈세 경력을 가진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도 “5년간 나라가 망가졌는데 정권 핵심에 있던 사람은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양성 평등 실현과 관련, “손쉽게 아내 이름 부르기를 제안한다. 그래서 나는 수애(※부인인 박수애씨를 지칭)라고 부른다”며 여성 표심을 자극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002년 자신이 유령시킨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실업률이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다시 썼다. 정동영 후보의 대박입시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 “내 정책을 갖고 간 것까지는 좋는데 우리당의 주황색까지 가져간 건 심했다”고 말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부 장관의 5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토론 시작 15분 전 스튜디오 앞에서 사진기자들이 이명박·정동영 후보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손 잡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라고 농담했다. 악수를 한 채 포즈를 취한 이 후보는 몇 차례 플래시가 터지자 “이제 그만하자”고 손을 댔다.

총기 탈취범 여파 때문에 토론장 주변 경비도 강화됐다. MBC 경내에도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다. 6일 토론 때 지하 통로로 빠져나갔던 이명박 후보는 이날은 현관을 통해 나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방송국을 떠났다.

이가영·임정혁 기자

ideal@joongang.co.kr

대선후보 TV토론 / 전문가 평가

“여전히 시간 쫓겨 집중의 묘 살려야”

경향신문이 위촉한 '대선후보 TV 토론 평가단'은 지난 11일 치러진 2차 토론회에 대해 “1차 토론회에 비해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났지만 시간에 쫓기는 토론회 형식의 한계는 여전했다”고 12일 평가했다. 평가단은 3차 토론회에서는 주제를 끌어더라도 집중적인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주 풀컴 대표와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구체적인 정책 제시 노력이 두드러졌고 1차 토론에 비해 다양한 갈등구도가 형성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행정학)도 “정책적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토론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국대 김관규 교수(언론학)는 “1차 토론과 포맷의 변화가 없어 정견발표장이 왜버렸다”고 비판했고, 명지대 신을 교수(정치학)도 “표를 위한 정책만 양산했을 뿐 후보간 비교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표정이 전보다 훨씬 진지해졌다”(목교수), “정책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돋보였다”(윤대표)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공약을 쏟아내 집중의 묘가 부족했다”(한실장)는 지적도 있었다.

“표심 향해 정견발표 일관 후보자 비교평가 어려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는 “굉장히 여유를 보였다”(목교수) “앉는 자세를 고쳤고 감정 컨트롤을 잘했다”(신교수)는 평가였다. 윤대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철저한 성과·실적주의를 앞세웠지만 복잡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적·열정적이었지만 교육 정책 해법이 단선적이었다”(윤대표), “지지를 정체를 의식해서인지 조급함이 보였다”(목교수), “1차 토론에 비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한실장)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며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목교수),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교육문제 인식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윤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는데 ‘어떻게’가 없이 구체성이 떨어졌다”(신교수)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3차 토론회에 대해 “경제일반이 아니라 현안인 일자리 창출 또는 양극화 해소 같은 한 두가지 아이টে임을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중·이지선기자

朝鮮日報

2007년 12월 14일 금요일 A06면 종합

군소 후보 4인 첫 TV토론회 토론보다 얼굴 알리기 주력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한국사회당 금민, 새시대참사립연합 전관 등 군소 후보 4인이 13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KBS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주요 후보를 대상으로 앞서 2차례 실시된 TV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군소 후보들은 이날 조직과 자금의 열세로 언론 매체를 통해 얼굴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었던 만큼 상호 토론보다 개별 홍보에 주력했다.

과학기술처 장관 출신인 정근모 후보는 "우리나라는 부정적 정쟁에 얽매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미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자로서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국민의 두뇌를 이용해 미래로 나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공약으로 ▲소(小)상공인 은행 설립

▲대(大)사면령 및 전과기록 삭제 등을 내걸었다.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국가 예산을 절약해 60세 이상 노령층에게 매달 70만원의 건국수당을 지급하고 신혼부부에게 결혼수당 1억원, 출산

정근모 "대사면령, 전과기록 삭제"

허경영 "신혼 부부에게 1억 지급"

금민 "진보세력의 대안 될 것"

전관 "공직자 범죄 1년내 3심"

이수성 후보 시퇴... 토론회 불참

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허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정당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폈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운 금민 후보는 "지난 10년간 집권한 민주개혁세력과 민주노동당 등 낡은 진보

세력으로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국사회당이 새로운 진보세력의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했다. 금 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전관 후보는 "비틀어진 사회를 국민과 함께 살맛 나고 아름다운 정신 문화 국가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돼 국가 차원의 밑그림을 그려겠다"고 했다. 전 후보는 공직자 거짓말 및 부패 범죄에 대해 1년 이내에 3심 재판이 끝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후보에서 시퇴하면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수성 후보는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 선언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나 최종 결심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운 기자 codal@chosun.com

군소후보 TV 토론

지지율이 낮은 군소 대선 후보 4명이 13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TV토론을 벌였다. 정근모 참주인연합(68세·기호 7번), 허경영 경제공화당(60세·8번), 전관 새시대참사람연합(63세·9번), 금민 한국사회당(45세·10번) 후보다. KBS·MBC를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이들은 이름 알리기에 주력했다.

응용물리학자로 명지대 총장을 지낸 정근모 후보는 “국가 지도력 부재로 인한 현재의 위기상황은 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두뇌를 십분 활용하는 정책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대권 3수생’인 허경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엔본부의 관문집 유치, 결혼수당 1억원 지급 등 독특한 공약을 내놓았다.

육군 소장 출신의 전관 후보는 “흐트러지고 삐뚤어진 나라를 바로잡아 부강하고 살맛나게 만들겠다”며 “특히 정신문화의 중심국가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민 후보는 민주노동당과의 차별

정근모
“과학으로 위기 해결”

허경영
“결혼수당 1억 지급”

전관
“정신문화 중심 국가로”

금민
“낮은 진보 세 역할 못해”

화에 역점을 뒀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칭 민주개혁세력과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낮은 진보세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진보를 대표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수성 후보 사퇴, 정동영 후보 지원=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이수성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 측은 “사실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사퇴”라고 말했다.

이중찬 기자 jong@joongang.co.kr



한국야당 이명박 후보의 대동원인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열린 마포도MBC 앞에서 경찰들 사이며 두고 음향선을 먹고 있다. 송영석기자 slsone@kuk.com

상대 약점 비난엔 ‘넘치는 공격본능’ 경제 비전 제시엔 ‘부족한 현실감각’

황영식 논설위원이 본 3차 TV토론



16일 저녁에 열린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회는 12의 후보들은 나아갔지만 여전히 낯익은 얼굴을 남겼다. 토론이 끝난 후 후보들의 자세와 같이 있는 토론을 제작하는 토론형식이 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내릴 있는 TV토론회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토론회가 관심을 끈 것은 대선 3일 전이라는 중요한 때에 이뤄진 마지막 토론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쟁점과 사안 문제, 일자리 문제, 연금 문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과 비전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앞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삼가고,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사회자의 사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막상 토론이 시작되자 각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과 비난에 빠진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공격 본능’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이명박 동영상’과 관련, ‘BBK

의혹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거론됐다. ‘정부대운하’ 구상도 자주 공격을 받았다. 이어 못지않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공과에 대한 대동원인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인식도 수시로 노골적 비난을 받았다. 경제 사외 정책은 논하면 서로 후보들의 감각은 정치적 효과에 민감하게 돌아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절반 이후에는 각 후보들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정책을 차곡차곡

지리라는 전망은 비교적 분명해졌다. 아마도 이것이 3차 TV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방법론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부분적으로 제시된 내용의 현실적합성을 판단하기에도 이르지만 적어도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는 한 현재보다 높은 경제성장 목표가 설정되고, 일자리 창출에 정치의량이 집중되고, 비정규직법이 일부 손실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 과세가 가뒀어지는 것 등이다.

후보들의 입을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 실현 방법론을 들어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국민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정책의 당락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총체적 행동을 좌우할 대통령이다. 대통령 후보는 대공의 기본 골격만 보여주고 나머지 살과 피와 근육은 각 분야의 전문 담당자가 채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세부 방법론까지 가진 대통령의 귀는 닫아놓기 쉬우며, 여러 사안의 지혜로 된 곳을 채우려는 열린 귀를 가진

짧은 발언시간 ‘BBK 동영상’ 등 공방에 한해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공통점 확인은 성과

로 피어라하고 애썼다. 그러나 1분, 1분5초, 2분 등 짧은 시간에 충실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구체적 수치도 나오고, 자신의 공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멋진 수사도 잇따라 등장하고, 후보들의 표정도 진지하고 확신이 넘쳤지만 좀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주요 후보들의 발언이 포장은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비슷한 것들이 많았고, 이를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 최소한 몇 가지 정책노선의 구채의 전황이 이뤄

졌만 못하다.

마지막 토론회가 아쉬움을 남긴 것도 구체적 내용의 부족보다는 기본적인 뼈대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 해법을 가늠할 수 있다. 중요한 논점이므로 누구나 비슷하고 뻔한 답이 예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지열한 논점이 예상되는 논점에 토론을 집중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나 대안 제시도 등이 더 표현된 예이다. 이런 집중토론을 통해 서로 비호소 후보들의 시각적 이미지나 발음차와는 무관한 기본인식의 차 별성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런 확인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를 고를 수 있을 때 유권자 각자가 후보의 인식을 잘 정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의사의 진정한 표출이 이를 수 있다.

이번 정경 집중형 TV토론회는 현지의 방식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다. 가령 군소후보들의 양면 같은 역할이 자칫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토론에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와 반박이라는 토론회의 본질적 기능과는 동떨어진다. 국민 세금을 들인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도 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제미는 알아듣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맛보면 된다. 3회의 토론회가 ‘1강2약’이 걸려 가는 ‘열정 토론회’로 이뤄졌다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서 허발한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shwang@kuk.com



16일 오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주변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이만제 후보 지지자들이 경찰들 사이에 두고 열띤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 “R&D예산 GDP의 5% 되게”

鄭 “문화 콘텐츠 일자리 늘릴것”

曁 “기초과학 예산 현재 두배로”

■ 과학-노인복지 정책 대결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이명박 후보는 “기술 융합으로 미래 신산업을 만들고 연구개발(R&D) 예산을 GDP의 5%로 늘리겠다. 과학자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 공대 학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대통령이 첨단형 이어야 하는데 운하 파는 일에 골몰하면 나라가 과거로 간다”고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뒤 “에너지이전 등 문화 콘텐츠 일자리를 쏟아지게 하

겠다”고 다짐했다.

이회창 후보는 “R&D 예산을 GDP 대비 5~6%까지 늘리고 기초과학 예산을 과학기술 예산의 25%에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대대연구개발 복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 세계적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권영길 후보는 “2020년까지 전력 소비의 20%를 재생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제 후보는 “과학자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은 정부가 학비를 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 복지정책=이명박 후보는 “고령화 시대에 질병, 가난, 외로움으로부터 노인들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일자리와 건강, 연금 해결이 노인정책의 핵심”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을 임기 내에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장기 요양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국현 후보는 “14년 동안 노인의 날 제정과 경로연금, 어르신 일자리, 휴대전화 교육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권영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3배로 늘리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며 업종별 정년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제 후보는 “중풍,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인이 외롭지 않게 전환형 농촌을 만들어 함께 모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tso@donga.com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5. 30(수) 오전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3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30초	10:00:00	VIR	S/T F.S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출연자 소개	1분 30초	10:00:30	MC	
		- MC 의제선정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1분 30초	10:02:00	CG	
3	사회자 공동질문	<토론주제 :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 사회자 Bridge ① 장영달(1분)답변 ② 김효석(1분)답변 ③ 정진석(1분)답변 ④ 천영세(1분)답변 ⑤ 김형오(1분)답변 ⑥ 최용규(1분)답변	7분	10:03:30	S/T	
4	사회자 공동질문 (그룹)후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1분) - 토론자 답변(1분) ① 장영달(1분)답변 ② 김효석(1분)답변	3분	10:10:30	S/T	
		☞ 사회자 Bridge ① 장영달 질문 ⇔ 김효석 답변(총 6분) ② 김효석 질문 ⇔ 장영달 답변(총 6분)	12분	10:13:30		
		- 사회자 질문(1분) - 토론자 답변(1분) ① 정진석(1분)답변 ② 천영세(1분)답변	3분	10:25:30		
		① 정진석 질문 ⇔ 천영세 답변(총 6분) ② 천영세 질문 ⇔ 정진석 답변(총 6분)	12분	10:28:30		
		- 사회자 질문(1분) - 토론자 답변(1분) ① 김형오(1분)답변 ② 최용규(1분)답변	3분	10:40:30		
		① 김형오 질문 ⇔ 최용규 답변(총 6분) ② 최용규 질문 ⇔ 김형오 답변(총 6분)	12분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 상	비 고
5	사회자 개별질문후 토론시간	<토론주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 ☞ 사회자 Bridge ① 사회자 질문(30초) ⇒ 김효석 답변(1분) ② 정진석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보충답변(1분) ③ 천영세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보충답변(1분) ④ 김형오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보충답변(1분) ⑤ 최용규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보충답변(1분) ⑥ 장영달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보충답변(1분)	9분	10:55:30	S/T	
		①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 답변(1분) ② 천영세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③ 김형오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④ 최용규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⑤ 장영달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⑥ 김효석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보충답변(1분)	9분	11:04:30	S/T	
		① 사회자 질문(30초) ⇒ 천영세 답변(1분) ② 김형오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③ 최용규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④ 장영달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⑤ 김효석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⑥ 정진석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보충답변(1분)	9분	11:13:30		
		① 사회자 질문(30초) ⇒ 김형오 답변(1분) ② 최용규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보충답변(1분) ③ 장영달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보충답변(1분) ④ 김효석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보충답변(1분) ⑤ 정진석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보충답변(1분) ⑥ 천영세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보충답변(1분)	9분	11:22:30		
		① 사회자 질문(30초) ⇒ 최용규 답변(1분) ② 장영달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보충답변(1분)	9분	11:31:3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5	사회자 개별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③ 김효석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보충답변(1분) ④ 정진석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보충답변(1분) ⑤ 천영세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보충답변(1분) ⑥ 김형오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보충답변(1분)	9분	11:31:30	S/T	
		① 사회자 질문(30초) ⇒ 장영달 답변(1분) ② 김효석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보충답변(1분) ③ 정진석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보충답변(1분) ④ 천영세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보충답변(1분) ⑤ 김형오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보충답변(1분) ⑥ 최용규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보충답변(1분)	9분	11:40:30		
		※ 예비질문(남은 시간 적정 배분)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 - 토론자 답변() 정진석 → 천영세 → 김형오 → 최용규 → 장영달 → 김효석	-	-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정진석 맺음말(1분) ② 천영세 맺음말(1분) ③ 김형오 맺음말(1분) ④ 최용규 맺음말(1분) ⑤ 장영달 맺음말(1분) ⑥ 김효석 맺음말(1분) ※ 예비질문을 활용한 경우 천영세 → 김형오 → 최용규 → 장영달 → 김효석 → 정진석	6분	11:49:30	S/T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제작진 소개(자막)	1분 30초	11:55:30	S/T F.S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0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8. 3(금) 23:40~ 8. 4(토) 01:4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30초		VTR	
2	CM		??분		VTR	
3	오프닝	- MC 오프닝 및 출연자 소개	1분	23:40:00	MC	
4	의제선정 등 설명	- MC 의제선정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1분 20초	23:41:00	CG	
5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강재섭 기조연설(1분) ② 문성현 기조연설(1분) ③ 박상천 기조연설(1분) ④ 심대평 기조연설(1분) ⑤ 정세균 기조연설(1분)	5분 30초	23:42:20	S/T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 ☞ 사회자 Bridge ① 문성현 답변(1분) ② 박상천 답변(1분) ③ 심대평 답변(1분) ④ 정세균 답변(1분) ⑤ 강재섭 답변(1분)	6분	23:47:50	S/T	
7	사회자 공통질문 (그룹)후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① 문성현 답변(1분) ② 심대평 답변(1분)	2분 50초	23:53:50	S/T	
		☞ 사회자 Bridge 문성현 질문 ⇔ 심대평 답변(총 4분) 심대평 질문 ⇔ 문성현 답변(총 4분)	8분 50초	23:56:40		
		☞ 사회자 Bridge ① 박상천 답변(1분) ② 정세균 답변(1분)	2분 50초	00:05:3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7	사회자 공통질문 (그룹)후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박상천 질문 ⇔ 정세균 답변(총 4분) 정세균 질문 ⇔ 박상천 답변(총 4분)	8분 30초	00:08:20	S/T	
		☞ 사회자 Bridge ① 심대평 답변(1분) ② 강재섭 답변(1분)	2분 50초	00:16:50		
		☞ 사회자 Bridge -심대평 질문 ⇔ 강재섭 답변(총 4분) -강재섭 질문 ⇔ 심대평 답변(총 4분)	8분 30초	00:19:40		
		☞ 사회자 Bridge ① 정세균 답변(1분) ② 문성현 답변(1분)	2분 50초	00:28:10		
		☞ 사회자 Bridge 정세균 질문 ⇔ 문성현 답변(총 4분) 문성현 질문 ⇔ 정세균 답변(총 4분)	8분 30초	00:31:00		
		☞ 사회자 Bridge ① 강재섭 답변(1분) ② 박상천 답변(1분)	2분 50초	00:39:30		
		☞ 사회자 Bridge -강재섭 질문 ⇔ 박상천 답변(총 4분) -박상천 질문 ⇔ 강재섭 답변(총 4분)	8분 30초	00:42:20		
8	사회자 공통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토론주제 : 정부조직과 운영방안> ☞ 사회자 Bridge ① 박상천 답변(1분30초) ② 심대평 답변(1분30초) ③ 정세균 답변(1분30초) ④ 강재섭 답변(1분30초) ⑤ 문성현 답변(1분30초)	8분 40초	00:50:50	S/T	
		☞ 사회자 Bridge 문성현 보충질문(1분) ⇒ 박상천 보충답변(1분30초)	5분 50초	00:59:30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8	사회자 공동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박상천 보충질문(1분) ⇒ 심대평 보충답변(1분30초) 정세균 보충질문(1분) ⇒ 심대평 보충답변(1분30초)	5분 50초	01:05:20	S/T	
		☞ 사회자 Bridge 심대평 보충질문(1분) ⇒ 정세균 보충답변(1분30초) 강재섭 보충질문(1분) ⇒ 정세균 보충답변(1분30초)	5분 50초	01:11:10		
		☞ 사회자 Bridge 정세균 보충질문(1분) ⇒ 강재섭 보충답변(1분30초) 문성현 보충질문(1분) ⇒ 강재섭 보충답변(1분30초)	5분 50초	01:17:00		
		☞ 사회자 Bridge 강재섭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30초) 박상천 보충질문(1분) ⇒ 문성현 보충답변(1분30초)	5분 50초	01:22:50		
		※ 예비질문(남은 시간 적정 배분)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 - 토론자 답변() 심대평 → 정세균 → 강재섭 → 문성현 → 박상천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토론자 맺음말(각2분) ①심대평 ②정세균 ③강재섭 ④문성현 ⑤ 박상천 ※ 예비질문을 활용한 경우 정세균 → 강재섭 → 문성현 → 박상천 → 심대평	10분 40초	01:28:40	S/T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40초	01:39:20	S/T F.S	
11	CM		??분	01:40:00	VTR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VTR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9. 21(금)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3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30초	10:00:00	VI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출연자 소개	1분 30초	10:00:30	MC	
3	의제선정 등 설명	- MC 의제선정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초	10:02:00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김진표 기조연설(1분) ② 김낙성 기조연설(1분) ③ 이상열 기조연설(1분) ④ 이한구 기조연설(1분) ⑤ 이용대 기조연설(1분)	5분 30초	10:03:10	S/T	
5	LOGO	<토론주제 :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	10초	10:08:40	지미 집 스윙	B.G. M 生
6	사회자 개별질문 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김낙성 답변(1분30초)	2분 20초	10:08:50	S/T	
		☞ 사회자 Bridge ① 이상열 반론(1분) ② 이한구 반론(1분) ③ 이용대 반론(1분) ④ 김진표 반론(1분) ⑤ 김낙성 재반론(2분)	7분	10:11:10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이상열 답변(1분30초)	2분 20초	10:18:10		
		☞ 사회자 Bridge ① 이한구 반론(1분) ② 이용대 반론(1분) ③ 김진표 반론(1분) ④ 김낙성 반론(1분) ⑤ 이상열 재반론(2분)	7분	10:20:30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이한구 답변(1분30초)	2분 20초	10:27:30		

번 이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6	사회자 개별질문 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① 이용대 반론(1분) ② 김진표 반론(1분) ③ 김낙성 반론(1분) ④ 이상열 반론(1분) ⑤ 이한구 재반론(2분)	7분	10:29:50	S/T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이용대 답변(1분30초)	2분 20초	10:36:50		
		☞ 사회자 Bridge ① 김진표 반론(1분) ② 김낙성 반론(1분) ③ 이상열 반론(1분) ④ 이한구 반론(1분) ⑤ 이용대 재반론(2분)	7분	10:39:10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김진표 답변(1분30초)	2분 20초	10:46:10		
		☞ 사회자 Bridge ① 김낙성 반론(1분) ② 이상열 반론(1분) ③ 이한구 반론(1분) ④ 이용대 반론(1분) ⑤ 김진표 재반론(2분)	7분	10:48:30		
7	토론자 자유지정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이상열 자유지정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답변(1분30초) ⇒ 이상열 반론(1분30초)	5분 20초	10:55:30	S/T	
		☞ 사회자 Bridge 이한구 자유지정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답변(1분30초) ⇒ 이한구 반론(1분30초)	5분 10초	11:00:50		
		☞ 사회자 Bridge 이용대 자유지정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답변(1분30초) ⇒이용대 반론(1분30초)	5분 10초	11:06:0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7	토론자 자유지정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김진표 자유지정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답변(1분30초) ⇒ 김진표 반론(1분30초)	5분 10초	11:11:10	S/T	
		☞ 사회자 Bridge 김낙성 자유지정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답변(1분30초) ⇒ 김낙성 토론자 반론(1분30초)	5분 10초	11:16:20		
8	LOGO	<토론주제 :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	10초	11:21:30	S/T J.J	B.G. M 生
9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자 답변	☞ 사회자 Bridge ① 이한구 답변(1분30초) ② 이용대 답변(1분30초) ③ 김진표 답변(1분30초) ④ 김낙성 답변(1분30초) ⑤ 이상열 답변(1분30초)	9분 10초	11:21:40	S/T	
		☞ 사회자 Bridge ① 이용대 답변(1분30초) ② 김진표 답변(1분30초) ③ 김낙성 답변(1분30초) ④ 이상열 답변(1분30초) ⑤ 이한구 답변(1분30초)	9분	11:30:50		
		☞ 사회자 Bridge ① 김진표 답변(1분30초) ② 김낙성 답변(1분30초) ③ 이상열 답변(1분30초) ④ 이한구 답변(1분30초) ⑤ 이용대 답변(1분30초)	9분	11:39:50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이용대 맺음말 ② 김진표 맺음말 ③ 김낙성 맺음말 ④ 이상열 맺음말 ⑤ 이한구 맺음말(각 1분30초)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40초	11:48:50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40초	11:57:30	S/T F.S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8:10	VIR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10. 25(목)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30초		VTR	
2	CM		??분		VTR	
3	오프닝	- MC 오프닝 및 출연자 소개	1분 30초	10:00:00	MC	
4	의제선정 등 설명	- MC 의제선정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 규칙)	1분 10초	10:01:30	S/T	
5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김효석 기조연설(1분) ② 천영세 기조연설(1분) ③ 정진석 기조연설(1분) ④ 최인기 기조연설(1분) ⑤ 안상수 기조연설(1분)	5분 30초	10:02:40	S/T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사회자 Bridge ① 천영세 답변(1분30초) ② 정진석 답변(1분30초) ③ 최인기 답변(1분30초) ④ 안상수 답변(1분30초) ⑤ 안상수 답변(1분30초)	8분 20초	10:08:1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천영세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 천영세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4분 50초	10:16:30	S/T	
		☞ 사회자 Bridge 천영세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 천영세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4분 50초	10:21:20		
		☞ 사회자 Bridge 정진석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 정진석 반론(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4분 50초	10:26:10		

번호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고
7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정진석 반론(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 정진석 반론(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4분 50초	10:31:00	S/T	
		☞ 사회자 Bridge 최인기 반론(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 최인기 반론(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4분 50초	10:35:50		
		☞ 사회자 Bridge 최인기 반론(1분) → 김효석 재반론(1분) → 최인기 반론(1분) → 김효석 재반론(1분)	4분 50초	10:40:40		
		☞ 사회자 Bridge 안상수 반론(1분) → 김효석 재반론(1분) → 안상수 반론(1분) → 김효석 재반론(1분)	4분 50초	10:45:30		
		☞ 사회자 Bridge 김효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 → 김효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	4분 50초	10:50:20		
		☞ 사회자 Bridge 김효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 → 김효석 반론(1분) → 천영세 재반론(1분)	4분 50초	10:55:10		
		☞ 사회자 Bridge 김효석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 김효석 반론(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4분 50초	11:00:00		
8	토론자 자유지정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정진석 자유지정 반론(1분30초) → 지정토론자 재반론(1분30초)	3분 40초	11:04:50	S/T	
		☞ 사회자 Bridge 최인기 자유지정 반론(1분30초) → 지정토론자 재반론(1분30초)	3분 30초	11:08:30		
		☞ 사회자 Bridge 안상수 자유지정 반론(1분30초) → 지정토론자 재반론(1분30초)	3분 30초	11:12:0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8	토론자	☞ 사회자 Bridge 김효석 자유지정 반론(1분30초) → 지정토론자 재반론(1분30초)	3분 30초	11:15:30	S/T	
	자유지정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천영세 자유지정 반론(1분30초) → 지정토론자 재반론(1분30초)	3분 30초	11:19:00		
9	사회자 공동질문	<토론주제 :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 ☞ 사회자 Bridge ① 최인기 답변(1분30초) ② 안상수 답변(1분30초) ③ 김효석 답변(1분30초) ④ 천영세 답변(1분30초) ⑤ 정진석 답변(1분30초)	9분 10초	11:22:30		
		☞ 사회자 Bridge ① 안상수 답변(1분30초) ② 김효석 답변(1분30초) ③ 천영세 답변(1분30초) ④ 정진석 답변(1분30초) ⑤ 최인기 답변(1분30초)	9분	11:31:40		
		☞ 사회자 Bridge ① 김효석 답변(1분30초) ② 천영세 답변(1분30초) ③ 정진석 답변(1분30초) ④ 최인기 답변(1분30초) ⑤ 안상수 답변(1분30초)	9분	11:40:40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천영세 맺음말(1분30초) ② 정진석 맺음말(1분30초) ③ 최인기 맺음말(1분30초) ④ 안상수 맺음말(1분30초) ⑤ 김효석 맺음말(1분30초)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10초	11:49:40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40초	11:57:50	S/T F.S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8:30	VTR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11. 2(금) 23:40 ~ 25:40 (120분간)

○ 장소 : KBS TS-3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출연자 소개	1분	23:40:00	MC	
3	의제선정 등 설명	- MC 의제선정과정 및 토론규칙 설명	1분	23:42:00	CG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노회찬 기조연설(1분) ② 김근태 기조연설(1분) ③ 정진석 기조연설(1분) ④ 안상수 기조연설(1분) ⑤ 최인기 기조연설(1분)	5분 30초	23:43:00	S/T	
5	사회자 개별질문 토론자간 상호토론	<주제 :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진행방식 설명 및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김근태 답변(1분)	2분 30초	23:48:30	S/T	
		☞ 사회자 Bridge 정진석 / 안상수 반론(각1분30초) → 김근태 재반론(1분30초) 정진석/안상수 반론(각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8분 20초	23:51:00		
		☞ 사회자 Bridge 최인기 / 노회찬 반론(각1분30초) → 김근태 재반론(1분30초) 최인기 / 노회찬 반론(각1분) → 김근태 재반론(1분)	8분 20초	23:59:20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 답변(1분30초)	2분	00:07:40		
		☞ 사회자 Bridge 안상수 / 최인기 반론(각1분30초)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안상수 / 최인기 반론(각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8분 20초	00:09:40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5	사회자 개별질문 토론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노회찬 / 김근태 반론(각1분30초) → 정진석 재반론(1분30초) 노회찬 / 김근태 반론(각1분) → 정진석 재반론(1분)	8분 20초	00:18:00	S/T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안상수 답변(1분)	2분	00:26:20		
		☞ 사회자 Bridge 최인기 / 노회찬 반론(각1분30초) → 안상수 재반론(1분30초) 최인기 / 노회찬 반론(각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8분 20초	00:28:20		
		☞ 사회자 Bridge 김근태 / 정진석 반론(각1분30초) → 안상수 재반론(1분30초) 김근태 / 정진석 반론(각1분) → 안상수 재반론(1분)	8분 20초	00:36:40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최인기 답변(1분)	2분	00:45:00		
		☞ 사회자 Bridge 노회찬 / 김근태 반론(각1분30초) → 최인기 재반론(1분30초) 노회찬 / 김근태 반론(각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8분 20초	00:47:00		
		☞ 사회자 Bridge 정진석 / 안상수 반론(각1분30초) → 최인기 재반론(1분30초) 정진석 / 안상수 반론(각1분) → 최인기 재반론(1분)	8분 20초	00:55:20		
		☞ 사회자 Bridge -사회자 질문(30초) - A 토론자 답변(1분)	1분 50초	01:03:40		
		☞ 사회자 Bridge 김근태 / 정진석 반론(각1분30초) → 노회찬 재반론(1분30초) 김근태 / 정진석 반론(각1분) → 노회찬 재반론(1분)	8분 20초	01:05:30		
		☞ 사회자 Bridge 안상수 / 최인기 반론(각1분30초) → 노회찬 재반론(1분30초) 안상수 / 최인기 반론(각1분) → 노회찬 재반론(1분)	8분 20초	01:13:5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6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Bridge ① 정진석 답변(2분) ② 안상수 답변(2분) ③ 최인기 답변(2분) ④ 노회찬 답변(2분) ⑤ 김근태 답변(2분)	11분 10초	01:22:10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안상수 맺음말(1분) ② 최인기 맺음말(1분) ③ 노회찬 맺음말(1분) ④ 김근태 맺음말(1분) ⑤ 정진석 맺음말(1분)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20초	01:33:20	S/T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40초	01:38:40	S/T F.S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01:39:20	VTR	

제1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7. 12. 6(목) 20:00 ~ 2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 40초	20:00:00	MC /CG	
3	진행방식 등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분 30초	20:01:40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이인제 기조연설(2분) ② 문국현 기조연설(2분) ③ 권영길 기조연설(2분) ④ 이회창 기조연설(2분) ⑤ 이명박 기조연설(2분) ⑥ 정동영 기조연설(2분)	12분 50초	20:03:10	S/T	
5	의제선정 과정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설명 (여론조사 결과 등)	1분	20:16:00	MC /CG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 사회자 Bridge ① 문국현 답변(1분30초) ② 권영길 답변(1분30초) ③ 이회창 답변(1분30초) ④ 이명박 답변(1분30초) ⑤ 정동영 답변(1분30초) ⑥ 이인제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0:17:00	S/T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토론주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 사회자 Bridge 권영길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회창 반론(1분) ② 이명박 반론(1분) ③ 정동영 반론(1분) ④ 이인제 반론(1분) ⑤ 문국현 반론(1분) ⑥ 권영길 재반론(2분)	9분 40초	20:27:20	S/T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 이회창 모두발언(1분30초) - 이명박 반론(각1분) - 이회창 재반론(2분)	9분 10초	20:37:00		
		☞ 사회자 Bridge - 이명박 모두발언(1분30초) ① 정동영 반론(1분) ② 이인제 반론(1분) ③ 문국현 반론(1분) ④ 권영길 반론(1분) ⑤ 이회창 반론(1분) ⑥ 이명박 재반론(2분)	9분 10초	20:46:10		
		☞ 사회자 Bridge - 정동영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인제 반론(1분) ② 문국현 반론(1분) ③ 권영길 반론(1분) ④ 이회창 반론(1분) ⑤ 이명박 반론(1분) ⑥ 정동영 재반론(2분)	9분 10초	20:55:20		
		☞ 사회자 Bridge - 이인제 모두발언(1분30초) ① 문국현 반론(1분) ② 권영길 반론(1분) ③ 이회창 반론(1분) ④ 이명박 반론(1분) ⑤ 정동영 반론(1분) ⑥ 이인제 재반론(2분)	9분 10초	21:04:30		
		☞ 사회자 Bridge - 문국현 후보자 모두발언(1분30초) ① 권영길 반론(1분) ② 이회창 반론(1분) ③ 이명박 반론(1분) ④ 정동영 반론(1분) ⑤ 이인제 반론(1분) ⑥ 문국현 재반론(2분)	9분 20초	21:13:40		
8	UCC 동영상 질문	☞ 사회자 Bridge - UCC동영상질문(30초) ① 이회창 답변(1분30초) ② 이명박 답변(1분30초) ③ 정동영 답변(1분30초) ④ 이인제 답변(1분30초) ⑤ 문국현 답변(1분30초) ⑥ 이인제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1:23:00	CG/ ST	

번호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고
9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Bridge ① 이명박 답변(1분30초) ② 정동영 답변(1분30초) ③ 이인제 답변(1분30초) ④ 문국현 답변(1분30초) ⑤ 권영길 답변(1분30초) ⑥ 이회창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1:33:20	S/T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정동영 맺음말(1분30초) ② 이인제 맺음말(1분30초) ③ 문국현 맺음말(1분30초) ④ 권영길 맺음말(1분30초) ⑤ 이회창 맺음말(1분30초) ⑥ 이명박 맺음말(1분30초)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9분 50초	21:43:40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21:53:30	S/T F.S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4:30	VTR	

제2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7. 12. 11(화) 20:00 ~ 22:0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 30초	20:00:00	MC /CG	
3	진행방식 등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분 20초	20:01:30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문국현 기조연설(1분) ② 정동영 기조연설(1분) ③ 이명박 기조연설(1분) ④ 이인제 기조연설(1분) ⑤ 권영길 기조연설(1분) ⑥ 이회창 기조연설(1분)	6분 40초	20:02:50	S/T	
5	의제선정 과정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설명 (여론조사 결과 등)	1분 20초	20:09:30	MC /CG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양성평등 실현방안> ☞ 사회자 Bridge ① 정동영 답변(1분30초) ② 이명박 답변(1분30초) ③ 이인제 답변(1분30초) ④ 권영길 답변(1분30초) ⑤ 이회창 답변(1분30초) ⑥ 문국현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0:10:50	S/T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토론주제 :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 사회자 Bridge - 이명박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인제 반론(1분) ② 권영길 반론(1분) ③ 이회창 반론(1분) ④ 문국현 반론(1분) ⑤ 정동영 반론(1분) ⑥ 이명박 재반론(2분)	9분 40초	20:21:10	S/T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 이인제 모두발언(1분30초) ① 권영길 반론(1분) ② 이회창 반론(1분) ③ 문국현 반론(1분) ④ 정동영 반론(1분) ⑤ 이명박 반론(1분) ⑥ 이인제 재반론(2분)	9분 10초	20:30:50		
		☞ 사회자 Bridge - 권영길 후보자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회창 반론(1분) ② 문국현 반론(1분) ③ 정동영 반론(1분) ④ 이명박 반론(1분) ⑤ 이인제 반론(1분) ⑥ 권영길 재반론(2분)	9분 10초	20:40:00		
		☞ 사회자 Bridge - 이회창 모두발언(1분30초) ① 문국현 반론(1분) ② 정동영 반론(1분) ③ 이명박 반론(1분) ④ 이인제 반론(1분) ⑤ 권영길 반론(1분) ⑥ 이회창 재반론(2분)	9분 10초	20:49:10		
		☞ 사회자 Bridge - 문국현 모두발언(1분30초) ① 정동영 반론(1분) ② 이명박 반론(1분) ③ 이인제 반론(1분) ④ 권영길 반론(1분) ⑤ 이회창 반론(1분) ⑥ 문국현 재반론(2분)	9분 10초	20:58:20		
		☞ 사회자 Bridge - 정동영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명박 반론(1분) ② 이인제 반론(1분) ③ 권영길 반론(1분) ④ 이회창 반론(1분) ⑤ 문국현 반론(1분) ⑥ 정동영 재반론(2분)	9분 20초	21:07:30		
8	UCC 동영상 질문	☞ 사회자 Bridge - UCC동영상질문(30초) ① 이인제 답변(1분30초) ② 권영길 답변(1분30초) ③ 이회창 답변(1분30초) ④ 문국현 답변(1분30초) ⑤ 정동영 답변(1분30초) ⑥ 이명박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1:16:50	CG/ ST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9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 ☞ 사회자 Bridge ① 권영길 답변(1분30초) ② 이회창 답변(1분30초) ③ 문국현 답변(1분30초) ④ 정동영 답변(1분30초) ⑤ 이명박 답변(1분30초) ⑥ 이인제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1:27:10	S/T	
10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 사회자 Bridge ① 이회창 답변(1분30초) ② 문국현 답변(1분30초) ③ 정동영 답변(1분30초) ④ 이명박 답변(1분30초) ⑤ 이인제 답변(1분30초) ⑥ 권영길 답변(1분30초)	10분 20초	21:37:30	S/T	
11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문국현 맺음말(1분) ② 정동영 맺음말(1분) ③ 이명박 맺음말(1분) ④ 이인제 맺음말(1분) ⑤ 권영길 맺음말(1분) ⑥ 이회창 맺음말(1분)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40초	21:47:50	S/T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21:54:30	S/T F.S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5:30	VTR	

비조정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7. 12. 13(목) 23:00 ~ 12. 14(금) 01:00(120분간) ○ 장소 : KBS TS-2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 20초	23:00:00	MC /CG	
3	진행방식 등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분 30초	23:01:20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전 관 기조연설(1분30초) ② 허경영 기조연설(1분30초) ③ 정근모 기조연설(1분30초) ④ 금 민 기조연설(1분30초)	6분 40초	23:02:50	S/T	
5	의제선정 과정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설명 (여론조사 결과 등)	30초	23:09:30	MC /CG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사회자 Bridge ① 허경영 답변(1분30초) ② 정근모 답변(1분30초) ③ 금 민 답변(1분30초) ④ 전 관 답변(1분30초)	7분 20초	23:10:00	S/T	
		☞ 사회자 Bridge ① 정근모 답변(1분) ② 금 민 답변(1분) ③ 전 관 답변(1분) ④ 허경영 답변(1분)	5분	23:17:20		
7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복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 사회자 Bridge ① 금 민 답변(1분30초) ② 전 관 답변(1분30초) ③ 허경영 답변(1분30초) ④ 정근모 답변(1분30초)	7분 20초	23:22:20	S/T	

번 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7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Bridge ① 전 관 답변(1분) ② 허경영 답변(1분) ③ 정근모 답변(1분) ④ 금 민 답변(1분)	5분	23:29:40	S/T	
8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 사회자 Bridge ① 허경영 답변(1분30초) ② 정근모 답변(1분30초) ③ 금 민 답변(1분30초) ④ 전 관 답변(1분30초)	7분 20초	23:34:40		
		☞ 사회자 Bridge ① 정근모 답변(1분) ② 금 민 답변(1분) ③ 전 관 답변(1분) ④ 허경영 답변(1분)	5분	23:42:00		
9	UCC 동영상 질문	☞ 사회자 Bridge - UCC동영상질문(30초) ① 금 민 답변(1분30초) ② 전 관 답변(1분30초) ③ 허경영 답변(1분30초) ④ 정근모 답변(1분30초)	7분 20초	23:47:00	CG/ S/T	
10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절감> ☞ 사회자 Bridge ① 전 관답변(1분30초) ② 허경영 답변(1분30초) ③ 정근모 답변(1분30초) ④ 금 민 답변(1분30초)	7분 20초	23:54:20	S/T	
		☞ 사회자 Bridge ① 허경영 답변(1분) ② 정근모 답변(1분) ③ 금 민 답변(1분) ④ 전 관 답변(1분)	5분	00:01:40		
11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사회자 Bridge ① 정근모 답변(1분30초) ② 금 민 답변(1분30초) ③ 전 관 답변(1분30초) ④ 허경영 답변(1분30초)	7분 20초	00:06:40		
		☞ 사회자 Bridge ① 금 민 답변(1분) ② 전 관 답변(1분) ③ 허경영 답변(1분) ④ 정근모 답변(1분)	5분	00:14:00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2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 ☞ 사회자 Bridge ① 전 관 답변(1분30초) ② 허경영 답변(1분30초) ③ 정근모 답변(1분30초) ④ 금 민 답변(1분30초)	7분 20초	00:19:00	S/T	
		☞ 사회자 Bridge ① 허경영 답변(1분) ② 정근모 답변(1분) ③ 금 민 답변(1분) ④ 전 관 답변(1분)	5분	00:26:20		
13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세계화시 대의 문화정책,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 사회자 Bridge ① 정근모 답변(2분) ② 금 민 답변(2분) ③ 전 관 답변(2분) ④ 허경영 답변(2분)	9분 30초	00:31:20	S/T	
		<토론주제:양성평등 실현방안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 ☞ 사회자 Bridge ① 금 민 답변(1분30초) ② 전 관 답변(1분30초) ③ 허경영 답변(1분30초) ④ 정근모 답변(1분30초)	7분 20초	00:40:50		
14	맺음말	☞ 사회자 Bridge ① 전 관 맺음말(1분30초) ② 허경영 맺음말(1분30초) ③ 정근모 맺음말(1분30초) ④ 금 민 맺음말(1분30초)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0초	00:48:10	S/T	
15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40초	00:55:00	S/T	
16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00:55:40	VTR	

제3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7. 12. 16(일) 20:00~ 22:0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 20초	20:00:00	MC /CG	
3	진행방식 등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분 10초	20:01:20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① 이명박 기조연설(1분) ② 이인제 기조연설(1분) ③ 이회창 기조연설(1분) ④ 정동영 기조연설(1분) ⑤ 권영길 기조연설(1분) ⑥ 문국현 기조연설(1분)	6분 40초	20:02:30	S/T	
5	의제선정 과정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설명 (여론조사 결과 등)	1분	20:09:10	MC /CG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 사회자 Bridge ① 이인제 답변(1분30초) ② 이회창 답변(1분30초) ③ 정동영 답변(1분30초) ④ 권영길 답변(1분30초) ⑤ 문국현 답변(1분30초) ⑥ 이명박 답변(1분30초)	10분 30초	20:10:10	S/T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토론주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사회자 Bridge - 이회창 모두발언(1분30초) ① 정동영 반론(1분) ② 권영길 반론(1분) ③ 문국현 반론(1분) ④ 이명박 반론(1분) ⑤ 이인제 반론(1분) ⑥ 이회창 재반론(2분)	10분	20:20:40	S/T	

번호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고
7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간 상호토론	☞ 사회자 Bridge - 정동영 모두발언(1분30초) ① 권영길 반론(1분) ② 문국현 반론(1분) ③ 이명박 반론(1분) ④ 이인제 반론(1분) ⑤ 이회창 반론(1분) ⑥ 정동영 재반론(2분)	9분 10초	20:30:40	S/T	
		☞ 사회자 Bridge - 권영길 모두발언(1분30초) ① 문국현 반론(1분) ② 권영길 반론(1분) ③ 문국현 반론(1분) ④ 이명박 반론(1분) ⑤ 이인제 반론(1분) ⑥ 이회창 재반론(2분)	9분 10초	20:39:50		
		☞ 사회자 Bridge - 문국현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명박 반론(1분) ② 이인제 반론(1분) ③ 이회창 반론(1분) ④ 정동영 반론(1분) ⑤ 권영길 반론(1분) ⑥ 문국현 재반론(2분)	9분 10초	20:49:00		
		☞ 사회자 Bridge - 이명박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인제 반론(1분) ② 이회창 반론(1분) ③ 정동영 반론(1분) ④ 권영길 반론(1분) ⑤ 문국현 반론(1분) ⑥ 이명박 재반론(2분)	9분 10초	20:58:10		
		☞ 사회자 Bridge -이인제 모두발언(1분30초) ① 이회창 반론(1분) ② 정동영 반론(1분) ③ 권영길 반론(1분) ④ 문국현 반론(1분) ⑤ 이명박 반론(1분) ⑥ 이인제 재반론(2분)	9분 20초	21:07:20		
8	UCC 동영상 질문	☞ 사회자 Bridge - UCC동영상질문(30초) ① 정동영 답변(1분30초) ② 권영길 답변(1분30초) ③ 문국현 답변(1분30초) ④ 이명박 답변(1분30초) ⑤ 이인제 답변(1분30초) ⑥ 이회창 답변(1분30초)	10분 30초	21:16:40	CG/ ST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9	사회자 공통질문	<p><토론주제 :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p> <p>☞ 사회자 Bridge</p> <p>① 권영길 답변(1분30초) ② 문국현 답변(1분30초) ③ 이명박 답변(1분30초) ④ 이인제 답변(1분30초) ⑤ 이회창 답변(1분30초) ⑥ 정동영 답변(1분30초)</p>	10분 20초	21:27:10	S/T	
10	사회자 공통질문	<p><토론주제 :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p> <p>☞ 사회자 Bridge</p> <p>① 문국현 답변(1분30초) ② 이명박 답변(1분30초) ③ 이인제 답변(1분30초) ④ 이회창 답변(1분30초) ⑤ 정동영 답변(1분30초) ⑥ 권영길 답변(1분30초)</p>	10분 20초	21:37:30	S/T	
11	맺음말	<p>☞ 사회자 Bridge</p> <p>① 이명박 맺음말(1분) ② 이인제 맺음말(1분) ③ 이회창 맺음말(1분) ④ 정동영 맺음말(1분) ⑤ 권영길 맺음말(1분) ⑥ 문국현 맺음말(1분)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p>	6분 40초	21:47:50	S/T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21:54:30	S/T F.S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5:30	VTR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김민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첫 번째 정당정책토론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정당이 정책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정당이 정책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당의 정책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입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예, 안녕하세요.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입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입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입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득과 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슈인데요, 이 두 주제가 설정된 것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최종적

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각 사안별로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요. 여론조사결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8점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진단이 7.72, 한.미FTA는 7.55, 한반도 외교 전략은 7.4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선정된 한.미FTA는 여론조사결과 중요도가 3순위로 나타났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논의 끝에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정책토론회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미FTA 체결의 득과 실입니다. 먼저 토론자 모두에게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미FTA 협정 전문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국 정부의 최종 협정문에 대한 서명과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비준동의는 함께 하고 계시는 5, 6 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타결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향후 국회비준동의에 대해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부터 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한.미FTA문제, 이 FTA 문제는 한국과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이미 체결했고 지금도 한국과 EU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자, 그것은 미국의 시장 그리고 우리의 국가, 우리 국민의 운명, 이것과 많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1년여 동안 정부가 협상을 해 왔는데, 저희 열린우리당에서는 1년 전부터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상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화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TA 문제 협상도 변했는데, 앞으로 협상결과를 다 따져 보고 국회 비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작정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FTA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익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FTA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FTA는 추진되어야 된다, 이제 FTA가 국회로 공히 넘어왔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대단히 큼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번 FTA 내용 중에서는 일부 독소조항도 있고, 손익계산을 해서 부풀리기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이 되면 우리 민주당은 FTA를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재활을 위한 기회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FTA 체결 자체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보증수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못합니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논리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찬성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또 반대해야만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당위론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앞서 김효석 대표 말씀 맞다나 국회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익 보는 피해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철저하게 따지고 농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인준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입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한.미FTA는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모든 것을 미국에다 내준 협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9대 1로 진 싸움이었습니다. 9대 1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전부 다 21개 분과 88개 쟁점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이 64개, 우리가 얻은 것이 7개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양극화의 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9대 1의 스코어, 일방적으로 끝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을 후진 시킨 협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주었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극단으로 불러 올 것입니다. IMF 이상의 메가톤급의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국회 기준은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입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한나라당 입장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대책 후비준입니다. FTA 체결협상 타결 후 이미 농업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FTA라는 것은 개방화, 세계화 추세의 반영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한 점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기준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나라당 내 FTA 협상 평가단을 두었고 또 별도로 피해대책조사특위를 두어서 전국적인, 또 분야별로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 국회에서 이것을 기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입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TA는 불가결한 일일 것입니다. FTA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체결만 하면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대외교역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정진석 대표 말씀대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당연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국민들의 가능성, 도전정신을 믿고 이 FTA는 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준과정만큼은 협상전략상 비공개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비준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낱알이 공개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비준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이렇게 각 정당의 전반적인 입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상호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사전에 토론 그룹으로 결정된 두 정당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미의회와 정부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요. 미국이 추가협상을 공식화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미국이 추가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지는 않았고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해서 민주당의 요구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하자고 하면 결국은 추가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한 골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한 것을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부 흐트리고 새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추가 협상을 해서 우리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소 보완하자, 표현을 보완한다거나 문구 조정을 위해서 지엽적인 보완을 하자, 그런 것은 몰라도 합의한 뼈대를 흔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김효석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미국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재협상인가, 추가협상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타결을 다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 미FTA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있어요.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환경 첩터에 관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런 쪽은 우리한테 요구해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가협상이 불가피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의 의도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서는 미국도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만 잘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이제 양당의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을 넘으실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달 원내대표 토론을 주도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우리 김효석 대표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여의 FTA협상을 통해서 4월 2일 한.미가 합

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시비 걸어오는 것 중에서 한국자동차는 미국에 1년에 40만대에서 45만대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작년도에 겨우 5,000대 팔았다, 그러니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 자동차도 잘만 만들면 한국에 많이 팔아라, 그렇게 해서 문호를 우리가 개방해 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협정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자동차 문제로 재협상을 걸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재협상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미국이 건들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상단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협상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1년에 자동차를 미국에 57만대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60만대를 생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수출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55%만 쓰면 미국산으로 봐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전부 미국차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차라든지 유럽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에서 얼마나 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이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그리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가운데 보면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노동의 기준이라거나 환경의 기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한국의 어떤 제조업체라든가 노동현장에서 일정 노동환경이라거나 환경의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이 어긋나면 FTA 협상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겠다, 이러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의 전달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이번에 개성공단의 문제가 성과 중의 하나라고 협상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정문을 보면 여기에 과공지역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공지역의 요건을 대단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제 수준

의 노동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해서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미국이 요구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협상단에서 이번에 협상할 때 협상단이 잘 했다고 하는 것 중 이 부분은 그런 대로 노력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요건을 만들어 주면서도 다만 노동조건을 판단할 때 북한 내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보아서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넣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상 과정에서 방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FTA 협상 결과를 가지고 노동이나 환경 문제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 기구인 ILO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4가지 항목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2가지 항목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장이 걸 다르고 속 다른 면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기해 왔을 때 우리가 미국의 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 주장과 내용과는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민주당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저임금의 싼 값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자국의 산업이나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여차피 요구를 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노동력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4세 이하 아동들을 취업하게 한다든지, 미국은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라든지 강하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복수노동 문제라든지 노동자 전임임금 지급 문제 부분들이 우리한테 민감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김효석 대표께서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당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열린우리당의 당대표를 지내시고 또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 FTA 반대에 나서서 단식투쟁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

고, 그 분들의 소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저도 단식투쟁에 몇 차례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은 그렇지만 국가차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정부나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한.미FTA에 관해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를 불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아픈 대목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 질문 과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사전에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1년 이상 협상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미국을 위원들이 방문해서 미국 사람도 만나보고 와서 미국 사람들 생각은 이렇더라, 커틀러 협상 대표도 만들어서 커틀러 협상대표는 마음이 이러니 이렇게 정해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열린우리당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정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여당은 아니지만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남은 힘을 가지고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에게 '열린우리당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하는 구나'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때문에 엇그제 경제 부총리와 농림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해서 미국이 위험 통제국가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이나 경제 부총리는 '이제는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 반면 농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요건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수입의 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와서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해 본 것 중에 보리타작이 제일 힘든데 어떤 공무원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1년 빼 빼지게 농사를 지어도 저 사람들의 월급 서너 달 치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숨을 짓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FTA로 인해서 저

희 아버님과 같은 농민들이 피눈물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쇠고기 수입 문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뽕족하게 손뚱만콸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갈비까지 사들여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갈비까지 들여오게 된다면 정책이 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방금 김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충격적이고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제발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정확하게 똑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추가 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상이 끝나다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미시칸 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상 다시 하라, 또 쇠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다코다주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문제, 그렇게 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다 내줘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천영세 대표처럼 90%를 내줘 버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맵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작은 나라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본 것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재협상이면 몰라도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정부와 국책연구 기관에는 한.미FTA의 경제효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효과 분석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양당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맞짱 떠서 대등한 통상협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소 순진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금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부풀려 지고 불투명한 데 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수산업이랄지, 의약품 부분이랄지, 서비스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금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물론 측정방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의 피해액이 향후 15년간 6,698 억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농민단체에서는 2조원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편차가 있어서 역시 부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봐야 할 대목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천영세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협상결과 국가경제 산업 전반의 영향, 정확히 표현하면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경제의 파탄뿐만 아니라 지금 급격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많은 이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결국에는 생산시설들이 지금도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어떤 산업 공동화 현상이 뒤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실업의 증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몰락,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악화, 퇴출, 이런 산업전반의 피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이제 두 당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에게 제가 6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에 미국 측 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어서 우리 경제정책의 자주권이 침해된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체제를 강화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FTA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국민들의 기대, 우선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

히 두려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선입관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 국회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규범이 그냥 단순한 상품수입이 오가는 무역만이 아닙니다. 이번 FTA 체결로 인해서 이미 찬성하는 쪽들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3, 40개 우리의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은 160여개의 국내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것은 무역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어떤 규범과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근본적으로 삶의 어떤 형태의 틀의 바뀌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땠습니까? 양극화가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그보다 몇 십 배, 몇 백배의 이런 과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번 협상 부분이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른바 개방, 세계화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역사적인 현실이 아닌가, 결국 민주노동당의 논리는 강자가 마련된 틀에 우리가 무조건 편입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이익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결과였다고 판명이 난다면 그때 국회인준에 찬성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원천적인 반대를 계속 주장하실 것입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원천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지요.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FTA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행되고 이끌어온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FTA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과 FTA는 제일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끼어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은 민주노동당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정책 기조가 바뀐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우선 근거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이라든가 또는 한·중·일, 그래서 평화적인 아시아 경제협력구조를 만들고 또는 남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미국과 EU, 먼 거리와도 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밀실협상이다, 졸속협상이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실제

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통상 교섭권의 행정부에 위임한 그런 형태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거의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 국회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민주노동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먼저 제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6월 국회에서 우리 원내 대표 여섯 분들이 책임지고 함께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한.미FTA는 이후에도 FTA가 계속 있습니다. 통상협상에 있어서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이런 책임을, 이를 태면 국민과 국회가 판단하는 그 의사를 가지고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협상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독주였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안 되었고 국민의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회는 특위를 만들었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식물국회였습니다. 정말 이 비준을 앞두고 국회가 거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통상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 당의 4개 부분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천 대표에게 6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사회자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11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번 한.미FTA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의도를 반영한 부풀리기식의 결과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금의 국정홍보처에 쌍방 국민과의 소통 기능이 아니고,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 존폐문제도 오르내리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이런 홍보차원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표되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후에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잡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진단과 분석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칠레FTA 때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3년 전에 한.칠레FTA를 체결했을 때 무역수지가 3억 2,000만 달러 흑자가 난다고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6

년말 기준으로는 우리가 정 반대의 20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이나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문제인지, 왜 농업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정 대표께서는 농촌 출신이신데요. 정부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 모든 산업에 전면적인 피해를 갖다 주었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입힌 것이 농업 부문입니다. 그런데 선협상 후대책으로 피해보존을 정부에서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업은 붕괴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사후의 보완대책,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보완대책, 끊임없는 역대 정권, 이 정부도 그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파멸을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속에서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국민중심당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농촌의 벼랑끝 위기에 처한 1차적인 원인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92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체제당시 한 농가 가구당 빛이 568만원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빛이 무려 2,816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거든요. 우르과이라운드 체결 직후 농촌 개선한다고 10년 동안 쏟아부은 것이 130조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김영삼 정부 때 42조원, 김대중 정부 때 45조원,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정책 책임자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처방전을 가지고는 농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적도 드문 곳에 가서 수 억원이 드는 유리상자 온실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계획하건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우리 농정의 어떤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프로 농업인을 육성해서 우리가 국제경제체제에서 살아남고 생존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체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협정문이 공개되고 나서 우리가 분노하고 놀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이 정부가 철저히 속여 왔다,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국회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문본과 한글본이 협정의

공식문건입니다. 그런데 한글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타결이 되고 난 뒤에 국회에 갖다놓은 것이 영문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메모도 할 수 없는 수준, 철저히 봉쇄된 생색내기식, 그런데 이번 협정문이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한글본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국민 앞에 타결 직후 한글본을 내놓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은폐하면서 자료요청도 제대로 응해 오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공감합니다. 국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의정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모니터 열람은 가능하고 문서열람은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촛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알팍한 발상이고, 또 일부 문서가 유출됐다고 해서 검찰에 구속수사까지 요청한 모양인데 이것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책무까지 국민이 정부에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의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니다. 지금 토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농업에서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FTA가 초래한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양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입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의약 분야라든지 지적재산권 분야의 피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우려가 있는 것이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FTA 체결되는 데 대한 대책까지도 체결해야 합니다. 과연 이 나라의 농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구조조정문제, 경쟁력강화 문제, 소득 보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6월 말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아우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최용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식적이고 가장 피해가 심한 부분은 역시 농업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 부문에 관한 그동안의 대응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진석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대로 94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10년간 68조원을 쏟아 붓고 한.칠레FTA에 대해서 피해지원대책으로 119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농촌의 체질개선에 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납득 가능한 지원대책이 선행되어야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김 대표에게 제가 6분 드리겠습니다. 상호토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지금 우리 최 대표 말씀대로 농업 분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과연 농업을 해야 되느냐, 농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의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냐,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냐, 또 OECD 선진제국에서 농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점에서 최 대표께서 농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상 중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사상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어서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저변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상을 무시하고 산업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들마다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이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를 체결하고 나서 68조원을 붓고 한.칠레FTA에서 119조원을 농촌종합대책예산으로 책정하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제 농업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농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아이 울음의 소리가 그친 농촌이 아니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회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책 연구 기관에서는 농업피해가 6,700억원정도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터무니없다, 이것보다 훨씬 많다, 또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고 유통업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가공업자, 수출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문제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00억원정도의 향후 15년간 발생한다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아까 토론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의 지적대로 정부의 발표는 축소된 발표이고 또 FTA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약간 부풀린 의미로 2조, 3조원을 주장하는데 바로 그런 주장들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어느 수치가 옳다 그르다를 단순히 제시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되고,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를 수립해서 그런 모든 자료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비준동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 내역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FTA 뿐 만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EUFTA, 한.중FTA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강국들과 농업분야에서 직접적인 교섭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과연 시장주의적인 접근이라든지 또는 농민이 지금 분노의 함성을 지르니까 우선 선심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으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국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대표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김형오 대표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정은 정진석 대표의 지적대로 실패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단기대응식, 땀 질식 처방에 의해서 농정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 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수산물에 급격한 산출증가로 이어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게다가 IMF가 겹쳐서 농가는 빛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농업분야를 농민, 농업, 농촌으로 분리해서 각각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레이건 정부에서 시행했던 디카플링 제도인데 농민에 대해서는 사회 안정망 확보차원의 복지후생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농촌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이나 국토보존 등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과감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최 대표에게 6분 드리겠습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미국은 FTA 협상 내용이 아닌 쇠고기 지역문제까지 들어서 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셰이프가드 1회 제한은 농산품에 대한 우리 농업을 보호할 부활장치를 차단해서 우리에게 크게 불이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쇠고기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안전하게 이제 수입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이제는 갈비까지 수입이 압박한 이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검증이 있어야만, 수입이 있어야만 수입이 되겠다는 입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셰이프가드가 1회용으로만 되기 때문에 과연 셰이프가드의 실질적인 효력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날 번 돈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쌀 몇 되와 부식 약간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60년대인데 지금은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쌀 한가마를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농민들이 이 사회에서 약한 자의 지위로 몰락했다는 단적인 예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까 김형오 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정부는 과거 역대 정권들은 농민들은 많은 애정을 피력하면서도 근본적인 농정을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현재 농민들이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농정 실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형오 대표께서 생각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본질적인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역대 정부는 농업을 가장 중시한다, 농업은 안보이다, 식량은 안보라고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농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은 떠나가는 농촌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폐쇄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농업정책으로 들어간 돈은 100조원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19조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림부 예산을 적당히 보탠 것이 119조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제는 농업의 소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농촌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 사회 이런 것이 인프라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농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끝난 이후 협상 대표단이 언론에 나와서 협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수·우·미·양·가 중 '수'라고 평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아주 오만한 평가이고 FTA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상처를 주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대다수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유독 한.미FTA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FTA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쌀 개방 문제에 관해서까지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과분한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께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농업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절대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심성 또는 일회성 그리고 농촌의 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을 했기 때문에 투자는 되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농업이라는 것은 1, 2년 만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즐기치게 지원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리고 FTA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선대책 후비준입니다. 대책이 철저하지 않으면 비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음에 빠진 우리 농민을 비롯해서 지적 재산권 분야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여섯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득과 실'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인데요.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개별 질문을 한 후 나머지 정당의 원내대표가 집중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한 민간 연구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월 소득 중 19%를 자녀 학원비나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OECD 통계를 보면 30개국 중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GDP의 3% 이상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OECD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닌데요. 사교육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의 생각하려면 과외라는 것으로 사교육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의 행태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교육비가 영어라든지 독서지도, 논술 쪽에 많이 쓰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과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자 마련해야겠고,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문제입니다. 3불정책을 포함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교육 대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님은 교육복지전문가이시고, 국내 GDP의 3%라고 말씀하셨는데 4%에 육박하는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 교육예산이 31조원인데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가 33조 5,000억원 정도 추계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녀 양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그야말로 출산 중단 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고, 정부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백악이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3가지 패턴,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논술, 과외 지도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교를 만든다든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겠고, 원어민 강사를 두어야 될 것이고, 논술 지도 같은 경우에도 방과 후 학교로, 공교육 쪽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입시제도 과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본고사가 없는 대신 소위 이야기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다 잘 해야 됩니다. 내신, 논술, 수능 이 3가지를 다 잘 해야 대학에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제도입니다. 돈은 많이 써야 되고 과외비가 절대 줄지 않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예요. 이 입시제도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3불과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는 대체수단도 마련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 공교육 강화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천영세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바로 김 대표께서 앞에서 진단하셨듯이 사교육의 가장 극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대학입시의 심각함에 있다고 봅니다. 소위 일류대학을 정점으로 해서 서열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3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고사 부활 또는 교육형평성을 대상으로 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민주노동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가 3불을 왜 했는가, 3불의 애당초 목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해 보자, 사교육비를 줄여가 보자,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되었는가,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과연 줄어들었느냐 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과연 좋아졌느냐의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3불이 한꺼번에 핸들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도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국민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여입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학교를 평가하는 학교등급제, 고교등급제라는 말은 조금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이고, 학교를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미국을 보면 학교가 나빠지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상의하고, 집값 떨어집니다. 다 이사 가고, 학교 등급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끔,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매년

평균점을 발표해요. 그래야 엉망인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형오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오늘 메인토픽이 저출산 고령화대책이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육비도 아니고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평준화가 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쟁을 망치고 있는 평준화를 없애자고 하면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교육비 때문에 평준화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평준화를 하고 있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이렇게 평준화를 하면서 사회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봐서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우리가 OECD 제1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공계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미적분 기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준화정책 때문에 지금은 쉬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쓰는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수 안 하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 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사교육비만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화를 포기하자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처럼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를 또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미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가 좀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선택하게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게 할 때 자연스럽게 평균화로서의 장점도 가져가고 학업의 수월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둘 중의 하나, 평준화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최용규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약간의 체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학원에서 행해지는 체벌에 대한 불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인데 왜 공교육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공교육이 신뢰회복 할 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금 최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매를 들면 학생들이 반항을 하고, 왜 학원선생이 매를 들면 아무말 없이 받느냐, 학원 선생은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강화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위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열심히 해야 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원래 학생들 수준이라는 것은 교사의 수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기능을 학교에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기능을 찾아주고 또 해야 될 일은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인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제 아내가 선생님이 되신지 33년 만에 금년 3월에 교감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했다 밤에 퇴근을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원 평가제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주최할 수가 없고,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잡무가 많고, 저는 아내와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느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평가를 한다고 하니 공교육현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학교 공교육의 중심에 선생님이 있다, 교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다 학교에서 공부 했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대학에 많이 가고, 그러려면 결국은 교원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교원에 관한 평가도 중요하고 또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잡무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수업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교원수를 사실 대폭 늘리고 수업시간도 줄이고, 잡무도 줄이고, 이런 일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교육에 대한 평가를 교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을 골라내는 장치가 있어야 경쟁을 합니다. 교사 간에 경쟁을 하고 학교 간에 경쟁이 되고, 그래

야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그 법이 올라와 있는데 6월 중에 국회 내에서 반드시 그런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저런 노인관련 복지법을 많이 만들었지만 정작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에서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일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 큰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룰 문제는 저출산 문제보다 고령화 문제가 더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6년에 가면 초고령화 사회,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반기문 총장 전에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일컬어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충격은 그만큼 엄청난 것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가 당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도 고령 친화사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내실화해서 우리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고강도의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고령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고착화 된 것이 5년간인데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서 사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바로 정부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똑똑한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불과 10년 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훈련하기 싫으면 정관시술 받고 빵, 우유 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3년도에 이미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우리 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이러한 산하제한정책은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예측력, 장기적인 전망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미흡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고강도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해적인 환경, 인식의 어떤 전환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도 어떻게 하면 출산율 제고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이 의문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추가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리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2005년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1.05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년도의 통계를 보면 87만 명의 신생아가 나와야 되는데 43만 7,00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 낳아봐야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앞서서 사교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돈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라고 종합할 수 있는데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토론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여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여성은 민주화에 따라서 여성의 인권도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과 출산, 일과 결혼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기 많은 방청객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양성평등의 어떤 기준에서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출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부담을 임금의 80% 정도는 지급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인식전환, 사회 분위기의 전체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는데 그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저는 출산부분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14.3% 정도의 고령인구가 생기가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금대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노인들이라고 해서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의 삶의 질도 마땅히 젊어서 노력한 만큼 보상차원에서라도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 대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노인 문제는 크게 볼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의 문제이고, 하나는 돈의 문제, 세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돈, 건강, 외로움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왜 미국이 젊은 미국을 유지하고 있느냐, 엄청난 이민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년 없는 사회로 가는, 그렇게 해서 신규 노동력을 매꾸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왜 저는 터널 앞에 톨게이트에 아리따운 미혼여성들만 요금 정산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일본에 가 보면 톨게이트에 있는 요금 정산소 박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시거든요. 그 분도 그 정도의 일들은 충분히 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외롭지 않은 여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장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양성평등 환경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성의 의식혁명, 기업의 의식혁명, 사회전체의 의식혁명 없이는 저출산 대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 여비서가 결혼해서 둘째를 낳으러 갔는데 실제로 활동에 대단히 불편함이 크고, 그것은 돈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양성평등으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이러한 출산율 제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의 고용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의 예를 들면 육아휴직 사용율이 84.9%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0% 이하, 26%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5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 같이 해서 여성고용의 어떤 환경을 유연하게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IBM이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67%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600만 달러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보였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는 다른 제조업 회사에 비해서 이직율이 0.3%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우리 수명이 한 10년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도 하고 정년연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노력해야 될 텐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정년도 지키지 않고 중도에 하차해서 요즘 사오정 오륙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최선의 복지는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년연장, 과연 기업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정년연장 문제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른바 노노케어 형태의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자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율의 30%가 노인들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톨케이트 요금 정산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어떤 노인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천영세 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보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비효율성과 획일성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의 보육정책은 공보육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이방, 유치원, 어디 보낼 곳이 없습니다. 민간시설은 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고,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보육료로 민간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보육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육시설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전부다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향후 5년에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 5%를 50%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조원인데 그것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오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여 개의 보육시설이 전국에 있는데 공보육은 1,30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보육에 대해서는 시설도 줍니다. 선생님들 급료도 다 대주고 있지만 사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립이 시설이 나쁘다는 것은 국가재정지원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30만원, 35만원을 가지고 영세아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부모들이 사립보육원을 가든, 공립보육원을 가든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확일적으로 국가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보육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올려주고, 올려준 금액은 국가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직접 주면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의 의무제로 되어 있는데 왜 보육은 의무제로 안 합니까? 한나라당의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바로 이 의무보육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견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교육도 국·공립공보육체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시설비를 부분적으로 정부예산에서 민간시설에 지급하지만 전혀 시설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위험한 것이 상한제를 철폐해서 보험료를 높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보육의 양극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시 공보육으로 가야 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저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국가의 2개 기관에서 아이를 나누어서 분장하는 이상한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간단히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보육시설과 사립이 설립한 보육시설에 보육의 질이 다른 것인지, 모두 다 의무보육 내용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인지, 커리큘럼과 시설을 동일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고, 학부형들한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학부형들이 선택하도록 2004년도 유아교육법에서는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반드시 보내라는 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우선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화 문제, 어린이 방과 유치원, 유아교육과 놀이방, 보육과의 통합문제인데 당연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처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 가족부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말로 부처간의 밥그릇 쟁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모라든지 보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공보육과 선택을 맡겨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OECD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는 60% 이상을 공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 절대 다수가 공보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은 몇 년간 줄을 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장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보육과 사보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보육 50%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보육 시설을 50% 만들자고 하면 국가재정이 불감당합니다. 사보육을 지원할 수밖에 없

다고 보이는데 이 불감당을 주장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지금 잘못 이해라고 하셨는데요. 민주노동당은 공보육과 민간보육을 50대 50이 아니라 5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하고 나머지는 거의 절대 대부분을 국·공립에서, 보육의 문제는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1조원의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현금 지급식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고, 보육의 질을 절대로 향상시킬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이 수요자인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요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보육에 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친화적인 사회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민노당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한꺼번에 다 하자, 국민 기초생활도 늘려주고, 의료비도 늘려주고, 교육도 그렇고, 노인, 장애인, 한꺼번에 다 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선 1조원의 돈이 주어졌다고 했을 경우 민노당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물에 빠진 부모를 먼저 꺼내야 되나, 아니면 자식을 먼저 꺼내야 되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둘 다 다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 자체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국가적 재정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가운데 무역 규모로 11대 국가, 지금 OECD에 국가재정이 확보되었다면 당장 108조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많이 버는 재벌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더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민주노동당이 내 걸고 있는 공적부문 확대정책을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연금문제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원내대표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KDI 분석에 의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씩 쌓이게 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잠재부채가 누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로 전가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세대에 과중되는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그대로 하면 그 목표가 관철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미래재정의 어떤 불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현재 급여율을 60%에서 민주노동당은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담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대한 기초연금을 받게 하자고 하는 것이 기초연금 개혁안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물론 현세대 노인 사각지대 부분도 다른 당과는 조금 대상 비율이 다르지만 민주노동당은 80% 하려면 근본적으로 조세개혁이 중장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물론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은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초 노령연금법 관계는 지난 국회 때 상당한 이유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타결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을 동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실무위원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동당의 안과 한나라당의 안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상당히 합의가 되었던 부분을 살려서 많은 부분이 실무선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특별히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원고갈 연도도 정부측 안보다 한나라

당 안이 3년 정도차이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지금 토론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방금 김 대표도 사학법, 연금법, 로스쿨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국회법 원칙에 입각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특정 법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한다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까지 쉽게 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2004년에 발의한 법안대로 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2008년 첫해에만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지난 번 통과된 법안대로 하더라도 2008년에 4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는 매년 예산 10% 절감을 외치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소세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제가 지금 연결하는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을 연계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 법들이 다 각기 중요한 법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각 당 간의 합의점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원칙대로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든다고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정부측의 원안이나 재정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을 정부가 12.9% 올린다는 것은 우리 술을 깎는 것인데,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9%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도 똑 같이 되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장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모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 문제는 공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법을 우리가 4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500만명의 노인들에게 월 8만 9,500원, 즉 9만원 정도의 돈을 드리자는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요건을 완화해서 수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형오 대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기초노령 연금의 해당자도 현행의 60%에서 80%의 노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열린우리당과 정부측과 협의과정에서 관철이 안 되어서 이 점은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몹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층들이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사실 빈곤층입니다. 이 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도 우리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노인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도 도입하고 조기 정년 시키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고, 민주노동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 같이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느 쪽인가 한쪽은 정책노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선심정책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감당한 수준, 정부가 감당할 만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20%까지 주자고 이렇게 냈는데 민노당의 경우는 이해를 해요. 민노당의 경우에는 증설을 다 하자, 부대시설까지 만들자고 하면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감소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민노당과 함께 고율의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보수이고 민노당이 진보인데 어떻게 같은 노선으로 가느냐고 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과도 옳다면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이냐, 진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정당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의 문제이고,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현행 5% 지급되어 있는 것을 2028년, 앞으로 20년 후에 10%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5%에서 10%로 앞으로 20년 후에 올리자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재원이 듭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20% 이상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정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 옆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살다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기초연금법은 마땅히 국민연금법과 연계되어서 처리되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효석 대표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어요.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어르신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발상이 아니냐,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한나라당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지급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20년 후에 10%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10%까지 점차적으로 1년에 0.5%씩 올라갈지, 2년에 1%씩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5%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포퓰리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우리 재정의 방만한 경영,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얼마나 확대되었습니까? 공무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부처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리고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것 제대로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계속 양당이 손잡았다, 손잡을 수 있습니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맞으면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잡은 것이 깨졌는데 한나라당이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 민주노동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10% 도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열린우리당과 기초연금 타협하고 그냥 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초연금의 급여율 수준, 필요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해명도 하실 겸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해 보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천 대표로부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무례를 했느냐?” 했더니 협상담당 실무 국회의원이 직접 민주노동당 협상단 실무위원에게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천 대표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에서 10%를 올리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감쇄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감쇄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올리느냐고 하는데 감쇄정책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방만한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총 잉여금만 해도 2005년도에 5조원이 넘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다음은 최용규 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지만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 당의 사회보장 개혁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현재 복지지출이 약 7%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희망적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의 제도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저는 오늘 공적연금제도와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조금 전에 정진석 위원이 강조한 대로 매우 중요한 일인데 50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매 5년마다 재계산 제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5년마다 경제적 지표와 상황에 맞게 연동해서 보험료율과 급여를 조정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이번처럼 2003년도에 조정했어야 할 것을 4년씩이나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는 엉뚱한 제도, 또 한 가지 의료분야에 관해서는 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의료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분야에서 공적부담을 강화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예, 알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산정기간이 달라서 어느 연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현재 특수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20년 미만 가입자

가 공무원연금은 32%, 사학연금은 87%, 군인연금은 88%에 이릅니다. 물론 현재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쉽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해서 연금 수급요건을 10년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안이 행자위에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장 대표께서 제안하신 대로 당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연금수급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6개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당장 협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복지지출은 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복지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만 가지고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나기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복지에 관한 저수준을 만들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꾸준히 사회복지를 해 나가려면 정부의 재정 외에도 민간의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수지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보건복지 분야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김효석 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니깐 난감합니다.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 관한 재정지출이 마냥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로 오늘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만이 복지의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이 활성화 될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봉사정신 부분을 계도해 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자

리를 빌어서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싶습니다. 최 대표께서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50년 후의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급여율을 5년마다 재계산을 통해 조정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50년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이번에 국민연금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각 통과가 연금제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긴 팀으로 고려하자는 의미로 50년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염려가 있을 때는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매5년마다 제정 재계산 제도를 통해서 계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지어놓자, 그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국회가 개입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를 보완해 주면 될 것이고, 이번처럼 2003년도에 재계산 했어야 될 것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답에 접근하는 이런 제도는 정쟁의 대상으로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노무현 현 정부 출범 시점에서 본다면 통합신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통합신당은 지금 새로운 정당창당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당은 모름지기 자신의 정책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개혁을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서 통합신당이 열린우리당이 나 민주당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좋은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향하는 정책 제도에는 굳이 차이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김 대표님 질문에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아까 천영세 대표와 보육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다 제가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와 최 대표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2만 8,000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공립기관은 불과 1,3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낙후하고 영세합니다. 거기에서 요금까지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공립보육시설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줄을 서야 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일적으로 정부가 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영유아에

특히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장애아, 저소득층, 농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2만 8,000개의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김영삼 정부 하에서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차원의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용자도 해 주고, 하여튼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아까 말씀대로 공립보육시설로 전부 대체해야 된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사적 시장영역을 공적 시장이 대체한다면 큰 모순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적으로 만들어진 보육시설에 커리큘럼, 교사기준, 시설 기준을 정부가 적정히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온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한테 바우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우처를 주어서 수요자가 공립에 보낼 것인지, 사립에 보낼 것인지를 내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 보육의 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보육정책의 골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가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사실상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이전에는 복지분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확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태부족이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2010 계획에 따라서 적어도 2010년까지 저출산노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특별한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기존의 사업들을 서로 조정하면 2010년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세금을 안 걷고 재원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그러면 어떤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공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결국 이 고령화의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겪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그들한테 혜택만 있고 부담은 안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니까 결국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일단 다섯 분의 질문을 받고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장병환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전 병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2010년까지 어떻게 32조원의 재원조달을 해 낼 것인가, 지금 우리가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 보지만 도로, 토목, 항만을 보완해야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이다, 더더욱 경북 운하까지 뚫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단히 문제이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SOC시설이라거나 국가재정을 조정해서 증세,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2010년까지는 효과적으로 추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열린우리당도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김민전)** : 여기에서 토론회를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여기에서 토론회를 종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신 울 교수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가졌던 정당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해서 각 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로 현재 MBC, KBS 두 방송사로 동시에 여러분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각 당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안녕하세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천으로 결정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입니다. 2007년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이 32.3%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고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이 28.9%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새 정치인들 약속을 안 지키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꼭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타이머 있는 것 보이시지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정당정책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요새 대선을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은 잠시 잊고 정책에만 집중을 해 주십사, 선거에 관련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회에 나오신 대표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7월부터 한나라당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라는 직책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 대표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서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점에서 제가 잘못해서 당풍을 쇠신시키지 못하고, 후보를 제대로 뽑아서 단합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연말에 정권교체를 못 이루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늘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시지 못하시지요? 지금 아프칸에서 무고한 우리 국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21명이 피랍 억류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속히 우리 국민들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의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라도 저희 당 대표들이 만나서,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대가 빨리 철군해서 우리국민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박상천입니다. 선거방송위원회가 오늘 이런 토론을 주최한 것은 북핵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정부조직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당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이 이념과 정책노선에 의해 구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이질적 세력이 있는 정당은 이러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천 대표였고, 다음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이 시간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아프칸에 납치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대선주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정쟁을 중지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일에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책임을 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또 더 큰 명분도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을 이반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중심당은 이런 차원에서 정책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늦은 밤 TV를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칸에 피랍되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빠른 귀환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소중한 어려움인데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문제도 해결됐고, 또 6자 수석대표 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정부와 참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높이는 결

정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토론을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제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되어서 2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를 정말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정부의 과병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라크 과병과 같은 것을 하면서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정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과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적 강경정책으로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붙어진 문제이고, 마침내 핵 시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3 합의를 통해 이제 해결의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해결의 방안으로 가고 있지만 이라크 문제나 아프칸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답변을 주어야 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천 대표 부탁드립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북핵 문제는 무력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해서 지금 그 1단계인 북한의 5개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증유 5만톤이 지원되는, 또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평화협정단계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이러한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의해서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평화적 통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해외 파병에 의한 기준은 국익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북적 견지에서 해외 파병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파병국의 재건과 자원개발에 우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국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국제적 여론을 좋게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라크 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적 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질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1,000만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정세균 당 의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북한 핵문제와 해외 파병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표결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파병목적은 보면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 3가지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류사회 대한민국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어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것과 북핵 문제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만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6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 속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공조를 위해서 파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파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치 당시에 한국인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납치를 했다는 점과 포로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반드시 납치가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의 토론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토론자가 번갈아 가면서 주도권을 갖는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북핵 불능화라는 개념도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불능화의 조치도 가식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는데 남북정상회담이나,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되지 않을 시기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먼저 문성현 당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나중에 토론도 이 주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두 분이서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특수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단된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임무가 명백히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통령 임무를 방기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 6.15 합의를 이룬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남북정상 간에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저와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대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정상이 만나야 되고, 또 잘 돌아간다면 잘 돌아가는 대로 만나서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격변이 있었습니까? 한반도에 이런 격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북정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빨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남북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

정적이고 정치적 의무의 정상회담은 이 예로서 충분합니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북한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문제를 정권차원에서 또 정파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를 역이용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서 확고한 안보관과 대외관계가 정립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한테는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호토론에서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성현 당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어쨌든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또 구절하는 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국회 연설에서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중심당 대의원님께서 “현재 북핵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추어진 조건 속에서 선부른 남북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급변한, 지금 안 만나면 언제 만날 것이냐는 것이지요. 북미가 만나서 앞으로 북미수교까지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걸림돌에 걸렸던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답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방 간에도 의제가 결정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적절치 않습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불능화나,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구체적 단계로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 하나 하나에 우리나라 정치정신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든 아니든 현재 만나라고 정치인들이 발목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심 대표님!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정상 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관계는 1대 1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6자회담에서도 쉽게 풀어나갈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남북정상 간에 만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개최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부 북미관계로 기본적인 성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남쪽의 정치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북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북미 간에 맡겨놓아 버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이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심 대표님!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고, 북한에 매달려 다니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게 되어서 국민적인 불신만 키워나갈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해 보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이 공통적인 아젠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되거나 정파간 이해에 따라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노당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감상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방과의 정상회담도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1차 회담 때에도 5차례에 걸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은 사전의제의 협의와 조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정말 자꾸 정략적 이용,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의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따른 남북 간의 이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왔던 것은 북핵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북한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대통령의 임무를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7년 동안 총 21회에 걸친 장관급 회담, 또 6차 남북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총 212회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원했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교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국방장관회담이 단 한 차례 열리고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간이 국방장관 회담을 먼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노당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지난 번 6.15 합의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는 바로 정치 군사정부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책임논의가 서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군부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보다도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긴장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노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곳인데 그것이 경제협력단지로 되어 있고, 경의선이나 개성까지 군사경계선을 넘는 철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긴장완화는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박상천 대표와 정세균 당 의장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이제 시작인데 정전협정,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 논의는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은 이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맺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 평시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언인데 지금까지 종전선언에서 구체적인 평화보장 장치를 논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화협정에서 남북간의 충돌 없이 평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내

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정세균 당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지금 남북간에는 정전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면서 긴장이 강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우리 경제에까지 큰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의 긴장 때문에 해외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국제금융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런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하다, 북핵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겠나 하는 말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북핵문제 해결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상천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정세균 의장과 토론하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묻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가 그때 정상외교를 정부에 있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양국 정당은 가능한 한 6자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그런데 종전선언은 휴전상태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됐다, 평화상태가 됐다는 선언일 뿐이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 없이 종전선언만 선행됐을 때 유엔사 문제, 종전이 되면 전쟁 당사자인 유엔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철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이런 조치에 대한 보장 없이 무턱대고 표방선언만 하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물론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아무 실체나 내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될 과제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

에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전상태가 종전선언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서 종전선언을 아무 사전조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종전선언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강화조약입니다. 거기에서 규정되는 것이지 평화협정과 별도로 종전선언에 앞서 그런 조치가 강구된다면 그 자체가 평화협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의미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취할 때는 평화보장 장치를 선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방지 장치를 강구한 후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종전선언도 포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제는 정세균 당 의장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차례입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민주당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민주당은 평화협정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정전협정을 보장하는 유엔사나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모두 철수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평화체제에서 여러 문제를 합의한 후,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부터 불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누가 종전선언을 불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그렇습니다. 정전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과 이것이 병행되어서 나가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남북간에 군사적 균형은 깨집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평화협정이라고 이것 저것 규정해 봤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러니까 2.13 합의가 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서 그것이 발전될 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2.13 합의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2.13 합의가 4단계 로드맵으로 되어 있는데 3단계 로드맵 정도가 됐을 때부터 평화협정 협상을 한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 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2.13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그것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거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정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최근에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합류할 것 같은 입장이어서 환영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아직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저는 우리 민주당,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변도는 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과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북아 정세가 바뀌고 있고 중

전선언 이야기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쪽 했는데요. 양 당은 이 한반도 주변정세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대북정책은 우리가 21세기에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반자의 관계 내지는 공존의 대상으로까지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보는 시각이 현실적으로는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북한에 대한 입장이 한쪽으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주적관계의 개념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 유엔을 동시에 가입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동반자의 관계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대표로 취임하고 난 후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좀더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지시를 내려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좀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한나라당이 좀더 호혜적인 상호공존 원칙을 지켜 나가는 남북관계의 정책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안보 문제와 지나치게 경직된 연결을 좀 피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또 북한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는 인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앞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감사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최근에 향군회관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이 달걀 세례를 받았습시다. 한반도의 평화비전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대북지원에 유연한 상호주의를 선택하는 방향의 전환, 좌향좌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는 6,500억원의 대북지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 삭감하자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또 대선을 전제로 한 온상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지금 대북정책을 제가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선용이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앞으로 집권계획을 미리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통일의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길이 얼었을 때는 썰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녹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어쨌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유연한 정책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국민들이 아주 곤욕스러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대선 때만 되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하는 것은 꼭 선거 때만 되면 변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집권 이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상호주의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갔을 뿐이지 상호주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영토조항이라든지,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는 것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심 대표님 간단하게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고,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 전이라도 경험이라든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연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희들이 북핵 폐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인도

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 전에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나친 협력은 지금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 4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님, 지난번에 보궐선거 하실 때 한나라당 후보들부터, 대표인 저부터 여러 번 가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 대표님이 당선되는 것보고 상당히 우리가 놀라고 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그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중심당 정당정책을 보니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실천해 나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중심당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먼저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미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국민중심당의 당원 정당정책에 성명한 대로 전향적인 평화와 통일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국민중심당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볼 때도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지나친 것은 안 된다, 작년에 저희 한나라당이 5,000억 원정도 예산을 깎자고 한 것은 한참 핵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중심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북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북한 핵 개발이 추진되었고, 남북한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국방부장관회담도 거절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유일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북핵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핵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예를 들면 북핵을 해결해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더 인도적인 지

원이라든지 또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차원에서 북한에 매달리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거나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간단하게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한 가지 여쭙볼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 행사한다고 정부가 했는데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이렇게 단독 행사하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까?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환수되면 동시에 유엔사가 해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안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또 통일을 향한 헌법 문제와 연관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세균 당 의장과 문성현 당 대표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연변원자로 봉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994년 연변 원자로를 봉인하고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그때보다도 오히려 진도로 봤을 때 뒤로 나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경수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정세균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네바협상이 아마 '94년이지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맞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 협정에 의해서 KEDO가 만들어지고,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진척이 됐었습니다만 제네바협정의 이행이 서로 책임을 추궁합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고, 그것이 잘 진척되지 않아서 북한 핵 문제가 또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6자회담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경수로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2.13 합의를 완전 이행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13 초기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경수로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문성현 대표!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수로 문제는 북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중수로에 의한 연변 핵발전소를 핵 개발 우려가 있으니 대신 경수로를 짓자고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북이 핵 주권을 일정 포기하는 대가로 획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중간에 미국의 켈리가 북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 경수로 못 지어주겠다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작년 35% 공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미북 간에 이루어지는 핵 문제이지만 결국 이 경수로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가는 1.5조원에 해당하는 경비 중 1.3조원은 우리나라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경수로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시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께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지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미국은 경수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공이 불가하다고 '선 NPT 복귀, 후 경수로 제공' 이렇게 입장이 바뀐 상태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먼저 경수로를 제공해라, 그러면 NPT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미국과 북한의 상반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경수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과 관련된, 북의 핵 결과와 관련된 문제라고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 지금 핵 개발 문제는 NPT 복귀나 이런 것을 떠나서 6자회담을 통해서 상황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나가고 있고, 북도 제가 작년에 평양에 갔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명백히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PT와는 이미 경수로 문제는 달라진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보

는데요. 왜냐하면 제네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제공이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이 작년에 핵 실험을 하기 이전에 핵 보유를 주장하기도 하다가 결국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사회로부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핵은 용납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경수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어진 역사성과는 별도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NTP와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 2.13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이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핵을 없애 나가는 과정으로서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핵을 없애게 하는 과정으로서 서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북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없애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가지자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하는 말, 결국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국제 사회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결을 하고, 폐쇄를 하고, 불능화를 하고, 폐기를 하는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경수로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북미 간에 이야기되고 있고, 북에서 인정하는 바 연내로 불능화가 하겠다고,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기대하고 분명히 낙관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핵 폐기가 아니라 불능화 과정이라는 것은 핵과 관련되어서 거의 90%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2.13 합의에 근거한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경수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재개하고 그것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는 문성현 대표께 제가 4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이 경수로 문제가 어려워지고 나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께서 평양을 가서 200만kW 송전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작년에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하나의 대안인 것 같지만 저희들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에서는 남측의 전기를 북측에 송전해 주는 것을 주요한 에너지 지원으로 보실 것인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것은 북한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연변 핵발전소를 돌리는 부분이 에너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에너지를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전력제공을 우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에너지주권, 전력주권으로 인해서 현재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통계로 보면 전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삼성에서 전기가 단전되어서 공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기야말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송전방식은 맞지 않고 북의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북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 결국 경수로이고 이 경수로 문제는 2.13 합의에 따라서 북의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북이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방식보다는 이미 35% 가량 지어놓은 경수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 폐기 과정 속에서 다시 지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전력제공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이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 실질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접국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경수로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3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시기상조이지만 핵 불능화라든지, 폐기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어서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정 의장님께서도 북을 갔다 오시고, 평양도 방문하셨을 텐데 가서 산업시찰을 해 보면 제일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도 전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쌀 등 인도적 지원 말고 북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전력관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통일비용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속에서 경수로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 당에서는 일단 인도적인 지원과 경수로 문제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문제가 결국 2.13 합의에 완전한 이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문제를 국제 사회와 협의해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재섭 대표와 박상천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장성급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경의선 통해서 철도 시험운행, 장성급회담을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항상 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LL, 그러니까 서해상 북방한계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강재섭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5년 전에 서해교전에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 지금도 녀을 기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교전 이후에도 매년 수 십 회씩 NLL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북한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서 이런 침범행위에 대해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NLL 재설정 기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NLL은 우리가 사수해야 할 목표이지, 북한의 정권 바꾸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 NLL을 북한이 침범할 경우에는 우리가 작전지침에 따라서 절대 사수하는 것이 나라가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박상천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 충돌을 막기 위해

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선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북한이 잠정적으로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이 이것을 자주 침범하면서 새로운 북방한계선을 자기들이 설정해서 서해5도를 북한 관할구역에 넣고, 북한의 허가를 얻어서 출입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NLL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LL을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중간선 개념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꽃게잡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 상호토론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강제섭 대표께 4분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 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핵실험을 전후해서 “북핵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지 우리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미협상용이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에게 위협이 별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북한 핵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장거리미사일에 실려서 미국을 공격하는 일보다는 단거리미사일로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 대통령의 가벼운 말씀들이 결국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지나치게 해서 생업이 안 되도록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나라와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언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권이 계승했다는 평화번영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글썄요. 저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차이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별 다른 차이를, 그대로 계승하기가 쑥스러우니까 하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최고위원** : 저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

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햇볕정책도 그렇고, 평화변영 정책도 그렇고, 지속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기껏 유화정책을 썼는데 월드컵 준결승하는 날 예를 들면 서해교전이 발발했고 또 최근에는 평화변영정책을 한다고 계속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10년이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달래고 같이 변영을 해 가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채찍과 설탕을 골고루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대북정책은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북정책,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러면 과거의 햇볕정책은 대미관계도 강화하면서 국가안보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변영정책의 좋은 점은 햇볕정책을 물려받았다고 하고, 나쁠 때는 아니라고 해서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제 답변을 미리 정해서 유도하십니까?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천 대표께서 4분 쓰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여러 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도 그 말을 믿습니까?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 햇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볕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따뜻하게 해 주어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포용을 해 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난방비만 무지하게 들고, 아무도 따뜻한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퍼주기만 하고, 기준 없이 퍼줌으로써 해서 그런 사태가 생겼지 않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적

어도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금을 북한에 들어가게 한 것 외에는 북한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가장 하에 이 논리가 개발이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1954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유력하고, '79에 연변 핵시설을 착공했고, '80년 7월에 고성능 폭발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에 미국이 연변 핵시설을 포착해서 1차 핵 위기가 일어나서 KEDO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8년에 출범한 국민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30년 전에 개발한 핵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질문하신 것입니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예, 답변을 하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무엇을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햇볕정책이든 평화변영정책이든 무분별한 유화적인 자세, 또 무책임한 민족공조만 강조하는 것들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용돈도 주면서, 때로는 채찍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달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상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햇볕정책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지금 햇볕정책이 잘못된 측면, 실수한 측면만 부각을 시키는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동해선, 경의선이 연결되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고, 북한이 개방 분위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전쟁 위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만든 긍정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물론 야당으로서 공격하려는 말로 생각합니다만 좀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민주당도 분명히 야당인 줄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국민의 정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햇볕정책 중에 좋은 점은 우리가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이라든지 또 포용적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정책에 다 반영되어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제 주어진 4분이 다 지났고요. 첫 번째 토론주제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 주제는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계신 토론자 5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고, 여기 5분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일 잘 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다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공무원수 증가 그리고 조직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공무원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약 5만명이 증가했고, 장·차관급 자리도 증가했습니다. 각 정당은 현재 이런 정부조직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지금 세계화가 확산되어서 전 세계가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교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은 세계 표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추세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근 10여 년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을 축소해서 장관급이 13개 내지 15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관급이 무려 40개나 됩니다. 이렇게 큰 정부로 잘못가는 상황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조직과 기능은 대국민서비스 쪽에 중점을 두고, 기타 부분은 민간활동을 뒷받침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상이 강합니다. 지금 사회자가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수 늘리고, 장관급 늘리고, 차관급도 9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대평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부 이야기할 때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일 잘 하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가, 가장 큰 잘못이 정부의 조직체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각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양산하고 남발했고, 심지어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산하위원회가 400개가 넘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산하위원회 수가 2002년에는 52개 였는데 78개로 늘어나고 있

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부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지원하고, 그리고 민간이 더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추어적인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맡아서 운영을 이만큼 해 온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우선 사회자께서 아까 통계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무원 숫자가 1만 4,000명이 증원이 됐는데 철도청이 공사화 되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4만 3,000명이 증원이 됐지요. 전체 숫자가 한 59만명쯤 되니까 7% 정도 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제가 추후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지방공무원이 숫자가 35만명쯤 되는데 지방공무원이 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숫자가 어느 것이 적정하나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입장이나 또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숫자를 붙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몇 퍼센트인가, 그 비율로 보면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무원들이 유능하게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투입중심이 아니고 산출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강대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대섭 대표최고위원 : 화요일마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의결을 많이 해서 화요일만증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시장에서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종합청사 내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것을 잘못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잘못 계산한 것이 4년간 5만명이 늘었다는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다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3만명이 빠진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8만명이 늘었고, 금년에만 1만 2,0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만 늘고, 민간의 동력은 위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때문에 국민 부담과 나라 빚만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몸집은 크지만 국민의 봉사는 풀썩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앞으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성현 당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저는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식이 같습니다. 즉, 지난번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능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시기와 맞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된 기조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양극화가 강화된 이 상황에서 서민이 살기 좋게 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관점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 이랜드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냥 기만해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대표님, 우리가 왜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쌀 시장이 개방되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런 서민의 입장에 서서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회의 갈등요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복지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북핵 문제 주제로 토론하지 않은 두 정당의 대표와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천 대표를 상대로 문성현 당 대표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두 분이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성현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겠어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우선 중요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를 위한 정부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같으면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셔서 그래도 한 번 쉬어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DJ정부 때 장관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부처들이 같이 중복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도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일을 벌일 때는 뭔가 예산이 되고, 돈이 되면 모든 부처가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문제가 정부기능의 중복 조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장관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저희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민주당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소위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통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성장해 가면서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 가는 것이 어떤 복지보다 더 중요한 복지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없애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병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주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내에서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무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각 부처간의 기능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일부처에 주어서 한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역시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를 보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4대 부문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담보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런 국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비해서 참여정부는 규모를 늘려서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

부문의 규모를 늘려서 민간부문에 창의를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경영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규모를 축소하고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저는 큰 정부를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정부가 너무 커지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또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를 늘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자면 공공부문으로 꼭 있어야 할 부분은 남기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유사기관끼리 통폐합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를 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를 상대로 해서 박상천 대표와 정세균 의장 두 분이 각각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심대평 대표께서 지방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중앙정부조직과 기능의 지방 분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고,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당선되면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부가 될 것인지 그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든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지방자치가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의 분권 또 재정적 분권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출범할 때에는 지방에 대한 분권과 분산 그리고 균형발전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쉽게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창의를 보장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가 국가경영에 공동주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

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권 조치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국민중심당은 창당이념이 창조적 실용주의와 지방분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또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정세균 의장 질문에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앞서서 심대평 대표께서는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줄이자는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표현을 이미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6공화국 이전까지 매 정부가 2.7% 내지 7.8%의 인원이 증원되어 왔고, 문민정부 때 1%, 국민의 정부 때는 IMF를 맞아 유일하게 0.7%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든지, 또 환경보건 분야가 늘어나야 한다든지, 소방방재청의 설치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의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공무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답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기존 정부체계를 놔두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 정부 때 IMF 극복을 위한 공무원 수의 감소를 제외하고라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급격한 공무원 수의 증가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지방의 서비스 확대 행정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이 이전되면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훨씬 효율성이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을 30% 이상씩 늘려놓는 정부는 이번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소방, 행정도시 설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조정하면 저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번에는 정세균 당 의장께 심대평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 의장님께서 이미 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리 변명을 많이 해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민간 부문에 자율과 창의를 침해하는 규제의 확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규제의 건수가 과거 2002년에 비해 1,000건 이상이 훨씬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부처의 체계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조직운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가 규모 증가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과거의 실적을 쪽 보면 무조건적으로 비대했다, 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규제가 확대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규제를 축소시켜서 기업이든 민간 부문이든 어느 부문이든 간에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과거의 규제중심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서 인력을 축소해서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부분에서 축소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기능이 끝난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축소해서 국민의 걱정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위원회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어서 다행입니다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2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는 식물위원회가 많아서 씹씹이는 엄청

커진 것입니다. 2002년에 540억원의 예산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009억원으로 2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주로 과거를 정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위원회는 3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보다 과거를 정리하는 위원회 직원 수가 14배로 예산도 18배나 됩니다. 그래서 옥상옥위원회를 좀더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또 그 기능이 끝난 위원회는 당연히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재섭 대표님께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2005년도에 강 대표님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실 때 제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 과거사법을 합의해서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사위원회는 여야합의 처리에 의해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의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가 꼭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가 다 합의해 놓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면서 또 국회가 합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를 상대로 해서 정세균 의장과 문성현 대표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역시 1분입니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한나라당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80%를 한나라당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가 3만 7,000명이 증원되어서 34만명에 비하면 12%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7%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증원이 된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중앙정부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철도청을 넣더라도 증원된 공무원 숫자가 4만 3,000명입니다. 아마 8만명은 착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시니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선 정부의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그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만 많이 들고, 또 공무원이 있으면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자꾸 규제를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은 정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자치경찰이라든지 또 직접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편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처를 만들다가 모자라니까 청와대에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각은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는 일 아니면 유전개발 하고 희한한 일을 청와대위원회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앞으로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견해가 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강 대표님, 저희 민주노동당은 다른 것은 찬성하지만 작은 정부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를 지향하게 해서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노인복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민주노동당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정당도 없고 정치집단도 없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노동부를 지금처럼 할 바에는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속속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비정규노동청을 만들어서 속속들이 알도록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정당들이 합의를 하고, 물론 노동당은 반대하셨습니다만 합의하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제대로 취지에 따라 시행이 잘 된다면 비정규직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하게 되면 그 기업체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돌

리라는 식으로 법이 그런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랜드의 사태에서 보다시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기업체가 바꾸기 싫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전부 집단해고를 해 버린다든지 하는 사태가 생기 때문에 법이 그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야가 논의를 해서 기업이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입법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고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조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 두 분이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재섭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부처와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노동부 말씀입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러면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드리지 못 했습니다. 국정홍보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홍보처라는 것이 비만정부의 대표적인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을 홍보한다는 핑계로 결국 집권여당 홍보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각 부처가 정책홍보로 쓰는 돈이 270억원인데 국정홍보처는 4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홍보하는 이런 부처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저희 민주노동당은 국정홍보처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지금 국정홍보처처럼 제대로 알릴 것은 알리지 않고, 다른 일만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능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처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고, 오늘 이 토론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가 비교적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 의식의 기준에 비하면 재정규모도 적고, 공무원 숫자도 적다, 이런 것은

제대로 알리고 있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문제는 현재 국정홍보처가 제대로 알리고 있느냐, 한.미FTA에 대해서는 홍보를 대단히 하면서 실제로 이랜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고 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정부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해서 국정홍보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국정홍보 문제를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해 주는 홍보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박상천 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오늘 토론회에 나와서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늘리고, 한나라당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늘린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알았습니다. 민노당은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민노당에서 금년 3월, 4월에 서울시 공무원 퇴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한 반발을 보이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우선 문제 있는 공무원의 퇴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노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퇴출방법에 관해서 미리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늘리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정부를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지의 다양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분에 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건설교통의 경우 다리는 놓을 만큼 놔고, 길도 닦을 만큼 닦았으니까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서 한때 유형을 했지요.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오세훈 시장까지 3%를 일률로 잘라서 했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 점에서 첫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도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잘못 됐으면 제대로 공무원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3% 자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숫자가 남으니까 퇴출시킨다, 당연히 박수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 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박수치지

만 실제로 속내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준도 없고, 말하자면 이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장이라든지 고위층의 편의주의적인 기준으로 실제로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퇴출제도 자체도 반대합니까?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이런 식의 퇴출제도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저희가 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다섯 분 시간 너무 잘 지켜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분 내로, 30초 내로, 1분 30초 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요. 마무리 발언의 경우에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고 꿈에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한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부와 정치가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희망을 말하게 하지 못하고, 신뢰마저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국가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에 매달려 이합집산하거나 또는 이진투구에 매달려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서 국가경영에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추어가 아닌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경영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정부창출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창조적 실용주의와 민생경제를 챙겨 나가는 역할과 함께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총화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국민중심당이 맡아나고자 합니다. 헌신의 정치, 봉사의 정치로 국민중심당은 국민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프칸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오늘 저는 이 토론회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기대를 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신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상호주의와 과거에 주장했던 퍼주기 논란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나라당의 반대와 발목잡기 때문에 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인정하고 평화의 길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초유의 국가위기 극복과 함께 시작한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도 살아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증권시장도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꼭 해결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곧 대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는 8월 5일에 대통합신당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건강한 시장경제는 대통합신당이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광범위하게 통합되어서 민주진영의 변모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다음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정말 잘 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반성하고 끈질기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에서 우리가 반성을 했습니다. 또 제가 대표가 된 후에는 외부의 목사님을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영입

하고 또 윤리위원회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해서 수해골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낸 분들에 대해 엄격하고 강하게 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정당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부패해서 한나라당 당선자가 자격이 상실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 그런 지역은 우리가 후보를 내지도 않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선언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과거에 우리 한나라당의 전신 시절부터 호남지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대표로서 공식선언도 공식사과도 제가 호남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또 이번 경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세계 역사가 없는 우리 스스로 후보를 검증하고 청문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권역을 돌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독하게 싸우는 것 아니냐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후보를 내고, 반드시 단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권창출을 하는 것은 우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다음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국민 여러분,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토론하시면서 제대로 복핵 문제가 저러면 되겠구나, 아니면 앞으로 정부가 저러면 좋겠구나 하는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어찌면 귀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1위가 아프칸이고, 2위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은 거기에 가 계시고 또 국회에 곧 비준될 것으로 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농민 여러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2시간가량 말씀드린 것이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 저희들이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복핵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동시에 켜고 있어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측으로만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복핵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이 50% 능선까지 와서, 그러면

6.15 바탕 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0% 능선까지 갔는데 아직 노무현 대통령은 50% 능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자신 없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왜 됐습니까? 그리고 아프칸 문제는 즉각 철군하면 될 것 아닙니까. 300명밖에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철군을 못합니까. 저는 철군해야 뭔가 정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철군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미국에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프칸 문제와 이랜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아까 강제섭 대표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법을 고칠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당 대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의 덜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민주노동당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마지막으로 박상천 민주당 말씀해 주시지요.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노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증가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상당히 큼니다. 한나라당이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책노선을 따지지 아니하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면 다 모이자, 이질적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정당을 만들자, 중도개혁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통된 노선에 입각해서 그런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려고 노력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노선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그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정당의 정책을 알아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정책대결이 되어서 한국의 정치행태가 좀더 선진적인 정치 행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에게도 밀접히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을 잡탕식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이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선진화를 추진하는 노선을

취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낙오되기 쉬운 서민, 중산층 하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다섯 분의 마지막 말씀을 모두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시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분이 모이시기 힘들실 텐데 가끔 이렇게 만나실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앞으로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시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2차정당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 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프칸에 있는 우리의 인질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 울입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진행에 앞서 태풍 나리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첫 번째 시간으로 주요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MBC가 지금 현재 동시에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그리고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그리고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이상열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그 옆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여러분 반갑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토론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먼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라는 2개의 주제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의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의제 중 첫 번째 주제는 경제 노동 분야 전문가

들에 대한 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위원과 전체위원의 회의에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국 16개 시·도 및 182개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집해서 현안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토론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선후보 토론을 많이 하는데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정당은 아직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정후보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면 본의 아니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혹은 띄워주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간단한 모두 발언부터 들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여러분이 화면 보시는 왼쪽 분부터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희 당은 6% 수준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현재 총 투자액 30%를 매년 2%씩, 금액으로는 약 20조원 씩 늘려서 5년 후에 40%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늘어나는 투자액 중 절반은 공공부문에서 R&D라든가 대학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투자,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현재 연평균 60억불에서 100억불 수준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10대 성장동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10조원씩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현재 평균 25세인 취업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 정년을 평균 5년 연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다음은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해 주시길요. 발언시간은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김낙성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더웠고 가을에는 태풍 피해, 그리고 지금은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고 또 가을건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방송을 통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이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년 농사를 망

치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취업이 안 되면 결혼도 늦어지고 집안 전체가 우울해 집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경제를 우선 활성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노무현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만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는 30만개도 안 된 29만 5,000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노동 시장에 새로 공급된 인력은 46만 8,0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명 중 3명만 직장을 얻고 2명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청소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신문 광고를 보면 직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어느 대학생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를 창출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도 부족하고, 일자리 질도 나쁘고,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실업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주도의 전략입니다. 투자확대와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팽창시키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서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지방분권체제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고급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용취약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발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노무현 정부 5년간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졌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갈수록 비정규직은 늘

어나고 그나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 볼 날이 없어서 아예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KTX, 이랜드 조합원들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입니까? 또 다시 가짜 개혁정당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까? 진정한 서민의 대표를 뽑아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서민에게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사회자 당부가 있으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선 후보가 나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습하시는 썸 치고 시간 잘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입니다. 토론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1분 30초 동안 토론자가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토론자가 각 1분씩 반응을 하고, 토론자는 2분 동안 재반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IT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한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불안정한 취업자를 포함해서 체감 실업률이 2005년 현재 8.1%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국민중심당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없는 성장, 정부 규제 인건비 상승, 부동산 값 폭등으로 공장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이 늘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고용 불안의 요소도 늘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첫째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투자를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 금융정책과 공적자본을 중심으로 집중 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세 번째,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개발해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기업과 하도급간 공정거래를 통해서 낮은 납품 단가를 개선해 줌으로써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주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확대해서 상위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하위직 생산직에 더 많은 임금지급과 비정규직 임시직의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지금 김낙성 정책위 의장의 의견에 대해 각 정책위 의장께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지금 김낙성 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조업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취업을 유발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서비스 산업과 관계 되어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결국 기획예산처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업에 있어서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재고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국민중심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정된 일자리 개념을 좋은 일자리 숫자로도 봐야 되고 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측면에서는 역시 고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정된 직장 문제는 제조업의 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대신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는데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지에 대해서 제시하실 필요가 있고, 고용 창출형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지배 구조, 노동시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복합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대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선거 때 내는 공약들이 거의 90%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 공약을 하고 이후에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서민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일자리 몇 만개 씩의 어떤 전시성 공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문제의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감기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낙성 의장께서는 문제의 진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IMF 이래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재벌들이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만 해도 일자리 130만개가 줄었습니다. 130만개만 회복을 해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김낙성 위원님께서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또 직업을 알선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양면에서, 질면에서 잘못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이공계 교육을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을 어떻게 개선하고 직업 알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의 구조 관계가 불안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늘기는 합시다만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한구의 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걱정 속에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한 질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보장이 되도록 국가나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노당의 이용대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규제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또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문에 이런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납품 단가를 대기업들이 낮춰서 하청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인데 임금격차,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업체의 임금격차의 근로 환경 전반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특히 임금 60%대에 불과한 임금 격차로 인한 양극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간에 어떤 근로환경격차, 이런 두 가지 양극화로 볼 수 있습니다만 후자의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기업수로 보더라도 99%, 고용에 88%를 우리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큼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에 산업자원부의 조사를 보면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중소 제조업체의 33%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근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상생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아까 형식대로 질문에 대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구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부분은 역시 중소기업 쪽에서 임금 지불능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따져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역시 대기업이 지나치게 하청 단가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태, 소위 불공정 경쟁 행태에 대해서 시정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리시겠다, 이것이 5가지 애로가 있거든요. 인력난, 기술난, 판매난, 자금만, 부지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다음은 이용대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중소기업 자체 기업환경으로 찾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재벌 대기업과의 원·하청 관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 80%~90%가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원·하청 관계라는 것이 사실상 주인하고 머슴 관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더러 세경 올려 달라고 하면 쫓겨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도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받는 부담을 중소기업이 노동조합에서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 단가가 100원 떨어지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임이 내려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근본 원인이고,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악순화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임금격차라든가 근로환경의 양극화 문제, 중소기

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정책이 직업 훈련과 직장 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측면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과,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나치게 고학력화 되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해서 지금 이런 인력이 중소기업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실업 관리의 핵심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같이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고용 비중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장 구매력과 지배력이 큰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최소화 시키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손실을 떠넘기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입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이한구 의장, 이용대 의장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한구 의장께서 이런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 되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판로라든지 자금 부족, 인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용대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납품대금을 지연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특히 통합신당의 김진표 의장께서 직업알선, 직업훈련과의 연계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시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특히 구직자들 입장에서 어떤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는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낙성 의장께서 양극화, 납품단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한구 의장, 이용대 의장께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무엇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묻겠습니다. 이른바 2플러스 5전략, 소위 말해서 청년의 취업 시점을 늦추고 고령기의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고용해야 되고, 고령자도 더 붙잡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분히 마이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것이 지역들보고 투자 많이 하라고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많이 찾다보면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여력도 생기고, 여성을 특별히 배려할 여력도 생기고, 저소득층을 고려할 여력도 생기고,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퍼센트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위 피고용 능력,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을 특별히 많이 활용하려고 할 때 국제 경쟁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확대개편 문제 그리고 노년 계층이 퇴직하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면서 청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섯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부터 1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기업투자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투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내놓을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재벌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범죄행위를 국가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부터 바꾸어서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임금피크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 입장에서 중·고령자가 55세, 64세 노인분들인데 생각해 보라는 것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계시는 정책의 의장분들이 모두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더러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줄이고 역할 좀 줄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온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도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과 같은 시각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묻고 싶은데요. 한나라당 공약이 감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대개 이런 논리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대기업들이 제조업 위주의 투자는 점점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혁신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급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문별 대책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또한 조세 및 사회 보장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대간의 갈등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반드시 확대시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노당 정책위 의장께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만 씩씩이가 작은 이런 고위층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열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2플러스 5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고 결국 일자리를 떠나는 시점을 5년 늦추자는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일자리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기 위해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심지어 대선용

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던데, 결국 정예장군을 육성한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군복무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인지,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2003년 7월에 도입해서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현재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라고 봐지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2분동안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단순히 성장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창출형 성장모델로 가겠다, 병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형 성장모델이 무엇이냐, 지금 분석해 보면 산업구조 쪽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훨씬 고용창출 능력이 큼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주자, 그리고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집중 지원해 주자, 그리고 조제산업보다는 부품소재산업이 고용창출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 또 금융구조도 중요합니다. 지금 DJ 정권들에서 잘못된 것이 금융구조입니다. 금융구조를 흉내 내다가 금융기관은 배부르고 산업체는 고통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을 대야 기업체들이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도 포함해서 금융기관 노조들이 욕심을 많이 내서 사실은 젊은이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도 이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허용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취업자들이 인별브 된 구조로 바뀌줘야 되고, 또 정부가 사회보장금이나 강제기부금을 고용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특히 고용창출능력이 좋은 영세기업들, 5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몇 백만명이 고용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른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것을 보면 보호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정규직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저희는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고, 그 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나라당,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강행처리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어쨌든 비정규직 악법은 철폐하고 향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전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고, 그 핵심은 기업들이 돈 벌기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OECD 가입국이라는 유럽 나라들의 형편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중에서도 대부분 파트타임 형태이지 우리처럼 기간제, 임시직, 이런 이상한 고용형태가 주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미 비정규직이 870만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향후 절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토론자 분들 반론해 주시지요. 먼저 김진표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입법을 할 때도 그것을 대전제로 해서 노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안정의 주축로서 함께 해결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직 노조들이 우선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시행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법을 그냥 없애겠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삼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자고 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가장 취약한 근로자인 취업도 못한 사람, 영세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문제에 대

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임금차별과 사회 안전망의 취약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EU 등 세계적 추세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획기적인 양보와 함께 유연성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과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 보호법의 요체는 결국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요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대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외주용역 하러 법에 적용을 교묘히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다면 무분별한 기업들의 외주용역화를 방지하도록 어떤 비정규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004년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범위로 27%라고 전제했을 때 전부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민주당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체들이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 내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풀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은 보완 수단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충실해야 할 것은 대기업의 경우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느냐, 대기업의 노조들이 지나친 요

구를 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기업 노조들이 그야말로 신이 만든 직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느라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2분 동안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도 묶어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을 전화해 버리면 고용시장이 경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한꺼번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오히려 시장기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쓰면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고용문제의 핵심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고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의 질도 중요한 것인데 비정규직이 직장에 많이 다니면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정규직 전환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놓았는데 그것은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보고, 중간에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연성이 기업들 돈 벌기에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유연성을 먼저 도입했던 유럽 나라들은 지금 이미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해서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 될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반대합니다. 파견법을 철폐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에 모든 것을 기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가 모두 격화되는 것이 시장의 정책이 맡겨진 결과입니다. 우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는 전체 고용이 63.7%에 비해 청년 고용율이 3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0%가 넘는다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58%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실업 문제만 봐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방안이 있으십니까?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청년실업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에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에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면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는데 미흡하고 또 고학력화가 너무 심해져서 중소기업이나 3D업종 취업을 기피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수요측면에서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성장동력산업, 핵심역량,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 전문대학 사이의 삼자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취업하면서 전문대학에도 진학하고, 이후에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고, 대학은 학과별 취업률 등을 공개해서 사회에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기능이라든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알선 기능을 크게 혁신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식대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드디어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8월 13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난에 항의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드디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07년 8월 6.7%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는 19.5%,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감실업률은 30%가 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 청년들은 얼마나 느껴지겠는가, 그래서 청년 실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규제완화, 투자여건 개선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과연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러다 금년부터는 30만개로 일자리 창출목표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인력이 47~48만명, 지금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매년 49만~50만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규 일자리를 30만명으로 목표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문제를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조업이 시원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조업이 시원치 않으면 서비스업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 그렇고, 제대로 된 서비스업,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막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는데 교육규제는 실컷 해놓고 지금 와서 능력은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찌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의 경우 어떻게 한다든가, 장애인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세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세금 내면 누가 투자합니까?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발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청년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실제로 청년 실업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인데요. 그 전에 교육부 총리로 재직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를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하셨고, 대학을 영리 추구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셔서, 일단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면 청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기 평생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진표 의장님 이하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반성부터 철저히 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2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전체 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6.7% 37만명으로 통계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직을 포기했거나 또는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은 청년층에서 500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피부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참여정부가 기간 동안 기업투자가 저조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6%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투자를 20조, 2% 이상 매년 늘려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최소 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에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고, 교육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개혁의 출발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으로 대학에 대해서 GDP의 1.2%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0.5%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 자리를 매우기 위해서 연간 5조원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투자활성화, 모든 정책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도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잘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 운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전환기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자꾸 잘라서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물론 어떤 범주 내에서 질문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먼저 1분 30초 동안 어떤 분한테 하실 수 있고요. 질문 받으시는 분은 역시 1분 30초 내에 답변하실 수 있고, 질문하시는 분이 다시 1분 30초 동안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

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너무 한 분한테 집중이 되면 다른 분이 질투를 느끼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특정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지요.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소수 정당은 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국민한테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면 기업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고, 그러면 또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들한테 왜 그렇게 투자를 기피하느냐고 물어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특히 기업의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이 철폐되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는데 호주에서는 한 이틀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창업기간이 22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이런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1분 3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의 주력은 기업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기업의 고용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투자활성화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습시다만 조세도 감면해 줘야 되고,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용 토지가격도 인하를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수 회복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혁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임금과 노사불안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제공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경제 과제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활성화 재고와 기업을 정신을 고취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결국은 기업투자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의 생각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에 대한 지적을 해주었는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인상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폭 감면해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3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계마다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희 민주당은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여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장을 짓는데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규제가 많이 있고,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저는 김진표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6%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하지도 못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투자가 많이 되면 취업이 더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학교에서 취업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메탈리즘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도전정신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제법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유화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시장이 나빠서 그러는데 내수시장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믿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요, 네 번째로는 전환기의 문제라고 얼버무리셨는데 이것은 전환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식

으로 발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먼저 6% 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의 문제는 첫째, 좋은 일자리, 한달에 봉급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R&D 투자와 적자원개발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학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투자를 늘려가야 하고, 이것은 물론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 주고 산업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소비수요를 꾸준히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아직도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무엇이나 하면 노무현 정권이 좌파이념을 갖고 정책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코드인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서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R&D를 늘리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제법 걸리는 일이고 몇 년 뒤의 일입니다. 5년 가리고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공급사이드 이야기입니다. 수요사이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을 교정하는 방법,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비촉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부품소재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고급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많은 의료, 관광, 교육 등이 해외로 자꾸 나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국내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 믿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서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는 민주노동당의 맞수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니까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고용이 아니라 사회 복지문제로 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 그래서 국가고용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를 떼면 공공서비스 부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문제나 보육 문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 100만개를 정규직으로 실제 새롭게 만들 수 있고,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부분들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7% 성장은 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7% 성장에서 세계 7위가 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그대로 가만히 멈춰있고 우리만 달리면 가능한데 그런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성장과 고용의 연관 고리가 약화되고 거의 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강구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지금은 상당히 저희 당의 정책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한 트랙은 고성장입니다. 또 다른 한 트랙은 고용 창출형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구조 심지어는 사회보장체제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형에 포커스를 두어서 두 가지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이고, 7%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노무현 정권이 시원치 않게 해 놓아서 많은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엄청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산업별로 대책이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 대책, FTA 같은 것을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 대책, 그리고 첨단 성장산업육성대책, 고급 서비스시장 확충,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경쟁

력을 올리는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토론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민노당의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답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치 병 주고 약주는 것인데요. 비정규직 확산법을 통과시켜 놓고 보호법안을 내겠다고 하시고,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양립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성장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나라당에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를 실현하려면 성장만능주의 시각부터 한나라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박근혜 후보도 TV에 나와서 빵이 커져야 나누어 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70년대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37년이 지나 한국 경제가 규모가 세계 11위가 되고, OECD 국가 가입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체 그 성장의 열매를 서민들은 언제나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재벌들이 크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실제 서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 성장의 열매를 함께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잘못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난 5년간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해 왔었는데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제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서 답변할 토론자 지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10% 성장이 과연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 이한구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쪽 열거하면서 이런 것 다 하면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각종 생산성을 높여서 해결하겠다,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4% 후반의 성장률이 7%가 되려면 2~3%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 생산성으로 해결하려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생산성에 성장효율이 현재 30% 수준인데 이것을 두 배 정도 늘려서 60%로 가

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50% 이상 향상성의 성장률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고성장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통신행업과 차이가 성장률은 1% 차이입니다. 1% 차이라면 연구 기관에 의하면 기업규제를 완화하면 0.5내지 0.8%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면 0. 몇 %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보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투입이라고 하셨는데 신이 나서 활동하면 노동투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이 자본입니다. 우리 국내자본만 자본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지금보다 몇 10%만 더 들어오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생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해외시장은 FTA 가지고 만들어 내고, 내수 시장은 핵심부품소재산업, 그리고 고급 서비스 시장을 가지고 우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대폭활용해서 정부 행정 서비스도 달라지게 만들고, 산업의 경쟁력을 곳곳에서 달라지도록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그런데 그런 전략을 대결해 보면 감소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줄이고,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 한나라당에서 열거할 만한 정책들을 들어보면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 교육정책을 한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소를 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공약의 중심부에 있는 소위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같이 경제성이 아주 낮은, 98년도인가 어느 국제 연구 기관이 0.16의 경제성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토목공사를 과거 지향형의, 30년 전에나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토목공사를 벌려서 그것으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투자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

부역할을 줄여가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6%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투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민주당 의장님만 질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장님은 지방출신이시고 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농공단지가 농촌에 들어설 때는 농촌의 값싼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고, 농촌의 농외소득도 증가시켜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가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인력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건비가 너무 싸입니다. 한달에 80~9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앞으로 FTA가 발의되면 농촌 경제원이나 대학교수들 연구 자료를 보면 농촌의 14만 내지 24만의 농업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열 의장님께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방안,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농촌에 대한 실업대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김낙성 의장께서 우리 민주당을 지적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은 먼저 농어민에 대한 피해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비준동의 문제는 다음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시다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목표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인력난, 판로난으로 인해서 대부분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병역특례지정제도를 완화한다든지 아까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

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트와 연계해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알겠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의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는 반드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계속 낮추다 보면 하도급 업체는 봉급도 못 주고, 부품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기업의 제품도 질이 떨어져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농공단지, 특히 지방의 영세기업은 결과적으로 지공과 같이 인력난, 봉급을 못 주고 소임임금을 80~90만원 주니까 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난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모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서 상여금도 주고 봉급도 올려주는데 하청업체는 봉급 주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제도도 정부가 해 주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어음 결제제도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잘 알겠습니다. 정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숫자로 정당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저도 정책자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분의 모습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17대 대선 어떻게 하면 정책선거로 잘 치를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질문을 토론자에게 드리면 각 토론자들이 1분 30초씩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다섯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런 논란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번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공방,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면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정책 매니페스트는 정치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작동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3월 이미 옛날 공약 했던 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다른 당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흑색선전, 또는 후보에 대한 테러행위 같은 것을 해서 선거판을 뒤엎어보겠다는, 한방에 날려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처벌한다든지 후보가 위해를 당했을 때는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통신당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은 공약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말 비슷하게 ‘알깨유, 정부’ 개혁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정책 선거이라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정책 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책 선거가 안 되는 근본 문제는 당에서 내놓는 정책의 진정성의 문제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자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면 정책 선거가 될 것인데, 선거 시기에 내놓는 정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기 공약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께서 실제로 해외 시장은 FTA로 확대하고 내수시장은 부품소재산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FTA가 되면 내수시장이 제일 타격을 입고,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 부품소재산업의 중소기업 부문인데 플러스마이너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이런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사람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포퓰리즘 같은 그런 성격들이 오히려 강하고, 7% 공약 등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는 정책 선거가 어렵고 확실히 나라에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다, 재벌의 나라를 만들 것인지 서민의 나라라고 만들 것인지 입장을 고민하게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정책 선거가 된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율)** : 알겠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선거는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 달성기간, 달성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7% 성장률 공약은 물론이고,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하고 4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장담이야말로 반 매니페스토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10배나 경제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경인대운하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넘도록 환경문제, 주민들의 이해대립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고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한반도 대운하를 과연 4년 내에 실시라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당의 6% 성장목표달성을 위해서 매년 총투자율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어떻게 분담해서 2%씩 총투자율을 늘려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것을 보다 매니페스토적으로 더 보장을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매니페스토 정책이 우리 선거문화를 일신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해 줘야 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되었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정책 선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 풍토는 그동안 그렇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정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기위주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정책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 선거 구도가 정책보다는 인물대결 위주로 흐르면서 좋은 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이 내 건 정책을 정확히 판단할 만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정부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정당한 선거자금의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서 민주노동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소수정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여건입니다만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좋은 정책을 내고 정책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신 울 교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쳐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는 비율은 5%~1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은 정책 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한구 의장, 김진표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도입했던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된다면 저는 이것이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니페스토 운동을 보면 평가요소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보니까 평가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이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만 개선한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는 것이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은 금년 대선이 이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기획단과 자문단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15초 답변하신 분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투표권 부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희 당에서는 이미 권영길 의원께서 재외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취지는 어쨌든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입장에서 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이것이 통과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 만약 대선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타산되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진정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패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해도 재외국민들에 대한 명부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될 텐데 그 명부가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해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외국민이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집 잃은 미아처럼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대선 후보의 거명을 되도록 하지 말아주시시오. 다음에는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의 뜻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단기체류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용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등 공정선거 준비를 하는데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실제로 시일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처럼 이 분야에 관한 저희 정당의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 총선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남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170만, 유학 등 일시체류자가 114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번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39만 내지 57만표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선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 입장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기본정책입니다.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려면 선거관리의 혼선이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 적용하려면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 설치라든가 신분확인 절차라든가 투표방식이라든가 선거운동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정권 행사를 기다렸던 재외국민들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선거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가 공정성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그러니까 영주권자하고 단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거의 범위와 관련되어서, 물론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모두 투표권을 주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년 말까지 헌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가능하면 빠르시일 내에 개정해서 선거를 실시하는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아까 민주노동당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선거인명부 작성,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한 이후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앞으로 세계가 단일화되는 시대가 되고, 따라서 다국적을 인정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내의 인재로서 활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논쟁이 헛갈리는 것이 우선 자격을 주는 문제와 자격자 중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하자는 문제를 자꾸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은 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된 자격자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거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관리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신당 쪽에서는 120만명, 그러니까 단기체류자만 하자, 한나라당은 전부 다 하자, 270만명 대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지금 통신당 쪽에서는 경선할 때 보면 모바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은 자꾸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해야 교민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 양보의 미덕, 여백의 미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파급력도 크고 그만큼 상당히 악영향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운동, 특성상 익명성이라든지 정과성 등으로 흑색선전과 비방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네티즌의 양식이 제일 중요한 데요. 사이버 선거운동이 까딱하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이버 운동이 오프라인 선거운동보다 비용도 덜 들고 선거과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후보자 비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도 후보자 본인은 자기 홈페이지나 UCC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허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퍼지티브한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네거티브한 선거운동은 현재도 각종 법규에 의해서 후보자 비방죄라든가 사이버 선거 부정에 대한 감시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상시 허용 등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보다 완전한 국민 경선이 되기 위해서 저희 대선 후보를 휴대전화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휴대폰의 번호를 주면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대립투표 없이 확실하게 투표할 수 있으면서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선후보, 경선후보를 고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사이버 선거운동에 많은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규규제와 책임성 부과는 당연

히 따라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를 통해 연중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운동이 무조건적 허용되는 자유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운동에 의해서 현실 정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방이라든가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유통은 당연히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는 사이버상의 불법선거 운동은 삭제되거나 단속되기 전까지 일정시간 유포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모임이 결정되고 오프라인상의 지지, 반대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선거 분위기를 과열 혼탁 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선거 운동자도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한 표를 가진 성숙한 유권자라는 책임 아래 정당당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저희 민주당은 사이버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UCC 형태로까지 진화가 되어서 금년 대선에 UCC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이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비용의 감소라든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정책 지향의 선거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이버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난 6월 2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어서 UCC에 대한 선거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93조도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참정권이 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용될 소지는 물론 막아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이것이 별로 악용만 안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난 4년간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68%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통신당의 경우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흑색선전 할 때는 엄중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반대하면서 사이버 하겠다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

선거하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아까 모바일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모든 정당의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해야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심풀이로 지역배분 없이 연령계층 배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발 좀 정당에서 정보윤리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표현의 자유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옹호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나마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서민이든 전부 계급장 떼고 1대 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고, 이런 사이버 공간의 가장 민주적인 조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이버 공간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려고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교양 계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세워 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를 국가의 단속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군사독재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절박한 서민생계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정부 시장 이야기하던 분들이 왜 잘 돌아가는 사이버공간에 대해서는 유독 국가 개입을 강조하시는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더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오늘 토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마무리 발언 기회를 1분 40초 썩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내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 방송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보수정당이 서민의 편인지, 진보운동이 서민의 편인지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과증하는 비정규직 확산법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입니다. 또한 농민을 다 죽이고 한국 경제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기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부개선과 사회복지 확대로 내수경제를 육성하여 한국 경제에 안정적 발전을 이룰 것을 주장하는 책임 있는 진보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의 코리아 연방은 과감한 민생개혁으로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대통령,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이 바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집 걱정,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서민의 5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기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선은 늘 극단적인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선진형 정치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적인 정책 선거가 실현되어야 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고, 선관위가 해석을 받아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국민이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처럼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아니고 매니페스토적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난 4월에 노 대통령이 제안한 1포인트 개헌을 각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또 교육제도를 정권 목적으로 자리를 바꾸지 말고 그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국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바쁜신 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셨습시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사려고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면 누가 국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애국하겠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17대 대선에서는 깨끗한 전문가 집단인 우리 국민중심당이 반드시 집권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도 여성과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농촌도 회생시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선진한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풍성한 수확 거두시고, 그리고 태풍 피해도 하루빨리 복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의 공약이자 최대의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만한 그런 직장이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쓸만한 인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는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을 중산층화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갈 그런 경륜과 능력을 갖춘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 가는 민주당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다음 정부에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산층 비중이 매우 넓어져서 사회가 안정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겨냥해서 한나라당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일자리 창출이 주요 토픽이었습시다만 노무현 정권처럼 좌파이념 가지고는 절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더군다나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일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것은 수입이 좋고, 보람이 있고, 미래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이 왜 잘 안 되느냐, 정부부터 엉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부터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깨유' 그러니까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FTA와 부품소재산업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FTA는 주로 완제품 시장 문제이고 부품 소재 쪽은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명지대 교수 신 울)** :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로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제부터 상당히 자동차가 밀립니다.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아주 적절한 시간에 다 와 주셨고, 오늘 토론의 내용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의 중심으로 서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당에서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1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정겨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여행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당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5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 MBC, KBS가 전국에 동시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원내대표 다섯 분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다음은 민주당에 최인기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 졌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에 관한 각 당의 정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했고, 두 번째 주제는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의견을 수집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면에 있는 타이머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10초 전에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각 정당의 정당정책을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자리인 만큼 특정 후보를 거명하시거

나 또는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소개하시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시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간단한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1분을 드리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기조연설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침 7시이면 집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한없이 안쓰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생활 설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요새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 주저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주름살을 대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비만으로 허리가 휘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막상 대학을 졸업해도 쓸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뿐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더욱더 힘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80대 20 사회가 90대 10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서민들이 더 가난해 지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서민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 희망을 위한 정치, 국민 여러분들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의 인물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교육혁명을 주도하고 계신 서남표 총장님을 주저 없이 뽑겠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학생들은 전액 국비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C학점 이하를 받으면 자비로 등록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B학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수들도 연구 실적이 부진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

산확보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육혁명은 앞으로 대학은 물론이고 중·고교까지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평등주의로는 안 됩니다. 서남표 총장께서 강조하고 계신 타율과 경쟁만이 교육혁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평등주의교육은 이제 정책의 오류로서 인정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타율과 경쟁이 그 열쇠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중산층 가정과 서민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자녀의 교육문제이고, 가장 고통 받는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교육비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참여정부에 들어서 사교육의 광풍이 우리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공교육을 고품질화하고, 품질평가를 통해서 수준 높은 상향 평준화를 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정책기조를 저희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제2의 국어처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과 우리 대선 후보께서는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누구든 적성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300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서 연간 30조원이나 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실패한 이 교육을 정책정당 한나라당이 바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츰차츰 토론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기초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

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고, 각 토론자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 주신 이후 사전에 정해진 토론자와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는 서민가정에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해묵은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각 정당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각 정당의 대책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병든 환자를 치료하려면 올바르게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사교육비가 왜 생겼습니까? 왜 학원 보내고, 왜 비싼 과외비 주면서 과외 시킵니까? 한마디로 입시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은 아직도 대입 같은 고입을 치러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입시지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때문에 학원으로, 과외로 전부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부모들이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33조 5,000억원이 지난해에 들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교육비의 80%가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학입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서열화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학벌 사회가 근본원인입니다. 그러면 학벌사회, 서열화된 대학을 없애면 입시문제, 바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평준화를 통해서 서열화 된 부문들을 비평준화 된 대학 서열을 평준화 시켜서 바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백약이 무효입니다. 총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교육의 체제를 강화해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느냐가 관건인데 미국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운집해 있는 학교에 교사들을 배출하는데 그 학교의 성적이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 교사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서로 서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바라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업성취 의욕이 북돋워지고, 이렇게 해서 저마다 학교의 공교육의 질이 확대되고 높아지는 그러한 성취를 거두어 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고 지금의 근무태만 하는 교사들,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사들에게는 개인용 제도를 실시해서 교사들의 질도 높여서 공교육의 경쟁력, 공교육의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산학연구에서 EBS 교육강좌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시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불어났지, 결코 3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최인기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이 첩경이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의 고품질화를 기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성공했었던 핀란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이 국가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 학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정한 다음에 실제로 그와 같이 달성했는지 국가가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고품질화와 평가를 통한 상향 평준화가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수준향상과 평가 그리고 학생 수준별 교육을 포함한 장기적인 한국 공교육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시와 관련한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공립고등학교를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해서 각기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자율학교로 크게 대폭 확대해 나가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 있는 학생을 양성해 내는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술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80%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의 적성을 살려서 IT 등 특성화 교육

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듭니다. 이것은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00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해 3,000명을 양성 배치합니다. 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절반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시행합니다. 1단계는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 5과목으로 줄여서 선택 응시하게 합니다. 3단계는 대입 자율화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만들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교육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학교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현행의 평균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 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내놓은 것은 300개의 우수 국립학교를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또 같은 학교 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인격적인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학교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금 교사의 역할이 학교 내에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획일화된 시스템 하에서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능력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제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학의 하위권 학생들이 아무리 어학연수를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회 환경 하에서는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국민과의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분간씩 상호토론, 반론과 재반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토론자가 두 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호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먼저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정진석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역사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비가 줄은 적이 딱 세 번 있었습니다. 19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이루어졌습니다. '7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0년도에 과외 금지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입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4년, '69년에 고교평준화, 무시험전형에서 교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부위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부자집 아이들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3불정책을 참여정부는 확대하고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교육비는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어찌면 의아해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치 4배에 달합니다. 2000년도 7조원 규모였던 것이 2003년도에 14조원으로 갔고, 2006년도에 25조원, 지금 2007년도에는 30조원, 거의 우리나라 교육재정 32조원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교육비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이 벼랑 끝 위기와 있는 것은 농민들 때문이 아니고 농정이 실패한 것이고, 사교육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공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실패입니다. 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500만원대 가정이 100원대 가정보다 특목고 진학률이 5배나 높고, 부모 직업이 상위층인 가정은 하위층인 가정보다 명문대 진학률이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537만원에 해당됩니다. 외고,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의 직업을 살펴봐도 교수, 의사, 변호사 출신이 상당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이 좌우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나마 3불정책 교육의 평준화와 어떤 부의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3불정책 자체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철저히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고 보는데 이의 해소책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이십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획일주의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기둥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조화시키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가치가 절대적으로 조화되지 아니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저는 대학 때 자율을 평등보다는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왜 학원의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질이 좋다고 합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학원이 살아남으려면 더욱 질 좋은 학원 강사들을 영입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은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하향 평준화 발상, 지금 민노당은 대학까지 평준화 하자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주의 발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쟁을 인정해야 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최인기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평준화와 획일화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앞에서 한나라당은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는 이미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빼고 모두 자율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학 등록금만 자율화 시켰더니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완전 자율화는 결국 본고사 제도의 부활일 텐데요. 우리는 일찍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문제는 입시라고 보는데요. 대학 자율화, 과연 사교육비를 경감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학 자율화는 대학의 선발권을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는 기본원칙에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학벌위주의 사회에서는 일류대학, 따라서 입시 경쟁이 사교육비의 가장 큰 주범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자율화하는 입시제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자율화 할 경우에는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될 수밖에 없고 본고사가 부활되면 엄청난 과외 열풍, 사교육 열풍 속에서 정말로 서민들, 중산층들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본고사의 부활은 장기적인 과제로 국민적 합의와 동

의를 얻어서, 그리고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제도가 연계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도 이미 외고, 과학고, 자사고, 체고, 예고, 정보고, 인터넷 고등학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위주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특목고, 자사고 사교육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교육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학교가 학원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토론하고, 독서하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전부 입시를 향해서 획일화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교육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부실이라기보다는 입시에 있다고 보는데 고교 완전평준화, 대학 평준화가 해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교육만 가지고는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 82%로 세계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를 희망하는 속에서 현재의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준화를 할 때 상위 5% 정도의 실력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목고도 한정적으로 해서 실력 있는 학생,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능력을 갖는 그런 학생을 배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문제는 극히 예외적, 제한적 범위에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의 상호토론입니다.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사교육비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학벌위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이 확립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점을 매우 강조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여정부 장관들 60% 이상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벌 중시, 학벌 위주

의 이러한 우리 사회 분위기, 사회 풍토를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는 공감대가 서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가져가느냐는 방법론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학벌과 학력위주의 사회가 능력과 실력위주 사회로 하루속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우대받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지금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대학의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를 나왔는가 중요시 되고, 사회에서 그런 특성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풍토가 일반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특성화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와 기업들이 채용할 때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특기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채용문화도 바뀌고 공공의 공무원부터 채용문화를 바꾸는데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재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최 대표님께서 대학을 특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또 동시에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요? 이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주고 그러면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지금의 어떤 확실적인, 교육부가 직접 관여해서 대학교 학생들 임원까지 정해서 그 지침을 따라야 되고 이런 저런 행정제재를 통해서 대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학을 특성화 시키고 자율화 시키는 것과 수능시험을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논리적으로 상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그것은 수능시험을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대학에서는 본고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하면 학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수능 폐지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의 입장에서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뽑아진 학생들을 가지고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과 특성을 갖는 전문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학별로 가장 우수한 분야의 적성 있는 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서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과의 서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의 무슨 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사회에서 그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요시해서 채용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대표와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간의 상호 반론과 재반론입니다.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님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상수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공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 가운데 교육 분야가 특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교육이 집중된 것, 예를 들어서 양질의 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지방학교, 시골 학교는 서울 학교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 되어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만 아니라 교육 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책만으로는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이상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미흡하지 않겠는가,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지원 방안이 다분히 피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지역에도 평등하게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시한 기숙형 공립고교는 지방농촌지역, 중소도시 교고는 지방농촌지역 그다음에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낙후된 지역, 농촌이나 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갖춘 그런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거기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자율 사립고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원하는 지방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은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언 중 특정 후보의 거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 대표께서 재반론 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사교육비 문제의 주범 중에 교육부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쟁력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 교육 정책의 실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입 정책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고등학교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의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는 요즘 시끄럽습니다. 공주대학의 전신은 공주사범대학, 대한민국의 우수한 양질의 교원들을 대거 양성했던 대학입니다. 공주대학교 자체가 브랜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주대학교를 한겨레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반대하고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교육부에서 변경할 때 그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발상, 이런 교육부를 과연 존치시켜 된다고 보시는지...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는 교육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나 학교들의 자율권을 너무나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수능, 논술 이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신에 사교육비 들어가고, 수능에 사교육비 들어가고, 논술에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도 사실은 이런 기술형 공립고교, 자율형 사립고를 하면서도 일반고교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안상수 원내대표께 반론 해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00개 고교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300개를 육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공교육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인 전입금을 현재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낮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자금이 1년에 1,200만원~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결국 귀족학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학교로 육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를 갖춘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운영과 상위교육에 있어서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자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1년에 보통 학교가 140~150만원 든다면 거기는 예정이 40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학제도로 해서 거기에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는 연간 10%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재반론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결과적으로는 300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1,500개가 넘는 일반 고등학교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이 1,200~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개를 예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그보다 낮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 학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형, 자립형 사립학교에 준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장학제도를 둔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장학생을 뽑는 제도 자체부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희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적도 일부 참조하지만 적성검사, 능력, 소질 등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제도의 기본적인 개혁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서 귀족학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각 학교가 교육부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면 장학금으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김효석 원내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저희 민주당이 똑 같이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의 수요를 줄여 나가자는 원칙에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품질을 평가하는, 따라서 전반적인 공교육을 상향평준화 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육 강국인 필란드에서 이미 적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서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저희와 방향이 같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민주당의 최인기 대표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정책의장 원내대표를 하면서 교육정책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은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내놓은 정책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평준화로 가면서도 경쟁 체제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쟁체제가 되어야 어느 정도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정부에 300개의 우수 공립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장도 좋은 선생님을 뽑고, 교장 선생님만 달라져도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잠실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반론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수 고등학교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은 한나라당의 300개 고등학교 육성정책과 숫자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300개 이외의 고등학교와 지원의 차등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고등학교를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든 정밀한 계획과 추진방안이 뒤따라져야 될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상향시키지 않고 몇 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결국은 학교 간에 차등이 생기고 그 학교를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지키면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300개의 공립학교 부분은 시행이 되었듯이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 고등학교는 어떤 형식이든 입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서 중학교

가 자유로운데 중학교까지 결국 사교육의 열풍에 몰아넣는 결과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300개 우수 공립학교는 입시를 보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학교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전체 고등학교에 5% 정도는 자사고 형태의 기숙형 사립학교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경쟁구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지금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요 5개 정당 원내대표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신당의 공약을 보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적 실시 1,400억원, 그다음에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8조 9,000억원이 듭니다. 또 외국의 무상교육 등 모든 문제를 무료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심정책, 교육의 기본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무이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학자금 무이자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학자금을 장기로 빌려 써서 평생을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지 2, 3년 되었습시다만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미국 같은 곳도 보면 일단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부모가 잘 살아도 부모한테 학자금을 받아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학자금을 빌려서 쓰고 평생 동안, 20년~30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경제적인 제도와 교육복지적인 제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믹스해서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대개 1,400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8조 9,000억원이 예상되고, 또 외국어 무상교육을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사교육비의 거의 절반이 사실 영어교육에 있습니다. 영어 교육하는데 사교육비 절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게 드는 교육비가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10 몇 조원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 거액비에다 10 몇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말하자면 무료로만 한다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느냐,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더 양성해야 되느냐, 경쟁 논리를 도입해야 인재가 양성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도외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저희도 평생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33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분의 1만 줄여도 11조라는 돈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교육을 점차 경감해 가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표께서 천 대표께 반론 토론을 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민노당의 정책을 보면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제도를 도대체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비 10% 지원, 학비, 기숙사 비용을 제공하고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또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기숙사를 지은 공립 고등학교를 약 300개 만들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보는데 민노당은 사교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입시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된다는 것, 서열화 되어 있는 한 대학입시를 지금처럼 사교육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에서 한다, 이미 학교가 학원화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에 시준별 수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재정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6%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재정에 13조원이 추가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과 대학의 등록금 일부를 다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대학입시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신이라든지 현재는 수능, 논술 3가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사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그 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예를 들면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학교 내신 성적도 조금 참고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소질, 능력, 학교장 추천, 사회봉사를 한 성적 등을 종합해서 꼭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좌우되지 않고 특성과 자질에 따라서 학생을 모집한다면 타당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는 동의입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 흥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대를 정점에 두고 출세 우기식의 서열화가 되는 한 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부터 우선 통합해서 평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적성, 흥미, 자질에 따라 학생들을 뽑고 대학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학위제를 두면 됩니다. 똑 같은 졸업장을 주고 서열화를 없애야만 입시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대학을 특성화 시켜야만 대학의 경쟁력도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김 대표께서 천 대표께 반론 토론을 1분간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교육복지라는 개념과 교육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명제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경쟁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82%가 대학을 갑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국민의 15% 정도밖에 대학을 가지 않았습시다만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을 배출해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품 수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인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창의적인 인재,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바로 다양한 교육, 창의적인 전임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간을 배출해 내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육, 전부 다 밤늦도록 도서관에 앉아 있고,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합니다만 서로 암기위주식의 이런 교육입니다. 사실 사회에 나와서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이 획일화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서, 토론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런 전임교육을 할 때만이 바로 국가 경쟁력도 여기에서 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본보기가 핀란드라고 봅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OECD에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권에 드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말씀에 이어서 우리 대학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더 타임즈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200개의 대학 내에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10개, 일본이 11개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 싱가포르는 4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쓰고, 사교육비를 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대학들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인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해 GDP 0.5%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1.2%를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보면 대학도 평준화를 가져가는 개념을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이 문제는 사람이 문제이고, 기본 기조와 관련되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열 중심의 그런 어떤 대학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대학의 평준화가 절대로 획일화가 아닙니다. 학문 별로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학과도 서울대이고, 수학과도 서울대이고,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선 수학은 부산대이고, 물리학은 전남대이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은 충남대이고, 이런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학문 체계를 특성화 시켜갈 때 그 대학은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서열화 시킨 서울대를 정점으로 이렇게 되어 갈 때는 사실 대학 간의 경쟁력도 없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빼고 다른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

화된 그런 대학체제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국민중심당의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서 정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영어가 참 어려운데,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유치원 아이들부터 영어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사교육비 내용을 보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사교육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배우는 단계에서 영어를 같이 가르쳐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가 30조원인데 그동안 절반 정도가 영어교육에 충당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모두 말씀대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북한의 학생들도 열심히 영어회화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영어의 중요성은 이념을 떠나서 어떤,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를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부에서도 사실은 영어교육을 강화해 왔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요체는 영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것, 우리가 고수하고 수호해야 할 우리의 정신문화, 가치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김 대표께서 재반론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학교에서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졸업해서 사회에서 영어를 쓰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쓰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의 부분과 영어 부분을 한나라당의 정책 중에서 보면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와 역사도 영어로 가르치자는 내용이 있는데, 국어와 역사는 과목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혼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치

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전체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또 과연 영어 수업을 국어, 역사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께 물어야 될 것을 저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약 중에 우리나라 국어, 국사까지 영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결국은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우리가 영어교육을 받아도 문법독해 위주의 교육을 받다보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부터 영어교육 학습의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영어 학습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대폭 수용하고 흡수를 한다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사교육비 경감 문제를 가지고 5개 주요정당 원내대표들과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지정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토론 지정 후 향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씩 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대표께서 토론자를 지정하시고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아까 김효석 대표님과 안상수 대표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나 하면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투입되는 재정비 부담을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당부분 인기를 얻기 위한 퍼퓸리즘까지는 아니겠습니까만 그것은 조금 과장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우리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 규모를 차지한다는 영어 교육을 공교육이 흡수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사교육비 절감공약의 요체입니다. 그 역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영어교육을 초·중·고·대학 나와서 미국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으려면 지금의 영어학습 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고,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다른 방

식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나라당의 영어 교육 강화 방침도 결국은 돈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국어와 역사도 가르치느냐, 그 뜻은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그 과목도 포함되었다는 뜻이고, 지금 영어로 수업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매일 영어로 하면 영어가 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영어가 다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교사를 매년 1,000명씩 새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2,000명은 기존의 영어교사들을 연수 시켜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3,000명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거의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없습시다만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해서 많은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지침을 그렇게 하면 적어도 써먹을 수 있는 생활영어는 대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답변하실 분의 준비를 위해서 먼저 지정하시는 토론자를 정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대표께서 먼저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은 3단계에 걸쳐서 대입제도를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해 놓았습니다. 이 제도가 갖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제1단계라고 하는 수능과 내신 성적을 대학에서 자유롭게 그 비율을 채택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1단계로 봤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내신보다는 수능 위주로 채택의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사교육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학생의 일시 부담은 줄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이 기초학문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의 자율화로 선발시험으로 완전히 맡길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사교육 광풍이 다시 한번 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언제까지 3단계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질문 감사합니다. 1단계는 대학이 내신이라든지 수능 반영을 자유 스럽게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입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검사도 하고 소질검사, 외부추천, 사회에서 봉사한 것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조금 줄이면 과목당 모두 과외를 하는데 조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체능계 하시는 분들이 꼭 수학 과목의 수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수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과외비가 듭니까. 그래서 예체능계는 그런 쪽을 안 하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선택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저희들이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고사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겨서 어떤 방법으로 뽑든지 다 자율로 맡겨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단계 대학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 3단계를 실시하자는 것이지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자유지정 상호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대표께서 토론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해마다 조기유학 하는 사람들이 거의 3만명, 연수까지 하면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영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약 1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줄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조기유학에 대한 말씀이지요?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그리고 문제점은 아까 조기유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따로 살고 있고, 필리핀이니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산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기러기 아빠 문제는 TV에서 보면 참 안스럽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은 똑 같이 출발하고 있

습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풀어가는 방법과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라든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등학교 입시가 없는 우수공립학교를 만들자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으로 내실화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수요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조기유학의 수요를 우리가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불만족스러운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개 층은 조기유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교육이 해결해 주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자유지정 토론자를 정해 주시고 반론토론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제가 한나라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출발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나라당은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사고를 확대해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우수학교를 만들어가자는 발상이신데 한나라당이 모든 정책에서 그런 철학과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자면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승자만 살아남는 그런 교육에서의 제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이 됩니다. 무슨 능력으로 뽑는다, 자유로 뽑는다, 적성검사로 한다, 어떤 이름으로 붙이더라도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과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나라당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열등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열등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명제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깡패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로 갈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혹시 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려하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는 그 대상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강국이라든지 낙후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정글의 법칙입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입시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기숙형 공립고교는 다 지원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성검사라든지 소질검사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뽑는데 무슨 입시가 부활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와서도 2003년도에 33만원 하던 사교육비가 2006년도에 4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 보고자 하는 우리 개혁의 프로그램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지정 상호토론 마지막 순서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반론토론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저도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귀결되는 것이 결국에는 학벌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학벌 위주가 큰 사회의 문제로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신정아 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성골이고, 고대·연대는 진골이고, 나머지 대학은 천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벌이 신분이 되는 사회, 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데요. 사실 학벌이 중심이 아니라 능력과 인간의 됴됨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학은 쉽게 하더라도 졸업은 어렵게 해서 대학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특성화 시키는 어떤 학문 체계를 갖춘 이런 대학의 평준화, 이런 부분이 결국 학벌 없는 사회, 학벌이 지배하지 않는 능력과 사람, 인간 됴됨이 중심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학벌을 가지고 학벌을 조장하는 체제는 빨리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고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가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처럼 의학은 어느 대학, 법학은 어느 대학, 이렇게 해서 각 대학이 특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특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중점적으로 키우는 과목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을 뽑을 때에도 그 소질, 예를 들면 법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 공학에 있는 사람, 의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 등 적성검사를 거치고,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시켜서 학생들을 뽑아낸다면 그것은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사회는 타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처럼 대학을 그런 서열이 아니라 특성화시키는 그런 교육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한나라당이 제시한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대학입시도 자율화 시켜서 맡겨야 되지 내신, 수능, 논술 다 보라고 해서 확실적으로 자꾸 교육부가 강요해서 획일주의 교육을 강요하면 결국은 서열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5개 주요정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라든가 또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경쟁논리의 도입, 그밖에 영어교육 등에 있어서 각 당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을 두 번째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토론자 여러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시간은 각자 1분 30초 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비용 제한액을 465억 9,300만원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규모로 보아서 이만한 자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보듯이 과연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거자금 마련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선거자금 모금이 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사법조치가 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 지루한 정치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이야말로 이 같은 과거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당의 선거자금 조달방안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의 믿음이 갈 수 있는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최인기 원내대표의 답변부터 들겠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선 우리 국민들은 선거자금, 정치자금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검은 돈, 불법자금, 차떼기의 정치자금 조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순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국민적인 공감을 초대해서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을 대폭 고쳤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한도를 줄이고 또 후원을 하는 정치인에게도 후원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특히 무엇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정당국고보조금으로 기탁금과 같이 주는 돈과 정당이 장비를 통해서 모금하는 이 두 가지 방법, 그리고 국회의 경우는 후원의 제도를 주어서 일부 한정된 것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군소정당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비의 모금과 투명한 당원들의 협력에 의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대표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참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선거보조금으로 114억 정도 나옵니다. 경상보조금이 28억 5,000만원 나옵니다. 나머지 대선 선거비용은 전부 당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다 합쳐도 142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320억원은 당비를 통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되는 대로 당비를 모금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선거를 치르자, 이명박 후보도 클린 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선거, 깨끗한 선거하자, 그리고 법정 선거 비용해서 하고 불법적인 선거모금은 이제 일체 하지 말자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전에 차떼기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기억을 1,000억원 되는 천안연수원까지 국가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법선거자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내에서 그것은 엄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자금조달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이면 다른 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50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대통령 선거가 이때쯤 되면 기업의 총수들이 전부 장기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선거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많이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선거 역사상 17대 총선이 가장 깨끗하게 치러지는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선거가 많이 투명해 졌고, 특히 소액다수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465억 정도 선거자금을 만들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당도 선거보조만 120억원 나오는 것 외에 경상비라는 것은 일반 당 운영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당비로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치개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천 대표께서는 어떤 조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은 매월 1만 원씩 내는 진성당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비대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당원들이 대개 특별당비를 냅니다.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번에도 그렇게 당원들이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른바 교섭단체, 두 거대 정당의 대표께서 정말로 이번에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나마 국고보조금이 주로 독식하다시피 큰 정당으로 다 갑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세 정당들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제가 뒤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줄여서 대선 후보의 후원회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경제논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정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뜨거운 감자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정계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당원들도 중심으로 모아서 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모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의 정 대표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저희 당은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460억 원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60억원은 커녕 100억원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당에게 이번에 보조되는 선거비용이 1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민노당이나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억원 내외일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 비하면 한 100억원 이상을 덜 받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선거 공영제 취지와는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일단 교섭단체에게 50%를 떼어줍니다. 나머지 군수정당은 그것 가지고 나눠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당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이냐, 돈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안 치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노당, 민주당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중심당이 제시한 것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중심당 후원의 문을 두드려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선거자금 조달 문제는 지금 각 당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은 과거 선거를 통해서 선거비용 지출의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비용은 법에서 그 지출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는 많은 음성적인 지출을 통해서 국민의 실망을 낳았습니다만 선거 후 회계장부열람이라든가 또는 사본 교부 등의 사후검증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각 당의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얻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질문으로 1분 30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선거비용 지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비상한 결의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난 번 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 때문에 한나라당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와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 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출요건과 절차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돈 쓰기도 힘듭니다. 불법도 지출하려면 불법모금을 해야 되는데 불법모금 자체가 이제는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는 그야말

로 클린 선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출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클린 정치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클린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클린 정치기구에서 정치자금이 나가는 것도 전부 감시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시망을 두텁게 해서 이번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선거를 한번 치러서 그야말로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기능은 더 강화하고 또 불법모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또 그 요건,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결의를 보이시겠습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참여정부 이후 정치관계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법 등 우선 선거비용의 지출을 세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는 면세를 폐지한다든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50배의 과태료를 매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당법의 경우에는 지구당의 궤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하도록 하고, 이 계좌를 단일계좌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의 경우에는 특히 120만원만 넘어가면 기부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지출을 줄이고 투명화 해 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당들은 지금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의 대선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도 특히 한나라당이 저렇게 다짐해 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셔도 된다, 불법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께서 당의 결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거대 정당 두 대표께서 다짐을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현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비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법정선거운동에 쓰는 돈은 어디에다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용처도 다 나오고 총액 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선거운동기간 그 이

전에 쓰고 있는 정치활동 비용은 제한도 없고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통제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우선 선거자금 비용 재원마련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덕이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향후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 부패에 대해서는 감시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온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중심의 정당운영부터 해서 안팎에서 많은 다수의 어떤 감시, 민주적인 운영에 의해서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정 대표께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생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있고, 선거 때 군중동원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선거 때 군중동원하면 머리수 꼽하기 1만 5,000원 계산해서 나올 정도로 자금이 투입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7년 대통령 선거 기자 때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노태우, 김대중 씨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군중 모으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의도 광장을 꼭 매워서, 전국에서 끌어 모아서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경쟁을 했거든요. 그것이 다 돈입니다. 그것을 일절 못하게 되었으니까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의 당선을 위한 이런 행위의 상관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음성적인 자금 거래가 오갈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시가 점점 강화되어야 되고, 저희 국민중심당의 경우 지출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남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거자금을 1일 공개할 것이고, 지출에 관해서 선관위 조사를 받기 전에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투명한 감사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비밀 없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자금지출을 할 것입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투명성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달될 정치자금의 지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법으로 상당히 엄격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서면으로 하면 답변해 주고, 일반 공개를 3개월 정도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선관위 검사 별도로 인터넷 같은 곳에 상시로 공개해서 유권자가 근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출의 투명성 문제는 정치 지도자와 각 정당들의 각오와 다짐, 결연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고 불법적 용도에 쓰지 않겠다고 하는 주체의 의식개혁,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주체에 대한 감시, 감독 또 언론의 관찰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투명해 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와 비해서 지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책인들의 의식개혁과 관련된 문제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지금까지 선거비용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치자금관련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보는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이란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원가라는 말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정치부패의 온상이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아픈 경험들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자금의 현재,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선거비용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자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요. 먼저 김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현재 정치 자금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 3월, 그러니까 지난 17대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계특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방향은 옳게 잡았습니다.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후원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활동하는데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자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실상을 제대로 미흡하게 파악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법정선거비용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당에서 전부 법정선거비용 465억원, 못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 자체가 지금은 미디어 선거, 인터넷 선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면 그것은 포탈 내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도 인터넷 선거라든지 미디어 선거를 대폭 확대하면 좀 줄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결국에는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불신이 아주 심화되는 속에서 결국에는 고비용저효율 정치, 선거,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법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다면 역시 그래도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자금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누구나 다 정당 정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다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시급한 현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해서 선거 치를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100억원을 주면 50억원을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5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지금의 제도는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야말로 선거공영제에 맞는 그리고 소수정당 육성의 취지에

맞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먼저 방울을 다느냐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누가 먼저 말을 못 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법이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후원회 모임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치인을 정말 지지해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밀고 싶고, 그런 정치인을 육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모임을 갖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정활동이 나름대로 보람도 얻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회마저 완전히 봉쇄돼 버리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개정 문제를 18대 국회에 가서는 한번 솔직하게, 아까도 용기 있게 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한번 제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최 대표님의 답변 들겠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선 정치자금법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2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인데 그 선거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의 후원회와 개인의 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대선에서 46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당의 후원회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당 후원회와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당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방식이 교섭단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득표율로 전환해 주는 것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석 이상의 정당에게만 국고보조금의 전체 50%를 나누어주는 것은 양당의 독단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미국 같은 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치활동 모금단체를 허용하는 문제와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토대위에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안 대표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방금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대선 불법선거 자금파동 이후 정치자금법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정치권 스스로 자신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제

도대로라면 각 정당들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당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빚 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전부가 빚을 지고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돈 빌린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돈 잘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지금 연간 120만원 이상 되면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원들한테는 후원금을 잘 내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80만원, 90만원 이렇게 자꾸 쪼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되니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지만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 30초동안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했거나 또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은 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 대표부터 시작하십시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정책 하나, 정당정치 한 대목 안에 그 당이 추구하는 미래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의 틀을 깬다는 것은 결국 부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귀족교육, 서민교육으로 나누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틀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고 오히려 강화해 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곧 대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이당, 저당 여러 정치 세력한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90대 10의 사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왔습니다. 이번 대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역전의 정치를 민주노동당이 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펼쳐 가겠습니다. 서민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에게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가운데 앉아 있어서 국민중심당 토론자가 제대로 중심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50여일

남았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의 삶이 계속 이런 식이어야겠다는 가라는 점을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중심당,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실용주의 노선을 처방하면서 이념대결이 아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18대 국회에 개헌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모든 이익과 권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드리는 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50년 전통을 가진 유일한 전통 정당입니다. 경제를 살리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서 이번 대선에서도 중도개혁주의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산층 강국,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사회가 안정된 그런 토대위에서 각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바로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도 바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중도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교육의 개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위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투명한 지출 문제는 거대 정당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저희 당도 분명히 지킬 것이고, 다만 이 문제는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 개혁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감시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이 바로 용 나는 개천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 가난의 되물림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적성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또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가난의 되물림이 끊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나라당의 교육비전은 똑똑한 인재만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평준 하향의 눈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점점 교육 여건은 악화됩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우리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잃어버린 지난 10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효석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가지면서도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우리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일류 학교를 고집하는 한 이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력 위주로 평가하고 채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러한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육제도는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제발 입시제도 좀 손을 대지 마라, 교육제도를 자꾸 바꾸어 손을 대면 댈수록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가족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열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회 (경기대 교수 엄길청)** : 예, 알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했던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교육비 경감과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에 관한 토론을 여러분의 성원 속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공동으로 중계 방송한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송재룡 교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12월 19일에 실시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선거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주요 5개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KBS, MBC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섯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최인기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반갑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천방식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주제는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당내 후보자도 확정되었고, 각 당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에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각당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면에 보이는 타이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토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자당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상대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이든 후보자에 관련한 표현은 삼가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자 여러분의 간단한 인사말로써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년 전에 청계천 피복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 몸을 스스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일요일 한전하청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분신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습니까? 37년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0명 중에 60명이 비정규직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득격차는 날로 더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경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지만 어떤 경제이냐가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지는 몰라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권력을 잡으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하시지요.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제 12월 19일이면 우리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로 말미암아 하루에 36명의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약육강식 그 자체인 정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대위원장님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고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낼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이 검증된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중국이 달나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쟁은 초라하게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청년 10명 중에 4명이 실업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울한 현주소입니다. 부패하고 오만한 정당,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정당, 편 가르기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무능한 정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대위원장입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시대의, 이 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바로 정말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러나 혈투, 인심공격이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정책으로 깨끗하게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믿음을 드려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인기 선대위원장입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중도개혁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지향하면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더욱 폭을 넓혀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듭으로써 선진한국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은 한결같이 정치인들에게 정말 정치인들 돈 받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선거운동 과정의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그와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정책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념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앞에 질문함이 있는데 이 앞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다섯 글자가 쓰여 있는 질문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봉투 안에는 1개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가 이 5개의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선택하시면 사회자가 해당 봉투를 개봉해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그 질문을 대답하신 후에 다른 토론자와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 의거해서 사회자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를 고르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대’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해 왔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매년 관건선거의 시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관건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특히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또 내무부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어긋나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건선거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선거관리 업무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관리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국민적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또 한편에서는 일부의 특권적 언론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일방적이고 억울한 선거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새로운 우리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근태 선

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두 토론자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진석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 위원장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관건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현철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각 정당의 후보든, 누구든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대통령 역시 당연히 중립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특정정당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예가 있었고, 특정정당이 직권을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한반도 대운하에 투자하겠는가,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발언들을 하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대통령, 국가의 최고 지도자, 최고 공무원이 이러한 특정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자기가 미는 특정후보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립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근태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국세청, 국가기관들입니다. 권력기간들은 절대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국정원은 그야말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말하자면 부패척결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렇듯 저렇듯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도 수십 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심지어 20년, 30년 전의 거래까지 파고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개입은 명백히 관건 선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비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이 과연 적절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시기의 군사독재시대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중립, 선거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중립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 대통령 중심제 사회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광범하게 보장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 중립, 선거의 중립을 더 이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그렇게 예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범여권후보를 지원하는 성격의 선심성 공약, 이런 의심은 가지만 또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차원으로 포장되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대학등록금 후불제라든가, 최근 2단계 균형발전 공약, 반값아파트,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나 부처간 협의 같은 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정부가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자극할 만한 정책들이 꼬리를 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관건선거 개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공업무와 대테러업무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중요인사들의 뒷조사를 하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명백하게 국정원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고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제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통합신당과도 정책협약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래 기다리신 다른 두 토론자들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선대위원장부터 김근태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근태 위원장께서 방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선거법위반으로 4차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특정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무는 위반했지만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결정을 지난 6월에 내렸습니다. 서민들이 5,000원짜리 식사만 대접을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과 비교한다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정책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임을 유보했던 선관위의 결정은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께서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어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관리중립은 지켜야 되지만 선거중립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합신당에서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후보인양 이 선거에 공공연하게 개입을 해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위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러한 발언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정당치 않다면 왜 대통합신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가 한 때 대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대통령께서 제 언동에 대해 품평도 하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또 비판을 했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선거관리 중립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독재시대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정보수사기관이 움직이고, 권력기관이 움직여서, 마침내 내무부 직원들이 움직여서 선거에 개입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한 대로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거관리의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선거와 정치에서의 당파적인 견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견해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또 국법준수를 해야 할 최고의 집행책임자이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법이 고쳐진다면 거기에 따라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분명히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고 있는 마당에 국법준수의 최후 보류인 대통령께서 현재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헌법기관의 존엄성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다음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특정 당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을 보면 대통합신당의 당원이나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거나 또는 행정도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으라거나 마치 특정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신당의 당원처럼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이에 대해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현행법 위반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위와 경고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면 그러한 선택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적절하나, 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또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초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 같이 행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그 정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4개의 봉투 중에 어느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선진한국을 염원하면서 '선'자를 택하겠습니다.

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선’자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바람직한 후보자 검증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특색선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이길 수 없는 후보자가 막바지에 동원하는 수단인데 이는 선량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아주 비열한 범법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네티즌을 동원한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대선을 의식하여 특정후보자와 관련된 공방이 치열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상대후보 흠집 내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후보자 검증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방에 밀려 또 다시 정책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후보자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오랜 기간동안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선거의 경우에 선거 1년 전부터 모든 언론이 총 동원되어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 살살이 뒤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이 엄격하게 존중되는 나라이지만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공직 후보자들도 어느 정도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행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충분한 검증기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실제적 진실의 바탕에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대통합신당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명박 후보 검증국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검증의 개념이 타당한지요.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다음에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특정후보의 검증은,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나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같은 질문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같은 것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해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진정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비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켜서 세뇌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국감이라는 것을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후보 홈페이지 내기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항의를 많이 했지만 결국 국정감사가 시종일관 그렇게 시작했다가 끝났습니다. 과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후보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1당과 제2당, 대통령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공방 또 비방,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폭로를 보면서 국가장래를 결정해야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축전의 장이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분열되고, 비방하고 갈라서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진적인 정치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후보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선진선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흑색선전 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표를 주지 않는 국민의식운동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위원장께서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분 토론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정감사의 장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민의의 정당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를 잘 집행하는지, 그 세금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잘 추진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전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민생, 정책 감사는 실종되었습니다. 검증, 비방과 흑색선전이나의 경계가 다소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략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곧잘 무차별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 선거를 돌이켜 볼 때 흑색선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였을 것입니다. 선거 막판에 상대방 쪽에서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내세워서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회창 총재의 측근이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주장 또 후보 부인이 기안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거가 끝난 이후에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50만표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 후보의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이런 흑색선전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과거에 후보자셨지만 가능하면 후보자 이름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과거의 경험, 2002년 대선에서 흑색선전에 의해서 왜곡됐던 경험을 살려서 허위사실을 공포하면서 그것을 제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개혁특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당인 대통합신당에서 정치개혁특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우리가 필요한 법안, 말하자면 비방을 금지하고 후보자를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검증하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결과적으로는 흑색선전을 한 후보와 정당은 분명히 엄한 처벌을 받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 두는 것이 저는 절대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권자들의 의식의 혁명, 또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근거 없이 하는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사법기관에서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주는 현행법 하에서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풍토를 법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법 운용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뜻도 함께 모아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정진석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최인기 위원장님께서서는 질문 대신에 소신

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개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여러 가지 선거관련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정략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선거라는 광장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경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형성 과정, 학력 그리고 기본적인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켰는지 또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초 자료가 선거운동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넉넉한 시간이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두 분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선대위원장부터 정진석 선대위원장에게 반론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가 국회의 법사위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법사위 국감이 오늘 끝났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상대방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이른바 흠집 내기 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의혹도 제기해 달라, 흠집이라도 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후보검증은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왜 국감장에서 이러한 후보검증 공방이 오갔는가, 그것은 검증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각 정당에서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경선 그리고 대통합신당의 경선과정에서의 후보검증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선출된 뒤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경우에 후보경선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면 중도하차할 것이니,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살 수밖에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꼬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도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후보검증, 당내 검증이 실패했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협력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보다 공정하고 명량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색선전은 안 됩니다.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한나라당의 모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이 '90년대 초에 흑색선전을 당원 전단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흑색선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검증을 안 해도 된다, 또는 검증을 소극적으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더불어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곡동 땅과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은 60%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검증의 과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분 토론자들께서 반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과연 성공한 검증이 있을까요? 아마 선거 전날까지 검증은 계속 되겠지요. 결국 이 검증의 노림수는 상대방의 약점과 흠집을 드러냄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에서의 검증은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경쟁 또 구체적인 어떤 단서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인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이고, 대통합신당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새롭게 건강한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만든 신생정당이 과거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책은 실종하고, 구태의연한 공방으로 치중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모든 정당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새로운 의식전환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 각 정당에서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의 선거 이후

로 미루겠다는 태도입니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무죄이다'라는 식으로 각종 의혹이 있어도 검증이 안 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전부 사면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도곡동 땅의 경우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식의 판단을 검찰이 내려놓고 나머지 판단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산악회를 통한 불법사전선거운동도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검찰이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해야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흑색선전, 흑색비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국회가 확고한 신념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증을 막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됩니다. 이 흑색비방과 검증 사이에는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광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유력한 후보들은 각종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또는 상호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증에 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답변, 자기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수사당국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노력은 한점의혹 없는 규명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월 19일 현재 법무부에서 종합한 선거사범유형별 유권현황을 보니까 금전사범이 64건, 흑색선전이 107건, 불법선전물이 19건, 기타 117건해서 16대 대선선거사범 72건보다 무려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또 과열이 있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댓글달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선거문화가 좀더 치열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검증은 완벽한 인간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검증무용론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증을 하되 검증을 올바르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주요 5개 정당의 선대위원장들과 함께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3개의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마지막 ‘거’자로 하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거’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는 그의 공약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득표를 위한 지키지도 못할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이제 유권자는 선거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공약이 실제 필요한 공약인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판단할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동참하고 있고 얼마 전 각 정당의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천협약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저희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을 했고 또 그것이 정말 이번 선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인신공격, 흑색선전 없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19세기 영국에서부터 발달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하는 후보는 절대로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재원까지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으로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금까지 한번도 비방한 일이 없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두 분의 토론자로부터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기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려면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그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대운하 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운하는 유럽에서 18세기에 운송수단으로 발달했었던 교통물류체계입니다. 19세기에는 철도로, 20세기에는 도로로 ,그리고 21세기에는 정보고속도로가 소통되고 있는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운하가 담당하는 물류수송의 비중은 전체 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운하 건설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17조원 정도 추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대운하가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재원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맞는지,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으로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듣기는 참 좋은 것 같고 실현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현실이 가능한 것이냐, 돈 계산은 해 봤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국정책학회로부터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약이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당시에 모든 정책공약에 대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하는 비용을 추산했고,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조달방법까지도 함께 모든 정책에 첨부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에 돈이 드는 모든 정책공약에는 반드시 이 예산내역을 그리고 자금조달방식을 첨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듣고 싶고,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20조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연한 예산조달 방식으로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통과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두 분의 반론이 있었는데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는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노회찬 위원장이 주로 민노당 정책공약

이 잘 됐다는 것을 선전하시는 것이니까 별로 답변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재원 부분은 역시 저희들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주제와 어긋나는 구체적으로 대운하가 적절한지의 부분에 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대운하 부분은 그야말로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또 재원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운하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물동량이 이렇게 빠른 수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늦게 수송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어야 되고 또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공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운하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삼면이 바다이고, 내륙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과연 경제물류로서 또 유류가 많이 드는 운하를 이용해서 물류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수심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터널을 뚫고 관문을 만들고 하는 방식의 좁은 국토 속에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실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계획과 재원조달이 결합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들었던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치공약이 과연 합리적이냐, 필요한 것이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후보의 정치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평소의 소신까지도 함께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신당 후보의 경우 얼마 전에 한국군이 세계용병의 공급원이 되도 좋으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경제외교

를 위해서 희생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라크 파병 연장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분이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16대 국회가 해야 될 마지막 책무는 이라크 파병 동의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운하 부분은 물류에서 느리다, 물론 상품을 빨리 수송할 것은 비행기로 해야 됩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느리게 해도 되는 것은 기차로 해도 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빨라야 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라든지 광석이라든지 큰 양이 필요하고, 그러나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운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운하가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은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자이툰 부대 파병을 찬성했다가 이번에는 반대한다든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용병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철학과 소신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태 선대위원장부터 안상수 선대위원장에게 반론해 주시지요.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매니페스토라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텐데, 좀더 쉬운 우리 말로 바뀌어서 이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중요한 것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 선거를 회화하고 정치를 회화합니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무책임의 극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매니페스토 협약을 할 때 한나라당의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사진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말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찬성하지만 실제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합니

다. 법인세 인하를 특히 주장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호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열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 기간, 재원의 조달, 상호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참공약 실천운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 분들에게 내놓은 공약을 참되게 실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받아서 다음 집권의 기반으로 삼는 이른바 책임정치를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장님께서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무책임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과연 매니페스토 운동의 함정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김근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 무책임제가 되기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연합을 통해 가장 큰 공약이 무엇이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도 중간평가 한다고 공약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지켰거든요. 누구 하나 책임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책임정치를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을 분산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마디로 저희들은 ‘정책선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신공격 이런 것 하지 말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자, 저희들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협약식에는 한나라당의 후보가가 참석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다른 당에서도 선대위원장이 참석한 당이 꽤 있습니다. 다만,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정책으로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검증되는 체제가 과연 대통령중심제가 좋으나, 내각책임제가 좋으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내각책임제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공약을 내 놓고 그 공약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하게 지역주의라든지 인신공격에는 많이 좌우되는데 정책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풍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정책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책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는 자세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1분 드립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진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참공약 실천운동’으로 이름을 바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공약 실천운동은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정책의 검증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은 정치공작이다, 또는 권력 측의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진부한 방어수단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책선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후보들이 마법 같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은 마술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표심만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 아니고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 오히려 선진화 이슈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어 있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 멋진 훌륭한 공약이 많다고 봅시다라는 국민들의 뜻과 인내를 요구하는 공약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립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아까 김근태 위원장님이 한나라당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을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후보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회창 후보도 선거에 나온다고 하지요. 또 범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단일화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컷 토론해 봤자 나중에 단일화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토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빨리 범여권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해서 후보를 바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으시면 바로 그 후보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여일 있으면 후보 등록이 되니까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자가 확정되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토론에 응할 것이고, 그때는 저희들이 정해진 후보에 따라서 토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인기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2개의 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통’자, ‘령’자도 있는데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둘밖에 안 남았는데 앞의 ‘통’자를 고르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통’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금품선거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품선거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참정권과 양심을 돈으로 사고팔려는 행위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받는 행위 모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아직도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하여 음식물을 접대하거나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또한 사조직을 이용하거나 핵심 요원들에 대한 활동경비 지급 등 금품선거의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금품선거의 관행을 어떻게 하면 근절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금품선거 관행을 없애는 것은 선거법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17대 대선 이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금품이나 또 돈 봉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93%였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에 의해서 직접 매수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의식 수준상 사라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지도자, 그리고 정당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불법적으로 쓰는 이 풍토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단속과 유권자, 정당, 후보자 의식개혁 2가지가 병행될 때에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토론자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며칠 전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모 구청장으로 당선된 분의 부인이 간고등어를 11명인가, 12명에게 돌렸다는 이유로다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금품살포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엄격하게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돈을 준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는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때 돈이 수 천 만원 살포된 것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또 고발하느니 마느니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신당, 한나라당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이번 대선후보 예비 경선 당시에 편의제공이라거나 금품살포라거나 하는 많은 의혹들이 상대방 후보로부터 서로 제기됐습니다. 정당들의 자정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6대 국회 마지막에 제가 원내대표로 했을 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점거농성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금품선거야말로 전형적인 후진적인 정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선이 됐지만 확실하게 고삐를 잡아서 분명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16대에서 개혁한 것 중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국민 유권자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의 경선 또는 당내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하고, 또 선관위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친한 사람

들끼리,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금품선거는 표심과 민심을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또한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여기에서 쓴 돈을 본전을 어디에서든지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되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두 토론자의 반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건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반론이라기보다도 노회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정당의 자정노력은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유권자들의 금품살포도 아직 남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5대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 선거자금에 국세청 차장이 불법으로 모금해서 조달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인들과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해서 840억원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조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 캠프에도 12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지구의 자정노력과 각성과 각오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김근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민 모두와 정당과 후보자 의식개혁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금품살포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의 근원은 불법대선자금입니다. 불법적으로 조성한 대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불법적으로 조성된 대선자금이 합법적인 용도로 쓰여 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대선자금 10위가 이번 선거에서만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한나라당 모 전 중재인에게 2002년 대선자금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 대선불법자금 문제까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2007년이 과연 깨끗한 대선자금으로 치러지겠느냐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난 총선은 비교적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후퇴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대표인 모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과태료 대납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한 지방선거에서 이런 금품선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금품선거와 관련된 사건의 대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특권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부자 당이라는 소문이 있는 한나라당에 특별히 주목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당 중에서 제일 가난한 민주당이 대선자금과 금품선거 주체를 맡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회찬 위원장이나 김근태 위원장 말씀에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금품선거, 또 일반 선거자금의 불법조달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정당의 지부가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모아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한 것을 근절해야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 차떼기 정당이라고 말을 들었던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도 그 명예를 완전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최인기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최인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당 중에서 제일 가난한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중심당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에게 할애된 것이 15억원 정도 될 것이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같은 거대 교섭단체정당은 이것보다 100억원 정도가 많은 120억원 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금품선거에 유혹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최인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난한 정

당이기 때문에 금품선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형평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기 위원장님께 이런 것을 여쭙보고 싶어요.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수정당의 경우에는 정당후원회를 통한 모금액 비율이 거대정당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군수정당에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고, 또 경선후보자에게만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무소속 후보의 길을 원천봉쇄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이 15대, 16대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해서 쓴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당사도 국가에 헌납하고, 또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자금선거보다 더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까지 불법자금선거 아직 내놓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불법자금조달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너무나 투명하게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불법자금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보가 절대 법정한도를 벗어나서 돈을 쓰지 말라고 해서 당비와 국고보조금 2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비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가지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일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정말 우리 후보의 당선을 당연히 무효시켜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하고 있으니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진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후원회 문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정당후원회와 도당의 후원회조차도 폐지했거든요. 이것은 선거가 대결의 근간이고, 그 선거를 바로 정당이 주관하기 때문에 후원회는 앞으로 법 고칠 때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일정량의 후원제도는 두어야 되고, 또 법인의 후원참여 문제에 대한 검토도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지난번과 같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대해서 깊이 반

성한다는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2번의 지난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했었기 때문에 이번 17대 12월 19일 선거에서는 정말로 불법자금을 모금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국민 반성을 토대로 한 선언을 해 주고, 만약에 불법자금을 모금한다면 당선 무효화를 해도 좋다, 사퇴해도 좋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당의 이름으로 한 번 선언을 할 것을 제가 촉구하고 권유를 해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정진석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 한 분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겨냥해서 선거자금과 연관시켜서 비판적인 회견을 해서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가십란을 보니까 당내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회창 씨와 대선자금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나 의혹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습시다. 마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속담도 있듯이 결국 뿔히고 싶어 하는 사람을 뿔기보다는 뿔어야 할 사람들을 뿔어야 되겠다는 격언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스스로 금품선거, 탈법불법선거 걸러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요새 정치 자금모금 능력으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법정한도를 쓰는 정당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모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쓴 것으로 치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만일 과거처럼 그런 불법자금을 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도 국민들에게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은 당연히 당선 무효도 시켜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오히려 걱정은 불법선거자금을 얼마나 모금해서 쓰느냐의 문제보다는 법정한도 안에서 그 모금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최인기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이외에 3개 정당은 정말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여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 정당은 2개의 정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

법선거자금 금품살포 문제는 사실상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양개 정당에 국한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던 뽑아야 할 사람을 뽑자든지, 또 법정 한도를 다 채우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없을 것이다, 두 분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요, 문제는 정당과 유권자 국민들의 실현의식과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에게 남은 '령'의 봉투를 개봉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주의 사회와 타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선거현장에서 후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때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지역주의가 지리적인 지역에만 따르지 않는 의미에서 신지역주의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는 이를 배척하자는 말 자체가 오히려 지역선거를 조장하게 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지역주의 선거의 가장 큰 병폐는 능력과 정책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이 정당별 표심에 따라서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벌써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장** : 지역주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선거 결과를 보면 아직도 완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저는 2가지의 주요한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지역주의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선거구도, 후보구도를 짜면서 지역주의를 사실상 활용하는 일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합신당 두 당이 역대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역주의의 덕을 보기 위해서 또는 지역주의의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주의와 연합을 한다거나 연대를 한다는 정책공조 등의 여러 포장으로다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일단 그 두 당이 지역주의와 얼마만큼 인연을 끊느냐 하는 것이 첩경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두 토론자들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인데 먼저 김근태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시지요.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는 참으로 창피하기 짝이 없

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지역주의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후보를 빨갱이 또는 불순세력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시절에 광주항쟁을 마치 불순분자들이 주동해서 만든 것으로 폭도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쌓여서 공격적이고 과학적인 지역주의가 기세등등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새 그것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통령제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중대형 선거제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17대 대선과 총선 이후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치적 지역주의는 그 집단이기주의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정의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지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라는 표현만 가지고 보면 내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 역할을 하겠다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불모로 해서 정치적인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호남은 강한 정치적 운명공동체로서 반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후보는 영남에서 나와야 한다, 나도 영남에서 30%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됐다”, 또 민주당의 어떤 후보는 대전에 가서 충청도 대통령론을 주장했어요. 충청도 대통령론이라는 표현이 언론이 붙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의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언동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이나 또는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지

역주의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김근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해법이 문제인데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통령제의 도입이 지역주의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다수대표제, 즉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식으로 되면 50%만 얻어도 당선됩니다. 실제 40%만 넘으면 거의 당선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에 60%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 꼴이 됩니다. 전체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60%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역패권주의를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가 완화됐지만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선동하거나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노회찬 위원장의 말씀에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 속에서 광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제재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격한 조항이 도입되어야 되지만 지역주의 때문에 만년혜택을 누리는 상황은 시급히 끝내야 우리가 선진정치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 정진석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회찬 위원장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개선해서 과연 지역주의가 극복되겠느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가라고 물어볼 때 권력구조 문제가 역시 대두가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권력 제로섬게임을 지속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국병인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그야말로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작업을 공론화해 보는 것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또 그럴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노회찬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 극복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권력구조의 개편, 저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이 지역주의를 없애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각제는 장기적으로 보다 더 민주적인 정치체도로서, 권력구조로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지역주의가 여전히 엄존하는 상태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합종연횡이 활성화되는 내각제에서는 이 지역주의가 소지역주의로 나뉘어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각제의 조속한 도입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노회찬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혹시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포에 가서서 방명록에 '무호남 무국가'라고 쓰시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전라도 사람으로 살다가 전라도 사람으로 죽겠다'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는 없겠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감정은 허용이 다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선동한다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되고 그 퇴출되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이것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지역주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지도자를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

의식과 문화에 관한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구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하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정권을 5년 동안 쥐는 행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감으로써 여러 정당 국회의원을 같이 선출하는 제도와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배제하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호남 무국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것을 따서 한 것이고, 역대 독재정권에 저항했었고 피를 흘렸던 민주화 쟁취가 호남에서 있었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의 '무호남 무국가'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을 최인기 위원장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지역주의를 퇴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지역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타을 돌리는 것들은 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 지역주의가 잘 먹히는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선동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낙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려도 타고 들어올 구멍을 막아야 된다, 지역주의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90% 넘게 독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부차적인 수단 가지고는 지역주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제가 애향심의 반로다, 애향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의가 과거보다는 조금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나라당 후보도 호남에서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구나 하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지역주의, 혈연주의, 연고지를 벗어나는 정책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정책선거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기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 극복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주의를 활용해서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한 이후로 거의 대통령이 36년간 영남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도 이루었고 또 여러 가지 권위주의 정부 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이번 선거 구호에 보면 '잃어버린 10년, 빼앗긴 10년을 되찾아 오자'라는 구호가 일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회적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노회찬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이 연고가 아니라 정책을 보고서 노선을 보고서 철학과 능력을 보고서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탈지역주의, 지역주의를 넘어서자는 바람, 노력들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만 치르면 잘 안 되느냐, 아까 제가 선거제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지적드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정당입니다.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면 정당은 하드웨어입니다. 3김 시대는 사실상 지역주의가 가장 크게 기승을 부렸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는 3김 시대는 정당은 3김 시절의 지역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들이 여러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중심으로 당이 모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연고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의 혜택을 보는 동질성 때문에 정당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현재의 정당체제를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장애물입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5개 주요정당의 선대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을 맡고 계신 토론자들에게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대책과 관련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은 각 2분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양극화 구조의 치유가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면 지도자는 더욱 통합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국정수행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당의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 오와 공명선거실천의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시대적인 소명감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를 누가 견인할 것인가, 국민들의 이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깨끗하고 유능한 정당입니다.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가도에서 국민중심당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새로이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약한 소수당이기에 때문에 국민중심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철학, 정책적 지향, 신념, 국가를 걱정하는 방향 이런 점에서 일치하는 양심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심대평 저희당 후보는 4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내 개인이 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해 왔다고 자부한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비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고 건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유능한 국가지도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좌과정권 10년을 종식하고 새로운 보수우과정권을 확립시키는 대역사에 밑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범과 새로운 도전에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계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만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상수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은 정말 이번에 깨끗한 사건을 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흠집 내고 인신공격하는 지지분한 선거는 절대로 치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실천력이 갖춰진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심판 받겠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밖에 없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딱한 사정에 청년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제를 살려서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희망을 주는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는 누구 특정인의 성공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성공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능력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인재들이 다른 정당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한 인재들과 또 훌륭한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저희 민주당은 2번의 정권을 창출한 경험을 가진 50년 전통의 정통정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은 중도개혁 실용주의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면서 결국 시장경쟁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주의가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의 폭을 넓힘으로써 튼튼한 국가경제의 토대로 많은 일자리 창출 속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21세기에 3만불, 4만불 시대를 거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분명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정당은 대단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45만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는 평등과 분배우선의 낡은 진보사상이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구 해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서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당이념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정당후보들과 경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선거는 인기투표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1명 뽑는 것이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의 본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노선을 결정짓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선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과거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 노무현 정부 5년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10년만도 아닙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인해서 올해 다섯 번째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소득이 지난 10년간 1만불에서 2만불로 오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은 2배로 늘어나서 8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지금 서민경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경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20% 소득은 날로 커 가는데 하위 2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야 될 경제는 부자경제가 아니라 서민경제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노동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정책노선으로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바로 서민경제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서민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마침 민주정부가 수립한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한 IMF 빠진지 10년째 되는 이후입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일부 언론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광장으로 불러내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는 거역할 수 있는 도도한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지와 인권을 이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경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를 불러드리고 신자유주의 관철을 노래하고 있는 한나라당 장본인은 이런 비판과 비난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대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와 문화를 수준이 결정됩니다.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서 국민의 화합과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이번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토론하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말씀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행복과 성공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특히 후보가 유고되었을 때 선거를 연기해서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게 하는 것,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됩니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 또 선거를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선거를 하는 매니페스토 도입법안들을 다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입니다. 이것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

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정당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선거가 유사 이래 최고로 깨끗하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현명한 국민들께서 10년 전에 권위주의시대 또 권위주의적이었던 정치행태의 종지부를 찍고 최초로 평화적으로 수평적인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민주개혁 평화적인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과거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으로 비전문가들이 국정운영하면서 국민들도 실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10년 전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지나친 이념에 중간지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내년 2008년이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정부가 환갑을 맞는 것입니다. 이제 뒤를 한 번 돌아보고 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이 정권을 계속 맡아왔던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담당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보수 기득권 체제가 60년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야 됩니다. 세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외치면서도 비슷한 세력,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다 고양이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흰 고양이에서 검은 고양이로 바꾼다고 해서 쥐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력을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나서겠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19일에 이 선거에서의 승리자는 국민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선거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퇴행적이거나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정당과 그런 후보들에게는 불호령과 불방망이를 내려주십시오. 잘

못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선대위원장입니다.
-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중심당 선거공약의 요체는 내각책임제 구현입니다. 권력구조를 잘 바꾸어서 국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국땅에서 쓸쓸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에 감옥살이 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갔지만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도 비참합니다. 제로섬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구조를 종식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진흙탕 정치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중심당이 집권하게 되면 2년 안에 내각제 권력구조로 마련하고 평화롭게 정부를 이양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 **사회 (경희대 교수 송재룡)**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하신 5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와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 방송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1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회 중 그 첫 번째 토론회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후보 등록을 마친 분 중에서 여섯 명의 후보자를 초청했으며 그 초청기준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에 각종 공직선거에서 전국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언론기관이 최근 30일 동안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를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제 후보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반갑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후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는 대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 또 후보간 상호토론 및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후보들께 질문하는 UCC 동영상 질문,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만큼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토론회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만일 위법 발언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이인제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업자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IMF 때보다 더 혹독한 불경기가 시장을 푹푹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75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절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바뀌야 됩니다. 12월 19일이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이인제는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능과 부덕함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질책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며 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로서 질풍노도처럼 수많은 개혁과 창조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인제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덕적인 힘과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력으로 그 저력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앞세우고 지식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서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꼭 일으키겠습니다.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들고 불경기를 몰아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선진 일류 지식 강국을 꼭 건설하겠습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문국현 후보의 기초연설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국현입니다. 저는 유한킴벌리 사장을 13년 했었고 또 킴벌리라는 세계적 기업의 북아시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돼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고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비정규직이 850만명이나 일어나고, 그리고 청년실업자가 200만명이 넘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젊은 이들이 늘어나고 그 부모님들이 가슴에 한을 또 아픔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부패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부패공화국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 환경보호에 앞서는데 우리나라는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에너지 낭비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정치를 폐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세계화, 중소기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는 시대를 만들고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늘릴 줄 모릅니다. 부패와 일자리,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고 일자리 500만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내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나라, 자영업에게도 희망이 있는 나라, 그것이 온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60~70년대 공돌이, 공순이로 천대받으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분들, 열사의 땅 중동에서 오일달러 벌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분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아들, 딸들,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고작 8, 90만원 월급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붕괴된 지 오래되어서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나라 아닙니다. 바뀌야 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서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서 서민들의 지갑에 한 달에 211만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대 걱정

없는 사회, 이것이 가능하냐고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벌들, 땅부자, 주식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걷으면 가능합니다. 삼성 이진희 회장 아들에게 상속하면서 수 조원 탈세했습니다. 이 수조원,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 땅부자, 주식부자, 그렇게 해서 부유세, 사회복지세 거두면 여러분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민생 대혁명으로 서민 지갑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밥이고 통일이 밥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때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가고 서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이회창 후보의 기초연설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2번 꼴찌 이회창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으로 나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끔 핵전쟁 위협을 합니다. 또 한미 관계는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주외교 또 민족끼리 외교를 내세우면서 한국은 지금 동북아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의 시대, 자존심 상하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권교체라고 해서 얼굴이 바뀐다고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정권교체가 돼야 합니다. 저 이회창이 반드시 그러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의 비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고 강한 핀란드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5, 6개 합친 그러한 연방제 국가로 대 개조를 해야 합니다. 이 연방제 구조는 바로 이 나라의 50년, 100년을 내다본 큰 앞으로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으로 세계 속에서 최고의 경제강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에게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을 드릴 수 있는 국가 개조의 그림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 이회창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명박 후보의 기초연설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권교체 할 날이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그동안

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권교체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2002년의 김대업식 공작정치, 2007년도 유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한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진정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몇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 근간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안보정책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아시아 외교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 더한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가 경쟁하는 에너지, 자원외교, 문화외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교도 국력에 걸맞는 외교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형으로 키우고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초연설의 끝으로 정동영 후보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합니다. 가짜와 위장이 판치고 있는 이번 대선 판도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줄 힘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탈세, 위장,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는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미국 같으면 BBK 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도 이명박 후보는 오늘 텔레비전 토론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부패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검찰이 살아야 한다, 이명박 씨를 칠 수가 없다, 네가 한 것으로 해 달라, 검찰이 살아야 하니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도 살고 너도 산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생매장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은 헐박, 회유, 유린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는 실종됐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덕목은 신뢰입니다. 대통령의 신뢰등급이 그 나라의 신용등급입니다. 신뢰와 정직, 이것이 또한 외교, 안보정책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신뢰와 정직을 기본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상으로 여섯 후보의 기초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의 검토와 중앙선거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 활성화가 22%, 대북정책과 국가안보가 19.7%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이 16.8%, 정부조직개혁 15.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오늘 1차 토론회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입니다. 봉안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시고요. 지금 처음으로 개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떤 참고자료도 가지고나오지 않았습시다. 따라서 오늘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차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문제’, 외교분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문국현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지금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난 6자회담 기간 7년 사이에 북한의 중국화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북한의 많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탄광 개발이라든가 지하자원 개발권을 확보하는 데 이어서 또 나진, 선봉의 항구를 50년 조찰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만주에서 나진, 선봉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중국에 너무 경도되도록 놔두는 것은 동북공정의 그 의도야 어떻든 간에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통일, 경제협력에 큰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내년 중에 반드시 이루어서 핵문제 제거에도 대처하지만 또 군사대치관계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동북공정과 우리 남북한의 미래가 갈등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정말로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내걸었을 때 우리 자존심 얼마나 상했습니까? 찬란한 우리 5000년 문화가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당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일변도의 그런 외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남북이 하나로 손잡고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맞서야 할 겁니다. 중국에도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한미동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간 안보체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자간 안보체제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다자간 안보체제는 호혜평등의 체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미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평화와 통일의 국가를 건설해 갑시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군국주의에 맞서는 길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이회창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주변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치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앞으로의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는 바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앞의 역사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제2세대들이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 역사의 진정성을 알리고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또 관철시켜야 합니다. 동북공정, 특히 동북공정의 경우에 2004년 8월에 한중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면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 또 우리 국민에게 우리 역사의 정통성, 정체성을 교육하고 지키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 인식이 일본의 제2세대들에게 앞으로 한일관계,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일본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 역사를 미워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외교분야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그렇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분명히 의도적인 역사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전제로 해서 중국은 지금 그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일본에서도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정한 평화는 독일과 같이 패전 후에 유럽 모든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EU가 통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특히 경제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토에 관한 일절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세아역사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모두 미약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선진국의 역사학자들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외상이 2004년도에 와서 중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잠시 잠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더 강한 대처를 국가와 역사학자들, 민관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은 미국입니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한차원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분단된 한반도의 잘린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교관계를 통해서 동북공정과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깊이 고민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면 눈치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공정, 노골적으로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여전히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익을 지켜가려면 한미관계를 새롭게 강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60년 분단구조, 이것을 평화협정체제로 바뀌는 데 있어서 한미, 한중, 한일간의 긴밀한 외교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나가야 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

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이인제 후보 차례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만주지역의 우리 찬란한 고대사 침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몽골, 위구르 그리고 티베트, 월남, 이 지역의 공정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고대사에 대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만주에 있는 우리 민족의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통일이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서 경제력, 문화력으로 옛 우리 고대사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분명한 영토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 심해저에 있는 거대한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불타는 얼음, 이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묻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 집요하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외교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 잘 들으셨지요. 이제 다음 토론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입니다. 이번 토론은 한 후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한 후에 나머지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모두 발언을 한 후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론하시는 후보들께서는 모두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와 관련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지난 3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계획된 6자회담의 개최 여부도 정하지 못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후보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을 듣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영길 후보가 모두발언을 먼저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북한 핵이 불능화되고 있고 북미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을 활용,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북한 핵 실험했을 때 각 정당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청와대, 열린우리당, 대북포용정책 제고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전쟁불사론 들먹이면서 인도적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권영길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서 북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 받아냈습니다. 저 권영길, 민주노동당이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으로,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권영길 한반도 평화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비무장지대 철책을 철거, 평화지대로 만들고 세계 으뜸의 생태관광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는 가족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정으로 전면적 교류를 단행하겠습니다. 저 권영길,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을 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회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지난 2002년 대선 직전에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당시 권영길 후보, 또 노무현 후보, 저, 또 정몽준 후보, 이렇게 모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권영길 후보,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은 실제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큰 규모의 지원협력을 해야만 북한 핵이 나오지 않도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북핵사태의 위험을 몰고 왔습니다. 과연 당시 권영길 후보가 제대로 남북문제를 판단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약속으로 과연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너무 핵문제를 안이하게 무지개빛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권영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남북관계에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없앤다든가 면회소를 더 만든다든가, 이 정도의 여러 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핵문제는 남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핵 문제는 동북아의 위협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영길 후보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핵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 말 한마디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6자회담이 벌써 94년도, 쭉 계속되는 회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권 후보께서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공동체 형성,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평소에 주장하시는 한미동맹의 해체, 이 분야는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이 견해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공조는 강화돼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공조를 병행해야 합니다. 남북공조, 한미공조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할 때 우리의 역할이 생깁니다. 다자적 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핵불능화, 못 쓰게 하는 것 12월 말까지, 이 약속 지키도록,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테러리스트 지원국가, 북한에 대한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이제 2008년을 한반도의 신기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권영길 후보의 말씀은 지나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핵불능화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부터 정전협정 체제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불능화 다음에도 핵프로그램 신고도 있고 또 핵물질, 핵무기 신고도 있고, 해체도 있고 아주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직후에 권영길 후보께서 물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서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핵실험 이전과 핵실험을 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정세가 얼마나 다르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이런 정세에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지나치게 그것이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처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고요.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제가 보기에 우리 권 후보님 생각은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핵은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위협을 가해도 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6자회담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

을 왜 북한이 했는가 보면 결국 봉쇄 후에 오는 기아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북관계에서는 항상 경제협력이 같이 가야지 이것을 군사적 처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다섯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여러 후보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간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북한 핵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94년에 제네바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시 북한 핵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합의된 거 실제적으로 누가 위배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위배했습니다. 금융봉쇄, 경제봉쇄 해제하기로 한 거 약속이행 안 했던 것입니다. 경수로 건설하기로 한 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은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북한은 핵실험 했고 이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면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주도하면서 북미간의 갈등관계가 정말로 정상화돼서 외교관계가 수립될수록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 체제 반복 정책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했다가 외교적으로 붕괴시키겠다고 한 방침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내 임기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것을 권유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서 6자회담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미관계를 보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회창 후보, 대북정책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북핵문제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우리의 문제이다,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핵불능화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실하게 모든 핵프로그램이 신고가 될지 또 핵불능화가 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그 다음의 기존 핵의 폐기가 과연 될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이러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

과 또 거기에 합당한 아주 효율적인 협상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분명하게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저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와서 돈 주고 지원하면 어느 바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돈 주고 지원하면 핵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말, 저는 아주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 있는 태도가 북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하게끔 결의하게 하는 가까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다섯 후보가 차례로 반론을 하시겠는데요. 이명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지금 이회창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은 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핵이 폐기되기까지는 완전히 남북간의 관계는 단절돼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계속 반론 시간은 있으신데요?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의견이 비슷해서 더 말할 게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이따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반론은 정동영 후보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저는 이회창 후보님과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두 분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햇볕정책으로 돌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미국과 엇박자나고 있는 셈입니다. 부시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대북적대시 대북무시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180도 바꾸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정동영의 정책과 가장 닮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을 바꿔서 이제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6자회담에 돌리는 방식으로 활성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대북, 대미 접촉외교 강화해서 단시일 내에 북핵문제, 이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반론해 주시지요.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회창 후보님 접근은 정치군사적인 문제, 북한 핵문제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남북교류협력, 경제협력, 이런 분야는 비정치군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물론 제거해야 합니다. 또 국제공조 튼튼하게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간의 교류협력, 이 분야를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간에 상호주의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주고받는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평화의 틀을 넓히고 또 상호,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경제협력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상호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가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상호주의는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상호주의는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괄처리 방식과 아주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일괄처리 방식에 의하면 내년 안에도 북한과 미국은 핵폐기를 완성하고 북미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북한에 미국의 외교연락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속화시켜서 내년에 북한과 미국의 수교 그리고 남한과 북한, 미국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협력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가 포함되고 캐나다, 일본까지 합해지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드는 것은 이런 상호주의가 아닌 일괄처리방식을 믿는 데서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명박 후보님, 남북적대시대 60년대의 반공투사 모습 같네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시대, 남북 철도개통 시대를 60년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화해와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상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선도적 군축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우리 병력을 50만선으로 줄이겠습니다. 남북 군축협상 통해서 각각 30만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국방비 줄여서 75조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쓰겠습니다. 이회창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상황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다섯 후보의 의견 잘 들으셨지요. 이회창 후보께서 다른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제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는 이중구조의 모순구조라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북과 평화교섭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군사적으로 17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립관계에서 평화로 가니까 이걸 약화시키자, 또는 평화로 가기 때문에 대립관계를 무시하자, 이러면 이것은 우리의 모순구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북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이 지금 햇볕정책으로 갔다, 이것도 저는 참 어처구니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엄격하게 상호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불능화도 티포테트라고 해서 하나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주겠다고, 이것이 지금 핵불능화의 프로세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이 그냥 주기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 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핵불능화 된 후에 단계적인 절차를 취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연계된, 소위 연계된 상호주의이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저 미국이 먼저 주고 무시하고 주겠다고, 이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말하는 소위 사우일식의 편견이라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햇볕정책 10년 동안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남북관계는 이 길밖에 없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김대중 정부 때 제대로 끼웠더라면 그러면 아마 건전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왔을 것이다, 저 북에 대한 지원협력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돼야지, 진정 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는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것이 평화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가 모두발언 해 주실 차례입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대한민국은 모두 분열되고 갈등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동포 2300만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 주민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 핵무장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간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협상으로만 단독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6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그래도 가능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핵이 폐기되기 전에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겠지만 거기에 인도적 협력도 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문제, 납북자 문제, 이런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강력하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 시켜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주민과 북한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론들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명박 후보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신뢰,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말을 바꾸셨습니다. 작년 핵실험 때는 전쟁불사론에 가깝게 외쳤고, 그리고 북미 대화가 시작되자 유화론, 신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회창 후보께서 출마하고 나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고 또 철회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할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당당함이 생명입니다. 뒷거래 외교를 통해서 백악관 부시 대통령 면담 추진하려다가 국가 망신시킨 것, 나라 망신시킨 것, 이런 외교 가지고 어떻게 당당한 외교 합니까?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라고 매도해 놓고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인제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명박 후보께서 햇볕정책 10년이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지으신 것 같은데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핵보유를 한 것은 중대한 도발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의 북방정책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의 흐름이었고 또 그런 핵개발과 같은 돌발변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핵포기 때까지는 그냥 인도적 지원 정도, 이런 것만 하고

다른 교류협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그렇게 설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남북관계, 국제공조 종합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빅뱅, 일괄처리방식에 의해서 핵폐기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핵폐기시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핵폐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잘 노력하면 내년도에 북한과 미국의 수교와 함께 내년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이를 것이 미북수교, 북미수교와 함께 핵폐기입니다. 이런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반론은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수구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님, 여전히 수구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를 북방한계선에서 읽고 있습니다. NLL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이 화약고를 제거하지 못하면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제법에 근거도 없는 NLL 영토선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전쟁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해어로공동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경비하는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이 NLL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영토선으로 고집하고 계시는지...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남북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그것은 절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가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자리에 가서 달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은 무늬만 보수이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

니다. 영토선 문제가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만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참 해괴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영해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쪽 우리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한계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 50년 이상 남북이 서로 존중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영토선이 아니면 무슨 선입니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께서 각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그렇습니다. 오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께서는 어떻게 그냥 전쟁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이야기를 믿고 대한민국 검찰은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정동영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혹시 북조선 검찰이 와서 조사했다면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믿어야 합니다. 2002년도에 검찰이 권력과 합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유연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북한이 항상 변해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보듯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왜 일관되지 않았느냐, 제가 인터넷을 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아마 이회창 후보께서도 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잘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 뜻을 가지고 출마하시려고 짚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보시면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비핵 3000, 북한을 강력하게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6자회담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돼야 되지만 남북간의 문제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정동영 후보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반론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웃더라도 짚을 것은 짚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얘기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자와 동업하셨잖습니까. 동업할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동업하셨습니까, 아니면 범죄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사리사

욕을 챙기기 위해서 동업하셨습니까? 범죄자인 줄 알고 동업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인 줄 아셨습니까? 이것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권력기관의 자율, 즉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악용해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김정준 씨 메모, 서툰 한글이었습니다만 한국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이명박 이름 석 자를 빼주면 징역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검찰, 저는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외교는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인내 있게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 만들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설득해서 6자 회담 재개시켰습니다. 미국과 북한 설득해서 9.19공동성명 만들어냈습니다. 그 실력 갖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 준비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모두발언을 듣고 각 후보들의 반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가급적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토론위원회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제 후보부터 차례로 반론을 1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정동영 후보께서 다른 이야기만 하셔서 반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주도하셨으니까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재작년에 9.19 의장공동성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장공동성명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들이 북핵 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북핵타결이 됐습니까? 작년 10월 9일에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시간과 그리고 모든 준비할 여건을 마련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세의 변화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평화이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잘 통한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반론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정동영 후보께서는 개성공단의 역사가 이미 2000년부터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2004년에 통일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프로젝트에 나

중에 완성, 제품이 생산된 단계에 들어오셨는데요. 이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유럽으로 가는 열차표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한 단계 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가속화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남북간의 군사대치라든가 핵무기에 대한 이런 대처방안에서의 국가적 의견을 노출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집중해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가속화했어야 되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신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서두를 수 있도록 국가적 의견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정동영 후보님, 대한민국 검찰, 이명박 후보 대변인 되고 경호실장 된 것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 북핵문제 토론회 한번 하지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불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대북억지력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성격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미국 세계제패 전략에 따른 그런 기동군 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평택기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는 대중국 견제 기지입니다. 이것 없애지 않으면 한반도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고 있던데, 주둔요구하고 있던데 그렇습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구상과 대북정책을 마구 혼돈하고 있다, 한반도 구상은 우리가 북한과 같이 가는 미래의 그림을 얼마든지 장미빛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 북한을 동반자로 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북정책입니다. 대북정책 자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냉철해야 합니다. 한반도 구상은 이상이고 그림이지만 대북정책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대북정책 자체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된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걱정을 합니다. 또 이명박 후보께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뭘 못 읽은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 한글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좀 더 서로 연구 좀 하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조금 전에 원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이번에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에서 공동 구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북한은 훨씬 우리 영역 내에 들어와서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것을 지지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동영 후보께서는 개성공단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현대아산에서 일을 진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부총리 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했다,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시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할 것 다 했지요. 부총리도 하고 당의장 두 번 하시고,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다른 데 와서 당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만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일관되게 싫든 좋든 신뢰가 있게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께서 반론에 대한 답변을 2분간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좋은 반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특히 저와는 철학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정책 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북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북적대시 강경정책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가 퇴진했습니다. 철지난 강경파 노선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견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60년 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을 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60년 이 분단의 구조, 정전체제, 저는 공교롭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일에 태어났습니다. 운명적으로 이 휴전체제를 뜯어내라는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협정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미, 한중, 한일, 한러협력 강화하면서 평화협정체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속에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젊은이의 일자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꿈입니까? 금강산, 이명박 대통령이 있으면 개성공단 되겠습니까? 지난 10년 민주정부, 평화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8월 북경올림픽에 가는 공동응원단, 평양역 지나서 북경역 가는데요. 제가 대통령 되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경의선, 경원선 관통해서 시베리아로, 만주로, 유럽으로 연결하는 경제영토 확장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젊고 역동적인 지도자가 꿈꿀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퍼주기 논쟁이니, 대북 봉쇄니 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북

정책을 갖고 계신지 이인제 후보가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남북간에 군사균형이 일거에 파괴됐습니다. 지금 자꾸 정동영 후보께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엄중한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분쟁도 계속돼서 한반도의 안정이라든가 평화에 오히려 저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핵문제를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틀을 잘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자꾸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본격적인 의제로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예정대로 북한 핵폐기프로그램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때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볕정책이 평화공존의 틀에서 평화 공영의 틀로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생산적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북한이 스스로 개방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돼서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반론은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이인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자회담의 틀을 잘 활용하면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이런 것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틀 속에 핵을 없애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정책은 옳다고 봅니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외교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 일대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반도로 끌어오느냐,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하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인제 후보께서는 당적을 바꾸는 만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자민련, 국민중심당에 계실 때는 대북정책 강경자이

더니 또 민주당에 있을 때는 햇볕정책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오늘은 또 수구보수로 돌아가고 있네요. 특히 이인제 후보의 인도적 지원정책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는 것 갖고 흥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인제 후보께서는 인도적 지원 중단 강하게 요구했었고 또 대북제재 규제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햇볕정책을 내걸었다가 오늘 와서는 또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도대체 인도적 지원은 뭐고 대북 핵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지금 미국의 정책이, 대북정책이 마치 바뀌어서 네오콘 시절과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네오콘이든 또 비네오콘이든 확실한 것은 핵에 관한한, 핵의 실질적인 해결이 없는 한 절대로 양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무슨 평화협정이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북미관계가 잘 되면 금방 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마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북핵 해결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 참 대미외교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대한민국이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자는 데 진보, 보수라는 것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면 골통보수이다라고 몰아쳐서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가까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이 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입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공조를 잘 해야 합니다. 전부 따로따로 놀게 되면 북한이 그것을 이용해서 핵보유를 오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잘 하고 특히 북미간의 협상, 또 남북간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인제 후보와는 햇볕정책이라는 점에서 뿌리를 같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의 참가국 모두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나라당과 우리 이회창 후보님께서서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6자틀이고 두 번째는 병행론입니다. 한미공조, 민족공조, 남북공조를 병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관계 신뢰가 없잖아요. 남북관계 신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 우리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려 하고,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지면 과거 문민정부 시절처럼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고 귀동냥이나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님이 되면서는 5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선 권영길 후보께서 주신 질문 답변 드리면 저는 인도적 지원의 중단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 핵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9.19성명 때 북한 핵 다 해결된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었고 그래서 북한의 핵 야망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제공조 대응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우려대로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핵보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당장 우리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재래식 전력,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면 지금 남북한의 군사, 정치균형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인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 중단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 중단 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황이 호전되면 개시 하더라도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신공격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민노당의 명예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께서 북핵해결과 상관없이 제가 북미, 북일수교 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신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북한 핵타결과 함께 북미수교 또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더 넓혀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대북정책 관련 토론은 마지막으로 문국현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고 반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간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핵무기는 우리에게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또 그대로 놔두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해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남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연계되고, 러시아와 연계가 되고 캐나다, 미국, 일본과 연계돼서 제2의 경제성장엔진을 환동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푸틴 대통령께서도 환동해의 경제협력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 동아시아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한국인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치 없애는 방법으로서 북미수교와 함께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서 제2의 성장엔진을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통해서 만들고, 에너지 안보협력기구를 동북아에 만들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제2의 LA로 만들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한반도 북한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권영길 후보부터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문국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는 어느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는 너무 자주적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정부가 친미적이고 종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의 뜻에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했고, 평택기지 확장했고, 한미FTA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보다 더 친미적이고 종속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뜻에 따르면 북핵문제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적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북미수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핵문제에 있어서는 북미수교가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입니다. 남북이 진실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6자회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남북간에 핵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국제공조인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남한이 지원협력을 국제공조의 틀을 밖에서 계속 주기 시작하면 북한은 남에서 지원협력을 받는데 6자회담의 틀 속에 갇혀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핵문제는 북미수교도 중요하지만 남북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명박 후보께서 반론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6자회담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밀도 있게 협상을 하는 것, 남북이 밀도 있게 협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반도의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 자리에서 친미, 반미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미, 반미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적 차원에서 외교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안보문제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친미, 반미의 이분법 분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가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문국현 후보께서 북미수교를 핵심으로 짚은 것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미수교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핵문제 풀러가는 것과 병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간에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신뢰 없는 두 사이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공조, 한미공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 생산시설, 그리고 연료봉 공장, 이 세

가지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것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간에 서로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이 신뢰를 지키도록 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새 대통령 역할에 따라서 신용이 없는, 신뢰가 없는 북미가 한쪽은 핵 폐기를 하면서 한쪽은 또 북미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인제 후보가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문국현 후보께서 북한의 핵보유가 북미수교 기회를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한이 핵의지를 일찍이 포기했다면 북미수교 벌써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동해경제권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 여기에 다양한 에너지라든지 또 관광,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협력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 NLL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평화적인 경제특구로 이렇게 건설, 물론 남과 북이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동해경제권 대비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해서 자원, 또 여러 가지 관광, 이런 통로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는 반미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는 친미적으로 보였던, 그래서 파병도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첫째, 둘째 가는 규모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혼란시킨 것이 있고, 세계를 좀 혼동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엇박자가 났습니다. 미국은 일괄처리, 빅뱅방식으로 내년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함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핵폐기 이전에 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완전히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미국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친미냐, 반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미라고 하나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정동영 후보께서 신뢰가 아주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또 전세계에서 신뢰의 상징이어야 되고 또 우리 동양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북한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문화까지도 다 이해하는 그런 다문화 다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 아주 북미수교의 꽃이라고 봅니다. 인건비가 세계에서 가장 싸고,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리고 미국의 시장, 캐나다의 시장, 일본의 자금, 우리의 경험이 결합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엔진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만 20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외교는 경제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60여 분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각 후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두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시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5분을 넘어섰는데요. 1시간 25분여 동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질문 답변하실 순서가 UCC인데요.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그중에서 위원회가 엄선한 UCC 동영상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지요.
- **홍인철** :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사는 홍인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피랍 사태가 2건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만약 피랍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피랍사태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만약 또 그런 피랍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회창 후보부터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의 제1차적인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랍된 국민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또는 관계된 NGO나 또는 국제사회의 여러 기구들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가령 국제적으로 룰이 돼 있는 테러 단체와 직접협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교섭의 형태는 때로 우리 한국인들을 피랍, 즉 납치의 표적으로 오히려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납치하면 돈이 생긴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룰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방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아주 특이한 경우, 특

수한 경우에 직접 협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개적인 협상으로 국제 물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그런 것은 피하도록 지혜를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하다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라도 무력으로 빼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1,200만명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2,000만명 가까운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명을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일어나는 생명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협상수법을 동원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공개로, 비공개로 또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현재 세계현상을 보면 대부분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피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피랍되었을 때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험지역에 여행한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홍보만 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갔을 때는 못 가게 하는 특별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해외국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할 때 또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상사원들, 유학생, 이런 경우에 철저한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 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님과 별 의견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인데요. 외교관 수는 우리의 2배입니다. 이제 우리 외교도 정부외교로부터 통상, 경제외교와 두 번째, 우리 국민보호 외교로 중점을 옮겨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데 반대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키우겠습니다.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외교가 힘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도 만들어야 하겠고 1년에 1,200만명이나 되는 해외여행객, 그리고 800만명의 해외교민을 보호하려면 강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만 해외원조에 인색

한 나라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ODA라고 하는 해외 후진국 지원하는 예산,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중에 그래도 중간 정도로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받고 그리고 외교역량을 키워서 우리 1,200만 여행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외교력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피랍이 돼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최선의 방법은 교민들이 그런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번 석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물론 몇몇이 희생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한 귀환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가정보원 대표가 가서 마치 이것을 자기과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 체면에 많이 손상을 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고요. 이 테러단체들은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납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해서 우리 국가체면이 손상이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하든 꼭 생명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해적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부라든지 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해당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연계해서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예방할 것이 있고 또 해결하는 이런 두 가지 사후관리 차원의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뺏어나가야 됩니다. 로마가 유럽의 한구석에 있었지만 전세계로 길이 통하고 문화가, 언어가 통하고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천년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세계로 뺏어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가 너무나 적고 문화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국가가 지원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로 뺏어나가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되 그분들이 현지 문화라든가 현지의 종교, 언어를 잘 적응해

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외교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경찰이라든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10만명 이상 해외로 나가서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오늘 UCC 동영상 질문, '만약에 한국인 피랍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권영길 후보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그전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의 비참한 죽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군대 거기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파병하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파병하라고 하니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미국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동에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됐습니다. 겨우 대책 세운다는 것이 우리 여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군대 철군해야 됩니다. 파병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병할 때 정동영 후보께서도 한나라당과 앞장서서 파병에 동의했었습니다,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미국의 용병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병처리 할 때 그때 앞장섰으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후보, 선거 때가 되니까 말 바꾼 것 아닌가 싶은데 선거 끝나면 또 어떤 말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선원들의 문제는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인 외교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동 땅에 우리가 못 가서는 안 됩니다. 철군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정치분야 관련 질문되겠습니다. 최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그것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이명박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권력구조를 내놓고 4년중임제를 내놓았었습니다. 이는 몇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4년제

에도 장단점이 있고 5년단임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헌법개정을 반드시 한다면 권력구조만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다룬다면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문제 또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에 관한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뤄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에 있어서는 경제를 살리고 또한 국민통합을 매우 중요시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국민이 또 분열된다면 모처럼 중요한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관한 것은 신중히 다루되 국민의사를 물어서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4년중임제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4년 중임제가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개헌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이 아직 다 뿌리가 안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권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인권유린,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헌법정신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김경준 씨의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협박하고 회유해서 진실을 생매장해 버리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서 분노합니다. 로 이런 것,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검찰권이 이명박 후보의 품으로 들어가 버린 것, 이런 것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친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헌법 35조 3항,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주거권으로 못 박는 등 가족행복을 위한 인간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다른 후보들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슨 경제정책이나 경제논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후진적인 정치가 국가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가장 비효율적인 정부가 시장을 억압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화의 지평이 열린 이래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 1년 남겨놓고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심으로부터 고립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냥 밀어붙이면 다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시대에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선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통일, 국가의 비전이나 장기전략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등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시키는 이런 내정은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내각제 형태의 총리가 돼서 정부도 구성하고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일이 없이 우리 정치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권력구조개편과 헌법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도 일단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이고, 국가의 큰 위기를 종종 초래하곤 합니다. 분권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고쳐져야 되고, 4년 중임제로 해서 총리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년제를 했을 때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행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든가 감사권을 제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허가권이 결국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막고 모든 대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은 비단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온 국민이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현재 56명 정도로 돼 있는데 선진국은 우리 같은 규모로 본다면 150명선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100명선까지 올림으로써 여성전문가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투명한 사회, 또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4년중임제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바꾼다고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관계없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의 시대, 특권 없는 서민시대를 위한 평화통일헌법, 민생헌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헌법 만들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생 해결을 위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후보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되는 헌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께서 헌법의 주거권 도입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공개념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민간 분양원가도 반대하셨고 또 부동산공개념 도입도 반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언제까지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여성평등문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런데 마사지걸 발언 등으로 분노한 여성들께서 우리 이명박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평화통일, 민생헌법 만들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력구조개편과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이회창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권력구조 문제는 4년제나, 단임제나, 지금의 대통령제가 그냥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87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저는 이것을 87년 체제라고 말합니다만 20년의 문민화시대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국가개조의 대그림을 그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개혁과 또 획기적인 분권화로 연방제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 싱가포르, 핀란드 같은 나라들 작지만 국가경쟁력 일류의 소위 강소국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5개, 6개의 핀란드 또는 싱가포르가 합친 것 같은 그러한 강소국연방제로 만든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는 외교국방 같은 중요한 국가단위의 업무만 갖고 지방에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경찰권, 조세권 모든 것을 넘겨서 각 지역이, 지방이 싱가포르나 핀란드처럼 세계에 뛰어 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5개, 6개의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합친 그러한 경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구조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다 크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국가개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여섯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마무리발언을 1분간 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대선후보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공약과 정책, 비전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발언 1분씩, 순서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 그 소망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변화여야 합니다. 나쁜 변화는 안 됩니다. 과거로 가는 변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제가 기자하고 정치인 하면서 50개국 이상 발로 뛰고 그리고 선진국 어떻게 잘 사는지 봤습니다. 선진국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거리가 깨끗하고 지도자가 깨끗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두텁습니다. 인감도장, 무슨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 안 씁니다. 개인의 서명이면 족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것이 선진국의 징표입니다. 부패, 거짓말, 정경유착시대,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대결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 이인제 후보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선거 혁명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국민을 괴롭혀온 거짓말하는 세력, 낡고 부패한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밀어뜨리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리며 혁명을 해야 했지만 이제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유력한 후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그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나가서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국가를 지도해야 될 분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고 서러운 야당입니다. 또 저 이인제는 노무현 정권에 가장 반대하고 강력히 맞서 투쟁했고 정치보복을 당해 온 서민의 아들입니다. 민주당과 이인제를 통해서 선거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건국 이후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08년은 새로운 60년을 맞이하는 첫 해입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덜어낼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북핵을 없앨 수 있는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북미수교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부패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짐을 덜어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한테 희망을 주고 자영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일궈야 합니다. 일자리 500만개를 결코 부패와 바꾸지 마십시오. 일자리 500만개를 무능과 바꾸지 마십시오. 청년실업을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면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당당하고 위대하게 느끼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2002년 노무현 후보 눈물에 속아 지난 5년간 피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양극화를 확대시켜 가족불행시대를 만든 정동영 후보, 가족행복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땅투기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이명박 후보 대통령 되면 재벌, 부자, 귀족 자녀에게는 성공시대이지만 서민들에게는 기나긴 통곡시대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겸허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시대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저 권영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권영길, 서민의 행복한 시대,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 이회창 후보께서 마무리 말씀 1분간 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정권교체가 정당에서 정당으로 바뀌는 것, 사람 얼굴이 바뀌는 것이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일그러지고 우리가 자존심 잃는 시대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뢰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이고 국민의 믿음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에게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 이회창은 보시다시피 조직도 세력도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새시대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가지고 이 새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지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마무리 말씀 끝으로 이명박 후보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국민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경험이 없고, 책임감도 없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정치에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과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조그마한 기업과 세계적인 기업을 밟는 과정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와 만났던 외국 사람들 중에 지금 국가원수가 된 사람이 한 네 사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말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어서 늘 뒤돌아보고 남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정당화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렇게 해서 여섯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후보들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오는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은 사회, 교육, 문화, 여성분야 토론회로 오는 12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회 중 두 번째로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여섯 분의 후보자를 초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초청된 여섯 분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비교하여 후보를 선택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를 먼저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반갑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제 후보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반갑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 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토론과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후보들께 질문하는 UCC 동영상 질문,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시는 경우 사회자가 먼저 발언을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께서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약을 국민들께 알리고 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간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만한 토론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토론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에라도 중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초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문국현 후보부터 기초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국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랑해 마지않던 유한에서 34년 근무를 하던 문국현입니다. 지난 2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경과 경제는 늘 상생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는 우리나라 해양 오염 사건 중에서 최악의 사건입니다. 선복을 2중으로만 했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만리포의 아름답던 백사장이 이제 죽음의 검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신 많은 분들은 절대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강에서 낙동강에서 경부운하에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환경은 생명입니다. 환경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주변화 시대의 환경을 함께 지켜 나가 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정동영 후보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고통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꿈이 제 꿈이고, 고통이 제 고통입니다. 일자리 고통, 사교육 불안, 노후 불안, 부동산 고통,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의 꿈을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더 깨끗해 져야 합니다. 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가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조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더 깨끗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명박 후보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렵고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은 불과 강화도에 나오는 교량 두 개만 막았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태안반도, 10시간 내에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면 그 깨끗한 해변이 검은 재앙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수능시험, 2004년도에 이 정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했었습니다.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에 조금만 다른 신경 버리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마지막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인제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5년 동안 극심한 북경기와 실업대란을 몰고 온 잘못된 세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 80% 이상이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민주당은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민주주의와 중도계획을 통한 IMF 위기 극복이라는, 또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한 저력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은 야당 중의 야당입니다. 또 저 이인제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을 당한,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은 깨끗한 야당 정치인입니다. 민주당과 이인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건설하겠습니다. 침묵하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혁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권영길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 5년간 살림살이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비정규직, 집값 폭등, 입시지옥으로 살기가 더 힘드시지요? 국민소득 2만 불, 수출 4,000억 불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불법 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원의 비자금 만들었습니다. 정치권과 고위 관료들에게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뿌렸습니다. 서민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가야 될 돈을 그들만 흥청망청 써 댄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민생대혁명으로 서민들의 지갑에 매달 211만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거두어서 민생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 살림살이, 서민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은 정말로 서민의 행복한 시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회창 후보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무소속 이회창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나라가 망가지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핵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 정권에 참여한 사람은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제 스스로의 경력에서 위장 취업이다, 위장 전입이다, 탈세라는 이런 경력을 가진 후보는 국민에게 무슨 말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은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대통령은 정직과 원칙과 그리고 확고한 자신으로, 신념으로 국민을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회창은 감히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 이회창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섯 후보의 기초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의제는 지난 번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를 거쳐 전문 위원회의 검토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교육개혁이 22.2%, 사회기강과 부정부패가 21.6%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식품 안전이 17%,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오늘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양성평등 실현방안,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책과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성평등 실현 방안’입니다만 봉안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회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은 어떤 참고 자료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쓰여진 원고를 볼 수 있는 프롬프터 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국정 현안에 대해 우리 후보들께서 머리 속에 담고 있는 지식과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소신을 국민 여러분 앞에 진솔하게 펼쳐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 '양성평등 실현 방안, 여성 분야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 후보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여성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순서는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제 양성평등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대우 받고 일자리를 갖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남성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부평에 있는 GM대우자동차에 갔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일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월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이 현실을 개선해 내는 것이 양성평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모두 여성이 책임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국가 책임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약 9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백지상태에서 성과평가주의를 도입해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 내는 이 부분을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아이 낳고 기르는 책임을 국가가 가져오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대 갔다 오면 호봉 가점제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출산여성이 직장에 복귀 뒤 공공부문, 정부에서부터 출산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면 이것이 바로 가족행복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이명박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산업시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그 직업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의 권한은 여성의 경제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 경제력은 바로 일자리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또 4만불 시대를 열려면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5년 내에 약 150만개 일자리를 제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

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쓰고,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있을 때 저는 이런 여성 양성평등과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최고기관으로부터 연 3회 표창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UNDP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6개국에서 63위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고위직을 많이 써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남녀가 균형된, 대등한 입장에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해야 되고 헌법정신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여성의 경제력과 매우 관계가 있다, 그 경제력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 전통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 일하는 여성의 집, 남녀고용 평등법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설치해서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본받아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UN에서 두 번씩이나 표창 받는 가장 성공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 경제활동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활동 참여비율에서 아직도 남성에 모자랍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지금 비정규직 여성들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이 많고 또 승진 기회에 있어서도 유리천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진출 쿼터에 있어서 30%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장관도 50%는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승진의 기회나 임금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 받지 않는 이런 사회를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민주노동당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

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어서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67%가 비정규직입니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64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만든 비정규직 악법 폐지해야 됩니다. 올바른 법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50%를 확충하고 수용을 70%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할당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공직자 후보 그리고 당직자의 여성 30% 할당 쉬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에서 30%를 여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후보 인정을 받습니다. 민주노동당 공직자는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 1년에 한번씩 받았습시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 정당, 여성이 주인인 정당이 여성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온 국민이 행복합니다. 저 권영길이 만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회창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정년 43세의 여성교환원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판결을 해서 양성평등의 첫 판결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 전국구 국회의원의 비율을 30%, 그리고 광역시도의 여성비례대표비율을 50%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성의 참여율이나 또는 참여비율 쿼터를 넓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젊은 여성, 맞벌이 부부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출산이고 육아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저는 정했습니다. 2살까지의 영아에 대해서 젊은 부부에게는 조금 심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영아 보호소 시설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립보호시설은 매우 취약합니다. 사립보호시설의 수준을 공공정도로 올리고 공공보호시설을 많이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여성의 사회활동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덜어주어야만 진정 여성의 활동을 도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저는 아주 손쉽게 아내 이름 부르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결혼을 하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아내 이름을 10년, 20년 불러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아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처를 그래서 늘 “수애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두 번째, 최소한의 기초재산, 집 하나 정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강령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갈 때 대화가 있고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육과 유치원 교육 6년, 합해서 6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1층은 모두 다 보육과 어린이 방과 후 교실 등의 공간으로 쓰고, 1층에 살 사람을 한층 더 높게 지어서 꼭대기 층에 살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태반이 비정규직이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선진국보다 20%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그 중에 250만개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발전의 기회이고 가정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제는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은 한 후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모두발언을 한 후 나머지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모두발언을 한 후보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후보 간 상호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비에 민간 부담지출이 GDP 대비 2.9%로 이는 OECD 국가평균 0.7%보다 4배 이상이 높은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후보들의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상호토론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명박 후보가 모두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만족합니까? 학부모님이 만족하십니까? 학생이 만족합니까? 학교가 만족합니까?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은 평준화란 명목 하에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2004년도에 수능등급제를 많은 사람의 반대 속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첫 시행이었습

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교육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수능 과목이 많다, 지금 7개에서 9개인데 4개 정도로 줄이자는 것과, 영어 교육비가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만은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의 다양성 또는 수월성을 인정해야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에 자율화를 줘야 된다는 정책을 썼을 때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들으시고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이인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오늘 이명박 후보 말씀 중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공약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에 가면 이제 대학교의 학생선발 자율을 거의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본고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본고사를 금지하니까 논술을 변형시켜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제목을 내놓고 학생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논술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라든지 직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습득해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그냥 줄 때 다시 본고사가 부활해서 가져올 혼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명박 후보께서는 수능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셨더군요. 대학입시는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입시폐지까지는 수능등급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단,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께서는 실제로 수능등급을 점수제로 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점수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시킬 수 있을까요?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까지 하는 대통령,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라는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성 교육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생각 접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회창 후보의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이명박 후보께서 3불제 폐지하겠다고 아주 화끈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폐지하고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본고사를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단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한 이야기, 뒤에 한 이야기가 다른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등급제는 선배들이 학교 들어간 성적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고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일종에 연좌제와 같은 것입니다. 선배들이 공부 잘 해서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갔으면 덕을 보고, 못 했으면 아주 해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의미의 등급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최소한 학교 간, 학력 차,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인정된 단계가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일관되게 정책을 말해 줬으면 좋겠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이명박 후보 자녀들이 전부 특수학교를 다녔습니다. 공교육을 거부한 것이지요. 거기에 더 이어서 이제 특목고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화하면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정말 특권층 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을 계속 늘려 가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현재도 한 가구당 400만원, 두 자녀 있는 곳에서는 1,000만원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 교육은 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수 특권층만의 사회가 될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길 후보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정에서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잘 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장, 거짓말을 일삼은 분이 나라의 어른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반드시 국민께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저는 외교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문제에 관해서 이명박 후보와 철학이 다릅니다. 기업과 교육은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면 되지 교육은 다릅니다. 국민을 사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평소의 주장,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빼놓으셨는데요. 자사고 100개 만들면서 사교육비 줄인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100개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특목고 29개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가 눈덩이 같은데 이것을 자사고 100개에 보내려면 유치원부터 과외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2배로 폭등할 것입니다. 지옥이 됩니다. 이 후보께서는 자사고 100개 만드는 주장을 철회하신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이제 이명박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모든 후보들께서 제 정책을 자세히 보지 않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정책을 모방은 했습니다만 특히 이회창 후보께서는 수능등급제를 아직도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수능등급제를 지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같은 데는 없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32조원인데 사교육비가 30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부모들, 정말 어렵습니다. 없는 집 아이는 좋은 학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인생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과목 줄여야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수학시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에 맞는 4개의 과목 정도만 보면 되지 7~9개를 보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영어 과외비가 전체 사교육비에 반이 됩니다. 이것 하나 대한민국 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3만 5,000명이 1년에 유학을 갑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외국 갈 필요 없이 만들자, 그래서 농어촌 등 300개 정도 만들어서 없는 집 아이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없는 집 아이는 30% 정원에 대한민국 예산으로 모든 것을 대주자, 그래서 없는 아이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끊지 않는 것이 제 주장의 근간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잠시 다음 진행 전에 한 가지 후보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은 알고 계신 대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도록 준비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간임을 유념하시고, 주제를 벗어나거나 비방성 발언은 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이인제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두발언 1분 30초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리나라의 10년, 20년, 30년 뒤는 교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육의 혼란 또 낡은 체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입시지옥을 타파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서 혼란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하고 EBS영어인증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각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학 내에 영어마을의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해외동포 자녀들로 3,000명 확보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를 200개로 확대하고, 또 수월성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57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하되, 그 대신에 20%까지는 반드시 장학금을 의무화해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50개까지 특성화 고교를 확대하고 교육자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교육을 높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부터 1분간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서울은 평준화되었지만 광명, 부천, 춘천 등 비평준화 지역이 전국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인제 후보께서는 특목고를 비롯해서 비평준화 학교 1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고교평준화 해체 아니겠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복이 부끄럽고, 학교가 부끄럽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교복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실의에 빠진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학 서열화 1류, 2류, 3류 되어서 지금 입시지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서열화가 되면 우리의 청소년들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제 후보의 교육정책은 바로 고등학교를 서열화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아까 이명박 후보께서 수능등급제와 고교등급제를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잠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블제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교등급제에 관해서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수능등급제와 혼동해서 수능등급제에 대한 질문으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고교등급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르다, 이것은 선배들이 대학교 잘 들어간 성적 가지고 등급화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의 성적에 따라서 좌우되는 연좌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교등급제는 아직 폐지하기에 이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자꾸 늘리는 것은 결국 입시지옥만 늘리는 길이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모든 공교육 제도처럼 공교육 자체가 살아나야 되고 그러려면 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현재의 반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즉, 선생님 수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재정이 70조원은 되어야 될 텐데 현재 35조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설 부패 쪽으로 우리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설 부패 하나만 바로잡아도 저희는 우리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교육, 창조성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가 다양하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양성 교육이 생기고 창조적 교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강해지는 길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인제 후보님께서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특목고와 자사고 합쳐서 특사고를 100개,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특목고 50개, 또 기숙사 고등학교 150개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100개이면 300명 잡으면 3만명 학생이 자사고에 들어갑니다. 5:1로 잡으면 15만명이 그 문을 뚫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따지면 45만명이 자사고 과외 학원비에 학부모님들이 허

리가 될 것입니다. 또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아마 200만명, 300만명 학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사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사고 못 들어간 나머지 95%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불행감과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철학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자립형 사립고가 대한민국에 6개 있습니다. 6개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써 가면서 과외를 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농어촌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100여 개 만들고 공립학교를 기숙사형으로 바꾸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여건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교가 많아지면 입시에 들어가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 지역에 골고루 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모자랄 때 타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외가 필요 없습니다. 1년에 3만 5,000명이 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학생, 수요가 많은데 우리도 많이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후보가 100여 개 만든다는 숫자는 다르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께서 2분간 각 후보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선 반론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복되는 것이 수월성 교육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평준화 교육의 틀을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기본적인 교육 평등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또 국가적인 필요성은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결국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끼워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교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평준화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리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방형 자율학교, 또 그 밖의 수준별 학습을 통해서,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개방화 되고 또 세계화 된 이런 사회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수월성 교육을 감당하는 고등학교가 57개입니다. 저는 임기 내에 이것을 100개까지 넓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외열풍이 불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 때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녀들 교육 기회에 박탈감을 주지 않느냐, 이명박 후보는 30%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20%까지 장학금을 의무화해서 기회를 주도록 해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길 후보가 모두발언을 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어제도 쌍둥이 자매가 수능시험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강풍이 부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본고사, 내신, 수능이라고 해서 50번 정도 입시제도를 바꾸어보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저는 대학평준화를 통한 백년지계의 교육정책을 세우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을 통폐합한 다음에 대학입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고교졸업자격 시험만으로 대학입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려운 대학, 특수화 교육이 가능한 대학은 유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조원의 교육정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12조 6,000억원을 육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사립학교 상한제에 쓰고, 12조 6,000억원은 장애인 등 교육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드시 입시지옥, 사교육비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회창 후보부터 1분씩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 이것은 고교평준화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향평준화 된 폐단, 말하자면 고교평준화가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떨어뜨린 것을 대학까지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학까지 하향평준화 하면 대학에서 또 사교육비 들고 과외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는 과연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좀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등, 좋습니다. 권영길 후보가 주장하시는 모든 평등,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 평등은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하향평준화로 수월성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나빠져서 똑같아졌으니까 우리 교육의 큰 적불, 아주 붉은 불이 켜진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권영길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노동계의 대표이시기

도 하기 때문에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인 평생학습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장처럼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데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평생학습의 혜택을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93%, 2,0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평생학습이 2~3%도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발전의 기회가 없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간 10만명 다치고 3,000명이 돌아가십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발전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이 명품중소기업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대학평준화 주장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대학은 서로 다른 철학과 방법 그리고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2명 나왔습니다. 지방대학인 교토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에 5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켰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평준화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평준화의 상징인 독일에서도 최근에 우수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밖에 남지 않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학생들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고,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지만 대학은 본격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일본이 세계 수준의 대학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지금 대학평준화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도 학교등급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칭화대학, 북경대학으로 우열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21세기에는 우수한 과학자에 의해 수백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대학을 졸업하면서 같이 만들어 버리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수월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 가 보면 앞서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을 같은 반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앞서 가는 학생은 자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과외 공부하러 갑니다. 이것이 평준화에서 나온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고교도 평준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수월성을 인정해야 되고, 대학은 경쟁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도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좌파정당, 진보정당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이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입니다. 중국도 가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과외가 대단히 성행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엘리트 교육 중시합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려고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는 대학평준화, 지나친 평등주의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정통 좌파정당 국가들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낡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과연 맞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각 후보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권영길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역시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과 보수정당의 교육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평준화가 질 저하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학교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은 국제학력평가에서 1, 2위입니다. 그런데 서열화 되어 있는 우리 대학들 세계 60개 나라 중에서 59위로 꼴찌입니다. 핀란드 대학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준화의 틀 안에서 월반,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식, 문답식 교육이야말로 획일성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없어질 때야말로 다양한 토론과 독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시 폐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교육비 해결할 수 있는 것, 입시지옥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후보께서 입시지옥은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실제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학평준화를 통해서 입시제도를 없애고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만이 우리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국·공립대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고, 사립대 통폐합해서 고교졸업시험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서 입시지옥, 사교육비 없애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서 날카로운 공방이 후보 간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가 어

면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 동안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 관계는 물론 입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입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공교육이 개혁되어서, 예컨대 사설학원보다 같거나 보다 우수하다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왜 사설학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공교육이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교육개혁의 주체를 정부가 갖고 대상을 교사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학교를 아주 월등하게 발전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고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사 10만명을 증원하고 교사들에게 경쟁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수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열심히 자질을 연마해서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는 학원 못지않은 우수한 교육의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마치 추상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부터 1분씩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우선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좀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교육 쪽으로만 이렇게 몰려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후보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지식에 대한 이야기, 경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옛날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 있지만 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꼭 사람이 먼저 되도록, 또 어르신과 부모를 먼저 공경하도록 하면서 이런 경쟁교육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여러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람을 먼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경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중고교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덕·체가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

상화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수능 폐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15개 이상의 좋은 대학이 있을 때 수능을 폐지하고 대신 중심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체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예산 30조원, GDP에 4% 선인데요. 이것을 지난 20년 동안 역대 대통령이 부르짖어온 GDP 6% 선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교육 예산을 70조원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실 5,000개 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교육 정상화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사교육비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입시 제도가 현재와 같이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육제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뒤로 가고, 오로지 지식교육을 통해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있고, 창의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고 공교육에도 예산과 학교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회창 후보께서 공교육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된다 또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총론에는 제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교육이 교육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하향평준화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기준을 어디에 정해 놓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또 입시제도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하기를 이 수능시험을 이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수능시험, 일반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와 특별한 대학이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변별력이 높은 특별 수능시험으로 해서 대신 성적과 단순하게 몇 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저는 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인 7%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거두어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5조원의 재원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조원을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11조 6,000억원을 국·공립대학 통폐합,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께서는 교육재정을 지금보다 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3조원을 86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께서는 10조원 감세를 주장하면서 86조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다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2분간 이회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우선 정동영 후보께서 중고교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냐, 경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그리고 이인제 후보께서 상향조정 평준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교사 간 경쟁으로 질을 높이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제 10만명 교사를 증원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당 교사 수를 평균 16.1 정도로 줄입니다. OECD 평균수입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로 하여금 그 쓸데없는 행정에 모든 부담을 덜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수업하고, 연수하는데 쏟아 붓는다면 그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를 왜 뒤따라가야 됩니까? 학원 강사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예산 43조원입니다. 이것을 배로 해서 한 80조원으로 늘리자, 그렇게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에 관한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 번 쏟아 부어보자는 것입니다. 쏟아 부으면 저는 틀림없이 결과가 나온다, GDP로 따지면 대체로 6% 정도 됩니다. GDP 6%는 권영길 후보도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보다 많이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GDP 상황에 따라서 그만한 재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개혁을 하되 개혁의 주체를 교사로 하고, 개혁을 하되 충분한 보상을 주고, 개혁을 하되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이 교육 개혁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께서 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두발언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한학원

이사장, 유한킴벌리 사장을 하면서도 계속 맡고 있었는데요. 유한학원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항상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르쳤습니다. 윤리적으로 정직하라, 그리고 전문성으로서 남들로부터 믿을만한 능력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배운 것으로 남의 행복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친구를 만들 줄 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교육에 2배 이상의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 수를 현재보다 2배 늘리겠습니다. 한 교사당 학생수가 세계의 평균에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와 함께 학부모의 손에, 선생님의 손에 교육의 자율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창조적 교육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기회균등선발제에 의해서, 또 지역대학을 세계화해서 입시지옥을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국력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부터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특별히 반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 후보께서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한 나라인데요. 이대로 가면 교육 때문에 쇠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고통이 한계점에 왔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다음 날 교육 대통령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 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1년 동안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학입시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000개, 고등학교 2,000개,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012년 70조원의 교육재정, GDP의 6% 교육재정 할당을 반드시 달성할 생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문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없이 우리만 인성교육하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고 전부 사설학원에 가고 외국 유학을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입시제도의 자율화, 고등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육을 혁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10년, 20년 가는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는 10년, 20년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관 주도형 교육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적자원부, 교육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문국현 후보께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수치를 잘 제시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수를 2배로 늘려버리겠다고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 후보님께서 아마 제시하신 교육비가 GDP의 4.5% 수준인데요. 7~8%까지 충격적으로 늘려서 과연 재정이 견딜 수 있겠는가 걱정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이 임기 내에 일자리 300만개, 500만개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연 평균 10% 넘는 성장이 되어야만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 교육은 누구나 다 걱정하는 과제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저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 문국현 후보님의 교육정책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17대 국회는 사학법 국회라고 할 만큼 엄청난 진통을 치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비리를 없애고, 사학경영의 투명성 민주화를 위해서 2005년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사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불과 1년 반 만에 한나라당과 손잡고 사학법을 개악시키는 날치기통과를 감행했습니다. 문국현 후보께서는 사학법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수 비리 문제, 교수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문국현 후보가 인성교육을 강조한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인성교육인지 분명치 않다,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학부모들이 몇 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직해라, 바보가 되도 좋으니 곧이곧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눈치껏 잘 처세해서 반드시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직하라고 가르치자니 분명히 손해 볼 것 같고,

또 후자로 가르치자니 부모로서 할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정직하고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정의에 용감해야 한다, 살다 보면 그 아이가 커 가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올 것이다, 그래도 부모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항상 그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움직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성교육은 이런 식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 후보께서 정리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제 대학 경력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후보님들은 명문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주로 서울대학을 나오셨지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대학입시에 실패해서 간 곳이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 또 거기에서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너무 학력위주인 것, 그리고 명문학교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남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있고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연고주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 연고주의 때문에, 학벌 때문에 나라도 망치고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학벌 없애는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가 제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기회균등 선발제와 지역대학의 세계화입니다. 특히 이번 세종시를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드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기회균등선발제에 의해서 가난하더라도, 또 성적이 뒤지더라도 남녀균등하게, 또 가정의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제도와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해서 입시지옥을 확실히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부족 문제는 부패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2~3%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믿을만한 경제전문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상호토론 마지막 순서가 되셨는데요.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정동영 후보부터 모두발언 해 주시고 다른 후보들은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 이명박 후보께서 가장 오른쪽에 시장지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영길 후보께서 좌파적 철학의 교육정책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

관은 재앙입니다. 운하만 재앙이 아니라 자사고 100개 만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교육 지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운하재앙보다 자사고 재앙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대통령은 저의 오랜 꿈입니다.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 1년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서 교육혁명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15개 육성하고, 대학입시 수능폐지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좋은 대학 아닙니까. 카이스트는 수능 안 봅니다. 내신 성적기록부와 면접을 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아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냅니다. 세 번째, 중·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밤 12시까지 졸린 눈 부비면서 학원에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 너무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학생들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25% 사교육비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풀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제1 책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가족행복시대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부터 1분씩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본인에 대한 공약을 매우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면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 높여야 하고 부담은 줄여야 된다, 특히 사교육비는 줄여야 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지만 거기에 없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정원의 30%는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도 필요하면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대학 15개를 만들겠다는 것 착각입니다. 국가가 좋은 대학 만들고 나쁜 대학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버드대학은 미국 정부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율권을 줬을 때 스스로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선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대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GDP 6%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4.5%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사교육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외학원은 67% 증가했습니다. 정 후보께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고 계시는데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욕구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수월성 교육을 여기에서 잘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있었다면 아마 정 후보 자녀들 외국에까지 굳이 안 보내도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

한 발상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중 대학입시 폐지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몇 십 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정동영 후보의 정책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병제, 건강보험성 확대 등 권영길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것 가져가셨던데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교육정책도 육아부터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입시폐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져가신 것은 좋은데 서민 행복에서부터 저희가 창당 때부터 7년 동안 써오던 주황색 색깔까지 가져갔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신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베끼려면 좀 제대로 베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화 속에서 입시폐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시지옥은 더 심해집니다. 사교육비 더 심해집니다. 대학 서열화 속에서의 입시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시폐지는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회창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교육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이 정부의 국책결정의 중심에 있던 분이고 또 부총재까지 한 분입니다. 교육 황폐화에 대해서 먼저 해명이 있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인제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학 입시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학조차도 황폐화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대학에게 학생선발권, 전형의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 지방대학이든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머리 다 좋습니다. 맡겨두면 정말 좋은 방법,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본고사 부활로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학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게 하면 얼마든지 해낸다,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가 반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현 정부가 우리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교육비를 쓰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내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느냐, 이것 얼마나 죄책감 갖게 합니까. 큰 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가 3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40조원, 50조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과하셔야 되고, 교육 경쟁력이 과거에 1위까지 가던 것이 이제 11위 이하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 있습니까. 학벌사회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역대학은 죽어갑니다. 천안 이남에 있는 많은 지역대학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듭니까. 지역대학의 세계화 없이 한국에 세계와 미래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께서 각 후보 반론에 대해서 2분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다양한 좋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제 교육철학은 선진국 표준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선진국 아닙니까. 교육도 선진국 표준으로 가야 됩니다. 대학입시 폐지가 왜 말이 안 됩니까.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수능시험 봅니까? 거기에 SAT라고 물론 영어, 수학 점수를 참고합니다만 만점짜리 1년에 1,000명 이상 떨어뜨립니다. 아까 카이스트 예도 든 바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꿈은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졸라매고 무한지출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사교육비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안 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올인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교육혁명에, 교육개혁에 올인 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어야지요. 지금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에 강남구는 178명 들어갔는데 성동구는 5명, 마포·금천구는 8명, 이 기회의 문이 이대로 닫혀가는 것을 놓고 보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교육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5,000만명이 이해관계자입니다. 5,000만명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대통령을 선언하고 내년 1년을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반론들을 다 참고해서 교육혁명을 만들고 대학 경쟁력 강화, 중·고등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사교육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 사회, 교육, 문화, 여

성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을 막 지나갔습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 공모를 통한 345개 응모자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UCC 동영상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 같이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진** :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가 관광수지적자를 발표하면서 그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이라든가 관광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관광인 유치 전략, 그리고 관광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후보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시지요? 순서상 이인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선 관광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인구가 5,000만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명 관광객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은 자기나라 인구만큼 관광객이 옵니다. 스페인은 자기 인구의 한 2배 정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500만명 정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산, 금강산까지 관광공동특구로 만드는 일이 남과 북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 수 늘리는데도 중요합니다. 지금 '2012 여수세계엑스포'가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남해 다도해가 세계적인 자연유산입니다. 이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가 제2프로젝트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해안을 우리나라 지중해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아주 극대화하겠습니다. 관광은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고, 특히 높은 물가라든가 관광의 가장 나쁜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 같은 데도 관광이 너무 부진해서 큰 문제입니다. 높은 세금이라든지 부족한 인프라를 개혁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5,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어떤 프랑스의 관광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나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고 해서 한 번 가 봤더니 볼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 김포공항에 내려서부터 서울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멘트 집밖에 없더라, 전부 세계화

한다고 유럽풍, 미국풍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 유치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특색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호텔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장 짓는다고 관광객 오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만들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짓는다고 뭐 한다고 다 파헤쳤습니다. 경주 부여에 갔다 온 외국인들 “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광자원을 왜 살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세계화한다고 큰 빌딩 짓고 골프장 만들고 하는 토건국가식의 관광정책으로는 절대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세계문화 속의 다양성을 살려내고 그 조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만들 때 관광한국이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1994년에 제가 총리로 있을 때 VISIT코리아, 한국 방문의 해를 설정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때 관광객 유치에 무엇이 장애인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의 교통표지나 또 교통안내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영어나 또는 한자어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표지판이 연결이 안 된다, 공항에서 내려서 서울 시청까지 가고 싶는데 그것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아직 그것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우리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중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과 같은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용어로 쓴 표지판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입니다. 정말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있는 자원 그대로 개발하고 동시에 골프장과 같은, 이 부분은 권영길 후보 의견과 견해가 다릅니다. 현대에는 골프장과 같은 복합된 관광시설 자원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입니다. 복합적인 교통수단이 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관광코리아를 어떻게 만드실지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관광객을 현재 700~800만 선에서 2,000만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임기 중에 그것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마가 유럽의 한 구석에 있었지만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가 되면서 결국 천년제국을 이루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볼 것의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도시관광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우리 문화, 역사, 전통, 재산은 농촌에 있고, 산촌에 있고 또 일부 불교문화재는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팔만대장경 같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직지심경, 이런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한국의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농촌 살리기 또 고향 살리기가 관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향세 운동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UN기구라든가 세계적인 교육 기관을 세종시 등에 유치하는 것이 관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관광코리아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전략산업 중 주요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청정산업입니다. 공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화가동률이 100%입니다. 제조업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것이지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5,000만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자, 특파원, 정치인 하면서 50개국 이상 가서 공항에서 렌트카 빌려서 스스로 손수 운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찾아다니면서 일 봤습니다. 선진 관광대국은 다 길거리 운전하는 것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하고, 잠자리도 편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한다고 했을 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 중국 관광객은 돌아갈 때 삼계탕에 물려서 간다고 합니다. 아침도 삼계탕, 점심도 삼계탕, 저녁도 삼계탕, 먹을 것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오히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특혜를 주어서라도 외국인이 와서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한 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름만 특별도이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거든요. 이것부터 탁 놓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시범지역으로 홍콩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관광코리아의 제 전략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는 어떤 관광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이 정권이 관광에 대해 말은 했습니다. 제주도를 특별도로 만든다고 했지만 말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은 사

람은 내일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은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첨단산업이 10억원을 만들 때 고용이 8~9명입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50~5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해서 외화 과도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텔이나 이것이 다 관광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호텔을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특별세를 전부 세금으로 거둡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비, 가장 비싼 음식값으로는 관광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관광은 옛날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는 관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200만명이 가고 있고 550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도 우리 내부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는 데에서부터 즐기는 레저로, 스포츠로 해서 고소득층이 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대선 후보들께서 관광 진흥에 일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대선과정도 원만하고 오늘 나오신 후보들께서 아주 훌륭한 토론을 이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3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책, 문화 분야 관련 질문입니다. 권영길 후보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영화, 게임, 음악, 드라마 등의 분야는 그나마 콘텐츠들이 다소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통문화, 문학 등의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만 한국전통 문화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속의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 문화를 위해서 2005년에 유네스코는 세계의 문화 다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국산영화 제작은 지난해의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들어오면 우리 전통문화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문화가 미국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화가 세계 80%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외화도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한미FTA를 막아내야 된다,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는 국가나 정부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화를 창달하는 데는 2가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마음껏 뛰고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제약을 안 하고, 제안을 안 하고,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하지 못하는 또는 정책적으로 키워야 할 부분,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고, 돈을 들이고 또 다양한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으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지원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심형래 감독의 영화제작소를 가 봤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어렵게 세계시장을 뚫었습니다. 이런 인재도, 이런 훌륭한 시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키워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대학시절 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으로부터 문학상도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실 많은 시를 써 왔고 또 영시도 쓰면서 요즘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것을 7년 동안 문학의 어른들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한때 안기부장 집인 것을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 우리 문학을, 또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우리 시 우리 노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신작가곡을 20곡씩 해 왔습니다. 시인, 작곡가, 성악가, 연주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 우리 문학을 포함해서 우리 영화 그리고 한류 세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농촌해설가, 문화해설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교육 대통령과 함께 문화 대통령도 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화 콘텐츠 분야입니다. 저는 5년 동안 100만명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여기에서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시장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보다 큽니다.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 음악은 한류를 통해서 이

미 경쟁력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가위질, 검열이 없어졌습니다. 소재의 자유, 창작의 자유, 마음껏 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화 산업은 세계 10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이것을 5등으로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지만 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문화산업 강국 만들어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문화 콘텐츠 산업을 21세기 세계화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과 방재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5% 정도 임기 내에 올리려고 합니다. 5% 올라가면 세계 5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은 1,200조원입니다. 만약에 5%를 저희가 차지하게 되면 60조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영상이나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몇 가지 산업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를 내어서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화 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끝으로 이인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백범 김 구 주석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 대국은 어렵지만 문화 대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역량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문화 대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은 이미 한류 열풍을 일으켜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역량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콘텐츠를 산업화하는 인프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물놀이팀이 UN총회장에 가서 세계를 감동시킨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종교, 승산 큰스님께서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화 시키고 또 기독교 문화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대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이회창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로 사회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 나라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상하고 계신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이회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저는 대법관으로 있었고 감사원장을 해 봤습니다. 사회기강을 잡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떤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의 의식이 국민 사이에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고, 아주 솔직하게 국민 앞에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원칙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이러한 법질서 사회기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새로운 대선에 의해서 출범하는 정권,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가 지도자로서 사회기강을 잡을 수 있는 정직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우리 사회는 너무 지도층 부패에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가 연간 100조원 가까운 지하경제를 만들고 있고, 정부예산을 훔쳐가는 것만도 50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 50조원이라는 것은 1,000만명이 500만원씩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서민 가정에서 500만원을 왜 지도층 범죄에다 기증을 하십니까? 부패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은 지도층 범죄에 대해서 4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점심을 얻어먹었다고 50배의 가중처벌을 합니다. 지도층들은 유전무죄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60년 열어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지도자가 깨끗해야 합니다. 결국 대

통령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제 다음 답변차례이신데요. 정치공세 마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거짓이면 거짓, 진실이면 진실, 판가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는 강남 8학군 같은 데입니다. 학부모들이 아들, 딸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위장 전입했다고 교육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 여러 번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대통령이 되시면 위장전입 단속하실 수 있으겠습니까? 또 아들, 딸 빌딩 관리소에 이름 올려서 수천만 원 탈세하셨는데 뒤늦게 수천만 원 납부했습니다. 힘없고 뺏 없는 서민 같으면 탈세하고 몇 년 뒤에 뒤늦게 세금 갖다 내면 무사할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심한 것 같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저는 최장수 CEO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4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는 인정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정치하면서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에 저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들을 정치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도적으로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검은 돈, 눈먼 돈, 세는 돈, 어디에서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처벌은 징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제가 5년 대통령이 되면 정말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부패 없애야 됩니다. 부패만 없애도 경제성장 1%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별도의 부패 전담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제도는 더 연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입니다. 지금 감사원, 대통령 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피와 같이 쓸 수 있는 국회 안으로 감사원이 와서 공직사회 투명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예속되어 있는 한 정치부패, 권력부패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부패해 집니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

는,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사회기강 확립, 부패청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때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빵 몇 개 들고 나오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총수들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이진희 회장, 2002년에 불법비자금 조성해서 한나라당에게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 주었습니다. 그 돈 받았던 분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불법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원 비자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떼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검찰, 언론 전부 삼성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비자금 조성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삼성 이진희 회장을 구속시킬 때만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반드시 사회기강 확립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섯 후보 여러분,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준수는 물론 발언 내용도 가급적 주제 범위 안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섯 후보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입니다. 문국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인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대학생들이 대통령감 1위로 저를 선출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지지도가 제일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 낼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나라, 따뜻한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한 판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이 승리하도록 놓아두시겠습니까? 거짓이 승리하고 선진국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장사 안 되고, 세금 무겁고 아들, 딸 취직 안 되고, 여러분 가슴 속의 상처와 아픔을 잘 압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기 위해서 열정과 고민해 왔습니다. 양심 속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법 지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량한 국민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 여기까지 만들어오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차례이십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민주주의는 싫증나면 물러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면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음해하고, 말만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비록 오늘날 정치사회가 혼란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 우리 한나라당은 정통정당으로서 지켜왔고 정통 후보로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는 과정에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가지고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차례이십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선택의 날은 가까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입니다. 국정실패의 세력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청와대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가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사회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제도 살고 사회도 통합되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온 진정한 야당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저 또한 실현과 고난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로서 서민 대중을 위해서 불꽃같은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민주당 정권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차례이십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민주노동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도 사표론 때문

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비전과 희망이 없는 정치세력에게 던지는 표야말로 사표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 저 권영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영길에게 던지는 한 표, 한 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표입니다. 권영길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되면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로 나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시다. 저 권영길, 민생대혁명으로 서민지갑에 211만원 채우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꿈을 이룰 표, 희망의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마무리 발언 이회창 후보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선은 이 정권의 심판이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IMF 때 우리들 모두 돌반지까지 꺼내면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그 와중에 돈을 벌겠다고 주가조작 같은 것을 꾸미던 젊은이와 동업한 이명박 후보, 또 20번이 넘는 위장전입, 위장취업으로 세금을 탈로하고 국민을 속인 이명박 후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모으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아직 털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사퇴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말 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이회창은 이번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섯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토론은 경제, 노동 그리고 복지와 과학 분야로 오는 1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초청된 후보자 외에 네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12월 13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초청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이렇게 네 분의 후보자를 초청해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4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신 후보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9번,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8번,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7번,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입니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0번,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11번, 이수성 후보는 위원회에 토론회 참석 포기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오늘 토론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 UCC 동영상 질문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발언시간은 엄격히 제안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시면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께서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약을 국민들께 알리고 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제시된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

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 후 또는 발언도중에라도 중지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전 관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난세구국의 의병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 온 위대한 전통에 행동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전 관입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졸업 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흐트러지고 빼뚫어진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로 하고 살맛나는 세상,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나아가 정신문화문명의 중심 국가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어느 한 사람의 거창한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영, 즉 공개, 공평, 자율, 참여, 책임의 공통주체 공공 경영만이 국민통합과 지속적인 국가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과 구원투수 기호 9번, 전 관이 함께 유권자 선거 혁명으로 월드컵 때 광장의 환희와 같은 가슴 벅찬 새시대를 직접, 함께, 즐겁게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깊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허경영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부채자 투표가 지난 이후에 TV토론을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5대 권리인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중 5번째에 있는 자유권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이라는 8대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선후보들에게 공탁금 5억원씩 중앙선관위는 받고, 실제 부채자 투표가 끝난 이후에 출마하게 해 주셔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과 반도체 산업, 방통대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68불에서 1만 7,000불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근모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드리는 이 자리에 기호 7번, 정근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정말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을 희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 대선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대선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보시면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함께 약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서해 유조선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두뇌를 십분 활용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뜻이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금 민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금 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진보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개혁세력도 그리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치가 재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5년, 새로운 진보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진보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진보가 원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진보에게는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경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을 이룰 능력이 분명히 진보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평화국가로 만들고, 녹색국가로 만들고, 사회국가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능력, 진보에게만 있는 진보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만 외치는 낡은 진보,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낡은 진보는 이미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진보를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4인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회의 의제선정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를 거쳐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입니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해서 후보 여러분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후보께서는 모두 8개의 주제로 공통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으로 정치 분야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그것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허경영 후보부터 1분 30초간 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직무규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장관, 각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원수기능과 수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면 헌재와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정성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대통합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으로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이다, 무슨 5년 중임이다, 4년 연임이다 등의 정치제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근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우리 헌법에는 상권분립이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또한 책임총리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괄하고 장기적인 교육과 과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고, 책임총리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그룹에서 임명하고, 우리가 내정과 또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원활한 국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명시하고 또한 우리의 여권을 신장시키고 앞으로의 인권을 확실히 하고 환경문제를 명시하는 개헌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금 민 후보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면 내각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제 어떻게 고칠까' 여기에서 단임이나, 중임이나, 아니면 임기

가 얼마나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 후보가 난립되더라도 정치적인 가치의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 지금처럼 파행적인 단일화 협상 대신에 다수자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보장됩니다. 당선자가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개정 논의는 단순히 통치구조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20년이 되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저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을 고쳐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의 의무를 지는 사회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헌법 제11조, 헌법 제60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구조를 개편하기 전에 헌법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전 관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우리나라 형편상 당분간은 대통령 4년제로 중임연임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자리를 권력과 돈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있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가치관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빨리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느냐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1주제인 정치분야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으나 지방분권, 재정자립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방마다 자기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특별히 교육제도와 연결되는 지방자치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밀접한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고 각 지방마다 산업의 특성화 또한 지역의 전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의 질문에 대해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저는 2가지 방향에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더욱 많은 주민참여적 지방자치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나라입니다. 예컨대 연방제국가인 독일 헌법에는 지역간 등질성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헌법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분권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2가지 방향에서 지역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현재처럼 전시행정 위주 그리고 건설업자만 배불려 주는 개발들이 지향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전 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는 군에 있을 때 합참전략본부에서 대략 10년쯤 근무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지시로 통일 후에 한국의 그림을 그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느낀 점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체의 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과 시간적으로 5년, 10년, 100년을 내다 본 그림을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만 국가적인 낭비가 작은데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선자가 되면 국가기획부, 안전기획부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또 공간적, 시간적으로 전체를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지방자치 활성화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끝으로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반드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폐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사람이 서울시장이면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전부 서울 한나라당입니다. 부산 시장이 한나라당이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호남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그 예산은 각 지자체 의원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며,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수를 절약하면 1인당 7,000만원씩 4,000여 명의 보수를 절약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해야만 국가의 예산이 15조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소각장을 예로 들

면 서울시내 전체 소각장은 폐지해야 합니다. 대도시 주민이 많은 수도권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는 번두리로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토론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통일, 안보분야 관련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금 민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핵문제, 대량 살상 무기개발 및 수출 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금 민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이 시대가 적어도 전환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53년 정전협정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에 대한 시급한 통일론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평화체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과도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게 된 것, 불능화 국면, 저는 비핵평화주의자로 매우 안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 폐기의 과정 전체는 그 자체로서만 끝날 때, 즉 북한 핵만 없어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정체제가 수립되지 않을 때 반쪽짜리 해결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종전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협정에 지역 6개 국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UN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간 공동 안보 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평화국가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평화체제 만들기, 평화국가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통일의 여건이 수립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전 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는 북한에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50년까지도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위성국가화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보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는 6자회담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상황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듯이 믿되 점검한다, 트러스트 앤 벤티라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형제로 맞지만 점검하면서 물자도 보내고 협력을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기간 내에 업적을 세우려고 초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잘못된 것의 상당 부분은 자기 임무기간 내에 어떤 업적을 내려고 한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남북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을 것을 막고, 줄 것은 주는 확실한 원칙과 과정 등이 국민의 합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저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미국에 있는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씨버이아이디 컴플리티, 아주 완벽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라, 이 씨버이아이디를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느슨하게, 충분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두겠다, 일부 유보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치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는 미국과 함께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앞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되어 가면서 중국 민주공화국이 5, 6개로 생기면서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고와 통일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문제를 지금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서도 앞으로 남북문제를 다자간 안보체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공동체로 북한을 대응하면서 경제협력을 계속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정근모 후보께서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저는 핵 전문가로서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대사로서 북한 핵문제를 꼭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으로서도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가 연결된 것은 사실 국방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동북아세아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즉 아세아태평양 조약기구, 유럽의 평화를 지킨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지역안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는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적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체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통일 안보분야 관련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답변시간이 1분입니다. 전 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고, 이 선언문에는 전문과 10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의 대부분은 다음 정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승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는 합참근무가 많다 보니까 국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차원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검토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승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해로 우냐, 이로우냐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이렇다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것이지요?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예, 더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승계 문제에 관해서 허경영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현 대통령이 북한과 약속한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문제입니다. 북한은 1991년 우리와 동시에 UN에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아까 금 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3조에 있는 국토의 면적문제, 표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통실안보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약

속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국가 간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대로 할 것이며, 다만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500만명인데 900만명이 월 100만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1,000만명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미리 유념하셔서 시간 전에 말씀을 끝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근모 후보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데에 대해 따라야 되는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호혜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존중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북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한반도가 서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저는 10월 4일 정상선언을 6.15선언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6.15선언이 민족통일담론 중심이라면 10월 4일 선언은 평화번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0월 4일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에서 국가 대 국가 평화번영 패러다임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한반도 평화경제도 수립될 수 있고, 남북의 경제적인 번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4일 선언은 2007년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10월 4일 선언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 나라

중에 25위로 매우 낮은 사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 전달기구를 만들거나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상하고 계신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저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먼저 정치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문법 국가가 아니고 성문법 국가이지만 너무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기강 확립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집행 비율을 100%로 해야만 내년에 그 예산을 100% 타는 예산집행 비율제도를 없앨 것입니다. 예산을 아껴서 80%만 쓰면 20%가 그 다음 해에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완벽하게 다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물론 당선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예산 집행 비율을 작게 쓸수록 예산을 더 넉넉하게 줄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100% 다 달성해서 쓰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도블록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유럽과 일본은 30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예산, 정치인들이 낭비하는 예산이 160조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20조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약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원씩 줄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5,000만원씩 남녀 1억원을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000만원씩 줄 것입니다. 평생 1인당 15억원을 돌려줄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해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근모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제기관에서 평가를 해 본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 및 장관 또는 차관급까지 혹시 재직 시에 잘못된 그러한 범법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가 지도자부터 깨끗한 것이 중요하고 또한 앞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행정을 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한 것은 안창호 선생님 말씀대로 꿈에도 거짓말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자식들을 잘 가르쳐

야 될 줄 믿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2가지 문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 부패 문제입니다. 현재 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에 관한 안이 있습니다. 기소권 또한 수사권까지 갖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납세자 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회의를 공개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부패를 막는 일만으로 사회 전체의 부패지수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기업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주장합니다. 국민의 돈인 연기금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비중 있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책임경영을 하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현재의 주식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회를 신설하고 감사회 권한을 강화해서 투명경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비리 없는 나라를 만들고 또 한편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특별기관을 두고 감시토록 한다면 사회 전체는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전 관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는 사회기강을 확립하면 그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 될 것으로 보아서 우선 척결해야 될 범죄를 4가지로 봤습니다. 가정과괴범, 조폭과 마약, 간접 살인 소위 말해서 유해식품이나 공해 배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부패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습범과 과실범을 구별해서 1년 이내에 3심을 끝내고 형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죄를 지으면 이런 범위에 드는 사람들은 바로 처벌받는 것이 가시화 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부유층은 있어도 상류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권층은 있어도 지도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의 상류층은 전쟁이 나면 가장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여권, 비자, 비행기 표를 사는 사람이 80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맑아지리라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역시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사회분야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일반 국민들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부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등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요. 각 후보자들에게서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이 나오도록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호도되는 경우가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똑같은 척도 밑에서 판단하도록 범치주의가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다른 어떠한 분들보다도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일소 방안에 대하여 금 민 후보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지도층의 도덕감에 호소하는 통제보다는 역시 법과 제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주장합니다.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수익성 투자가 아니라 노동,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사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연기금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대 기업의 주식을 사 들입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가합니다. 경영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비리에 대한 대비책부터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비리를 바로 잡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전 관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우리나라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진 데에서 나왔습니다. 진선미성에서 '성'은 절대적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된 사회에서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권자 선거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체는 국민이지, 소위 지도층은 영터리가 아니고, 두 번째로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진 사회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스럽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조건 없이 헌신하는 집단이 가장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허경영 후보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일소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지지 아니하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인데 1,000만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1,000만명의 실업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00만명 중에서 9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고 36가지의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끊임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모두 폐지하고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을 폐지하면서 간접세로 바꾸겠습니다. 지도층들이 물건을 살 때 세금으로 미리 선금을 내게 합니다.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없게 만들면서 지도자들이...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UCC질문입니다. 국민 공모를 통한 345개의 응모작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UCC 동영상 질문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 질문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CC 동영상 질문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금 민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CC 동영상 질문 내용을 같이 한 번 들어보시지요.
- **이은영** : 안녕하세요. 저는 중립동에 사는 이은영입니다. 대통령 후보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국제결혼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 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현재 한국국적법이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예비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문화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바른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혈통민족국가에서 세계시민국가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동화정책 또한 문화 다양성의 옹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비로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야 말로 이 사회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장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한 이 사회가 더욱 관용 스펙고 포용력 있는 다원적이고,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적인 세계시민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 관 후보께서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후보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에서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도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허경영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우리나라가 유흥산업이 발달하면서 400만명 정도의 결혼을 해야 될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또 빈민들이나 서민들은 결혼할 신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의민족이고 단일민족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서 국제결혼

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그 성 때문에 망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지만 진시황제는 성을 쌓다가 곧바로 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해야 하고, 글로벌로서의 FTA나 모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이기주의, 국수주의를 지양해야 됩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군인 1개 사단을 투입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근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 초입니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700만명 이상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국민의 수는 거의 배가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융합된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경향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비한 법령은 완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국가로 발전되는 것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국적제를 활용해서 앞으로 마음도 열고 우리의 활동무대도 열어가는 정책기조를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제일 관심이 크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절감’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전 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보도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에는 무려 4배에 이릅니다. 각 후보들은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희가 교육문제를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 따졌을 때 해

결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문제부터 다루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그러나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당분간 3분제도를 유지한 채로 대학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입시는 자유롭게 하지만 졸업은 수준을 갖춘 사람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특히 공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교 교수 수준의 사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초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초등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서 기본이 갖추어진 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을 한다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학원들도 양성화해서 사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경제는 세계 11위인데 교육은 세계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인 저는 대통령이 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서 전공해야 될 과목 1개의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물리학 배우러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능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GNP는 1,700불입니다. 우리는 그 10배인 1만 7,000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에 들어갈 때 1개의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 숙어, 독해, 토플 등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해서 대학시험을 봐야지, 영문과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은 국가예산도 낭비이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에 인색하시네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앞에 진행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시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근모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참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중등 교육에서 참교육을 실행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사회에 생활인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문인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아 교육부터 초·중·고교 교육까지를 2년을 단축해서 10년 초·중·고등학교를 마치면 생활인이 되게 하고, 수능시험은 하나의 수학능력시험이니까 고 2 때 보게 하고, 대학을 갈 때에는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의 꿈에 맞는 입학전형 제도로 넣으면 우리가 13조원의 시험을 보기 위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전문교육, 중·고등학교는 생활인을 만드는 교육, 그리고 입시위주는 하지 말고 고3 때는 앞으로의 진학에 대한 또 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해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역시 교육문제라서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 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한국의 대학 교육은 질과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33조원이나 되는 사교육비 낭비가 일어납니다. 저는 대학 평준화가 답이라고 봅니다. 대학이 평준화된다면 33조원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서열화 된 체제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학들은 전부 평준화 대학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학의 경쟁력이 혹은 교육의 질이 한국 대학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33조원의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학 평준화는 결코 학력 평준화나 하양 평준화나 학생들을 평준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준화된 교육 제도 속에서도 인재는 양성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이지 양성된 인재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대학처럼 썩히는 곳이 학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문제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네 후보들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1분입니다만 전체 진행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허경영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폭행이나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 또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의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교권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저는 교사들을 일정기간 교사의 능력을 테스트한다거나, 교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검증하는 시스템에 전부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디까지나 교사로 임명이 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평가한다, 어떠한 기관도 교사가 된 이상 그 교사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을 폐지하고 전부 사립대학으로 해서 금 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평준화하지만 각 과별로 특성 있게, 연세대학은 뭐가 가장 뛰어나고 서울대학은 뭐가 뛰어나다는 식으로 각 대학이 개성이 있어야지, 대학이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등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전체 사립대학으로 하면서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스승한테 대들겠습니까? 15세 때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에는 15살이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5세이면 충분히 대통령 후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근모 후보 차례입니다.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교육은 근본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교육 내실을 하고 또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체험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윤리에 대해서 그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바탕이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교도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착실하

게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품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는 기본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 금 민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학원에서 배운 것을 학교에서 복습만 하는 구조에서 교권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 평준화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현재 교권이 그런 제도만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과 내용문제입니다. 즉, 지금현재 교과과정이 전부 지식 전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장래에 성숙한 정치적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때 교권이 추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선생님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만 학생들한테 인식될 때 그 선생님은 때로는 학원 선생님보다 무능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비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뿐만 아니라 교과과정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면 교권실추를 염려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끝으로 전 관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교권확립 문제는 그 부분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가치와 우리가 수단으로 써야 될 돈, 권력, 기타 등등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면 교권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제도를 아무리 바꿔봤자 결국 국가 자원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왜 이번에 유권자 혁명이라고 했느냐, 2가지가 달라져서 혁명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주체가 몇 몇 사람들의 지도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주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결코 현재처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나머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인데요. 특히 이 첫 질문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잠 못 이루는 많은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께서 어떤 답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첫 질문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20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젊은이들의 필수품인 휴대폰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젊은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88%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리가 창출하도록 정책을 쓰면 그것은 일자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이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90%의 일은 명장이 되는 길이고, 10%가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대학교육이 더욱 왕성해져서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국적 기업과 함께, 또한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설비 투자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실업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노동사회혁신기금 15조원을 연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숙련 노동, 청년실업자들, 비정규직 여러분들을 교육생으로 채용합니다. 교육생에게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고숙련 지식기반 노동으로 전환시킵니다. 이처럼 양성된 인력을 통해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인력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사회혁신기금 15조원은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사회혁신기금으로 만드는 사회적 직업훈련시스템 속

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년실업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키고 청년층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할당제를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전 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우리가 경제를 화폐지수 경제로 풀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 지수 경제로 풀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는 말 대신에 인본상업주의라는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고 또 가게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이 천하지대본이다, 일자리 일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점입니다. 세상과 단절이 되면 정신이 병들고 사회가 불안해 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일거리를 돈 버는 자리로 보지 말고 세상과의 연결점으로 본다면 일자리, 일거리는 이 세상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일거리를 많이 유지하는 기업의 경영자나 소유자를,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청와대에서 30대의 기업을 불러다 밥을 먹는데 차라리 일자리 일거리를 많이 유지한 기업인을 청와대에 모셔서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고 또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만하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너나 나나 매출액만 늘리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싫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허경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10%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1%입니다. 2007년에는 거의 1%도 못 미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GNP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매월 100만원씩 쿠폰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월급을 얼마를 주던 간에 국가에서 1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데 100만원의 쿠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들이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가서 5년을 중소기업에 있게 되면 3억원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서 중소기업을 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중소기업 취직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반도체는 국민소득이 2만불까지 가능하지만 5만불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을 변경시켜서라도 줄기세포라든지 생명산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호

남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새만금, 목포, 광주, 여주, 광양, 부산, 마산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만들고….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도 답변시간을 1분 30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민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집값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지나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씩 금 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보유세와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빚을 얻어서 사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주택은 사실 국민주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미 금융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현방식이 이미 금융상품이 된 부동산 주택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저리 모기지형 주택입니다. 사회주택입니다.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이지만 꼭 환매조건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금융공공성의 입장에서 주택 대출금리를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빚 얻어서 집 사신 분들 집값 떨어질 까봐 전전긍긍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주거수당을 줌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 토지 주택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 주거형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주거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부동산 주택이 금융상품이라는 현실 속에서 금융 공공성의 측면에서 한 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후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어서 전 관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토지문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토지문제를 급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기방향이 서서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공개념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허경영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저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원인은 세제에 있다고 봅니다. 양도세, 보유세, 종토세 등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식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인데 지금은 집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1%를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5%, 10%, 15% 연체되면 18%, 25% 정도의 엄청난 폭리를 하면서 모 은행장이 스톡옵션을 1년에 200억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는 연리 1.5% 이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교육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은행 이자입니다. 간은 짧고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대출금리를 1.5%로 낮추고 양도세, 보유세, 이 빌딩에서 수입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지만 토지를 아무리 가지셔도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부유세가 있다고 하는데 부유세를 낸다는 발상 자체가...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정근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저는 지난 14년 동안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주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래서 주거정책에는 이미 각 사회화된 대지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대지를 토지공개념 개념으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수요공급에 맞도록 공급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양등을 막고 또한 1가구 1주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너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적정수준에서 막고, 양도세를 계속해서 통제함으로써 주택에 관련된 유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네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토론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 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제도는 재정적 불안정성, 연금 간 형평성 문제,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전 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 없어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전 관 후보님은 시간에 늘 여유가 있으시고, 허경영 후보는 시간이 늘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허 후보님 말씀하실 때 중단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제한된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부은 돈은 전부 돌려드려야 됩니다. 리고 실제로 연금을 붓지 못한 사람이 늘어서는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연금을 부은 사람들은 연금이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를 귀찮게 하고,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처벌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매월 70만원씩 주어서 부부 140만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후에 어떤 불안도 없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연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5,000만원씩을 주어서 노인들이 자녀들 결혼 때문에 시골의 논밭이 전부 농협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전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5,000만원씩 국가예산을 절약해서 반드시 드리고, 출산할 때 3,000만원씩 주고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요금을 각각 5만원까지 국가에서 유보하고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6만원 나오면 1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정에서 세금고지서를 한 장도 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물론 재산세, 양도세, 토지세, 종토세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제한된 시간이 경과했음을 유념해 주시고 토론위원회 규칙을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근모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연금은 노후대책에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기가 노

력해서 연금을 붓고 또한 그것에 대한 노후의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창의성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사회 안정망에 대해서 확실한 제도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연금제도와 관련되어 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르신들께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하고 일 하실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상근직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주어져서 연금제도와 병행해서 안전한 생활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연금제도를 전체적인 사회 안정망 개념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끝으로 금 민 후보께서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사회연대국가의 기초가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사회 연대성 복지의 기초, 조세와 보험과 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8만 4,000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 수준에서 한 사람이 국민답게 살기 위한 최소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볼 때 85만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보험수령액에 있어서 사회연대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2가지 방식으로서도 85만원 정도의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 국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2가지 방식으로 40만원밖에 얻지 못한다면 국민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45만원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85만원인지 혹은 그것이 120만원인지, 저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국민소득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네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이 복지 분야와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노인복지관련 법들이 제정됐지만 노인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말씀하실 때 사회자님이 기호 8번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지거래자유화를 실시하고 농가거래자유화를 실시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의 농가를 자유롭게 사서 주말이 되면 자식들을 데리고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일요일 이후에 출근할 때 올라오면 농가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전원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 전체가 주말별장을 가지게 되면서 산삼뉴딜정책을 실시해서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1,000개의 산삼재배단지를 만듭니다. 물론 수출용입니다. 그래서 산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곳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원씩 주는, 전국 20~100살까지 누구든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음으로써 뉴딜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근모 후보께서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들과 젊은이들 간에 유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인들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서 보조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일하는 부부를 위해서 가정상담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 환경을 감시해 주는 일이든지 그리고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또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지혜와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저는 노후 문제를 꼭 노동을 지속시키면서 해결해야만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봅니다.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보육 못지않게 노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인 근로에 의해서 노후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정년을 연장해 준다든지 또는 학습급여를 준다든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주의적인 전략에 의해서 아들, 딸들이 책임져야 하

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에 있어서….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해서 끝으로 전 관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우리 사회가 세대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돌파력, 중년의 무게중심, 노년의 지혜가 모든 분야에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부터 소외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업마다 가급적 피크임금제를 도입해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월급을 받지 않고도 출근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일은 그 자체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의 초청교사가 된다는가 교내 경찰이 된다는가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가족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데….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간 해 주시고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각 후보들께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 문제,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그리고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에서 특정주제만 선택하여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시간은 2분입니다. 정근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저는 경제는 과학이고, 과학이 곧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학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 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97%를 우리가 수입하지만 앞으로 에너지는 전기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생산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력을 수출하고 그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에너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산전국이라는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농촌을 걱정합니다. FTA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농촌을 첨단과학기술과 연계하게 되면 첨단산업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최대한로 활용하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오히려 중국과의 FTA를 해서 중국 사람이 우리의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쌀도 현재의 가격보다도

4~5배의 고기능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소재 분야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하면 만족하는 삶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금 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한국산업의 미래가 어떤 것이냐, 첨단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어떤 분야가 과연 첨단산업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들입니다. 저는 그 경우에 한국 경제가 지나친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봅니다. 대안으로서 혁신주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지는 것입니다. 혁신주도적인 중소기업, 부품을 생산합니다. 부분적인 공정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술혁신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내기술혁신, 폐쇄적인 기술혁신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시되는 기술혁신 방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숙련 인력, 지식기반 노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외국에서 들여올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미숙련 인력을 고숙련 지식기반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직업교육체제입니다. 사내교육에 이와 같은 노동교육을 떠맡길 때 노동개혁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한국에 몇 안 됩니다. 사회적인, 독자적인 직업교육 체제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학습훈련 급여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의 고용과 맞먹는 일자리가 되고 그렇게 할 때 내수성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주도형 성장은 내수수출 동반 성장의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번 질문은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 문제 또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그리고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특정주제만 선택해서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전 관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제가 합참에서 10년간 국제관계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외국이 먼저 과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는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복채를 잡고 우리는 북소리에 따라 가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깐 항상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정말 국민께 사과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큰 계획을 만들고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관계가 나오고, 국제관계가 어떤 것이 생길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과제를 주변국에 주어서 풀어나갈 때만 최소한 대등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대응책을 세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문제도 우리 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부 개념으로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선 중국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국과는 경제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은 중국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기회로 북한을 위성국화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 운영하는 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독도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러시아 문제는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의 자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고, 미국과의 문제는 여태까지 불편했던 관계에서 한 차원 높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전 분야를 확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고엽제 환자가 청와대 앞에서 28년간 병 고쳐달라고 소리쳐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안보가 되어야지 사실은 무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25 월남 참전용사는 대통령 당선되면 역시 3억원씩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교육을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의 안보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시골에서 여자는 농업지도자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용자도 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차별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반도체는 국민 소득 2만불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윤리법을 바꾸어서 우리도 21세기 즐기세포와 생명복지 산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에 200층짜리 빌딩을 200개 이상 지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그만두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하나의

국력을 총 집결하고, 국력을 총 집결하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모든 국토가 다 잘 살게 됩니다. 부산에 짙끔, 대구에 짙끔, 광주에 짙끔, 강릉에 짙끔, 이러한 국토의 균형 발전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국가는 금융메카를 새만금에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1만개의 은행이 들어온다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새만금에 세계적인 금융메카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국민소득 5만불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의 끝 질문으로 오늘 전체 토론회의 마무리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각 후보들께서는 양성평등 실현 방안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에 특정주제만 선택해서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국민 후보부터 1분 30초간 답변을 시작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국민 후보** : 여성의 직위는 국가와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성 비정규직이 70%나 됩니다. 또한 OECD 미만입니다. 저는 일단 고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사권과 제소권, 귀속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고용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분명히 여성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 할당제를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1개의 나라에 2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단 핵심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와 백대기업이 출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일임금 원칙에 확실한 관철 그리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고용형태를 채택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대보험의 적용, 불안정 노동, 위험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양성평등 실현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해서 전 관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저희가 양성평등 문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의 출산, 육아는 바로 그 국가의 장래입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잘못하면 그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되고 여성의 출산, 육아는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자가 되면 모든 정책을 그런 차원에서 여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과 남성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30%는 여성들에게 할당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되 할당하겠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동일한 규모이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것 외에는 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기업이 전하지대본이다, 일자리를 많이 유지하는 분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면 일자리는 많아져서 비정규직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헌법 제33조에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저는 단체행동권을 폐지하고 경영참여권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두 번 다시 노조파업이 있으면 그때는 무기징역 정도로 과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단 1건의 노동분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생산성 투자가 1% 미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공장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노동투쟁을 많이 할수록 내 자식이 무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최저 임금제를 국가가 실시하겠습니다. 150만원 이상 빌딩에 있는 사람이 70만원 받아서 교통비하고, 점심 먹으면 남는 것 없습니다. 절대 이런 임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빌딩 주인이 돈이 없어서 70만원 주는 것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50만원, 어떤 여성이든 빌딩에서 청소하는 여성이든 150만원으로 비정규직은 인정하되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근모 후보께서 답변하실 때 차례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해서는 정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저는 남녀평등이라는 것보다는 남녀존중의 개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직장을 갖고 행복하게 하려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즉, 계속교육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이제는 IT시대이고 또한 첨단과 학시대이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도 노력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올릴 수 있는 직장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1년에 100만 개의 자리를 우리 주부들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2시간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주제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또는 시간부족으로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은 전 관 후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후보** : 온 국민은 새로운 국가경영 주체의 출연을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우에 사랑을 뿌리로 한 정직, 검소, 조건 없는 헌신을 하는 기본이 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거창한 계획과 비전에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경영, 즉 공개, 공평, 자율, 참여, 책임에 공동주체 공공경영으로 국민 통합과 지속적인 국가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시대를 열어갑시다. 번 선거에 이 땅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이 구원투수 기호 9번, 전 관과 함께 유권자 선거 혁명으로 월드컵 때 광장의 환희와 같은 가슴 벅찬 새시대를 직접 함께 즐겁게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깊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전 관 후보의 마무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2분간 허경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 국민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아마 내일이면 여론조사 15%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30% 돌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치고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는 의료보험을 100% 적용하고 장기이식 환자는 1년 이내에 국가에

서 장기를 구입해서 100% 수술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장기가 없어서 국가에서는 시신기증자가 없으니까 마냥 기다리라는 서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한 이후 지금까지의 전과자는 엄격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 20년 융자조건으로 월 몇 만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한 사람이 15억원을 평생 받아가게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원, 5인 가족이면 75억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정치인들이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의 예산은 매년 260조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카드를 쓰면 연간 200조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조원을 탈세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가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국가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근모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2분간 하실 차례입니다.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이면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새로운 계기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냥 정치인들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업적도 면밀히 보시면서 다같이 힘찬 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년 전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감동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정말로 알차게 하고 과학기술을 최대로 활용하고 새로 시작하는 세계화의 지구촌에서 우리가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결심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서로 나누지 말고 보혁갈등이니 좌우대립이니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지도력을 발휘해 가면서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금 민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금 민 후보** : 국민 여러분, 기호 10번 금 민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주식회사 CEO를 뽑는 선거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저 높은 수익률, 즉 높은 성장률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장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노동에 투자하는 성장,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 진보적인 경제성장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장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평화국가 만들기, 대한민국 사회국가 만들기, 대한민국 녹색국가 만들기 또한 20년 동안 민주주의가 아직 미완성으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보는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가장 수익률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1위 후보에 대한 도덕성 공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국민이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선택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국민 모두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진보 기호 10번, 금 민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위원회의 진행 규칙을 존중해 주신 네 후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 후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3차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시간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차,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여섯 분의 후보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후보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제 후보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인제 후보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반갑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시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오늘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토론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에라도 사회자가 중지 요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여러 후보들의 토론 모습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들 중 한 분과 함께 나라의 희망을 꿈꾸며 모두 투표하러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저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이명박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가장 주요한 경제를 토론하는 날입니다. 물론 저는 경제 관계 이야기를 이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몇 가지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해서 많은 네거티브로 음해공작에 시달려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인해 저는 30억원을 내라는 공갈범의 협박을 받았습시다만 저희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조사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투표 3일 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이인제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먼저 서해 기름유출 대재앙으로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 재앙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미국의 낙선 대통령이 거짓말이 드러나서 대통령 직을 사임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났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이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은 우리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 중산층 경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을 앗아간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인제가 그 꿈과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회창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후보, BBK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보면 2000년에 광운대 강연에서 BBK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회사이고 또 이익도 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동안 검찰의 결과 발표가 완전히

영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온갖 탈법, 편법을 일삼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국가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 1분간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로서 한나라당은 두 번 죽었습니다. 10년 전에 국가신용을 파탄내서 나라경제를 죽였습니다. 부도났습니다. 오늘 그 당의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 장임을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신용파탄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의 핵심 기초는 신용입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무너집니다. 이명박 후보님, 광운대 가셨습니까? 이명박 후보님, BBK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이끌어도 어려운데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는 말입니까?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세살 박이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두부 한 모 흠치다 잡힌 젊은 가장, 생활비 바닥 나 떡과 옷까지 흠치다 잡힌 실직자, 자식들 학원비 마련하다 철창에 갇힌 아버지. 국민 여러분, IMF 위기 때의 이야기 아닙니다. 서민경제 파탄낸 노무현 정부 5년의 참상입니다. 정동영 후보님, 남 탓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석고대 죄하고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정치일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님, 더 이상 거짓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님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진실로 국민을 위해 후보 사퇴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선거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책임과 거짓으로 덮인 이 선거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시다. 저 권영길에게 보내는 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시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문국현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그나마 이명박 후보를 믿었던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

보로 나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당시 수천 명 피해 봤던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원통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다섯 명이 오늘 이 대 토론회 이후에 만나서 별도의 대책을 논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공약과 관련되어 KBS 추적60분에서 제 공약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입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위 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도 저를 대통령감 1위로 보고, 포항공대생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부, 그리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끌고 나가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섯 후보의 기초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의제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의제는 지난 번 1차, 2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학계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가 38.7%, 연금제도 개혁이 13.2%, 부동산 정책이 12.2%,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고,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지금부터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입니다만 제가 봉안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해서 모든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 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에 가장 관심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후보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이인제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제가 노동부장관을 할 때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정했습니다. 그때는 기간제라든지 또 단시간 고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파견근

로, 비정규직이 20%대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까지 합해서 약 500만 내지 800만, 50%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임금의 격차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번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고용주들이 이것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장에서 잘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 없는 임금, 동일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고용의 안정,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20%대로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완화해서 꼭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비정규직은 사실 일종의 모순입니다. 똑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서 노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기업은 될 수록 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측의 이야기이고 또 노조측도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보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정부, 노조, 사가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를 무엇을 하느냐,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람당 그 비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법인세를 안 내는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법안이 앞으로 합리화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2년으로 시한되어 있는 것을 가령 2년 내지 3년으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갑자기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는 그런 횡포가 일률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저는 좋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시장이 선순환 됩니다. 일용직,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법, 차

별시정을 위한 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직원들을 외주화, 아웃소싱 함으로써 이 법에 구멍을 이용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사용주가 맞다, 사용자 성을 판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넣으면 외주해 봐야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용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사·정이 하나씩 양보하면 비정규직 숫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노'는 무엇을 내놓느냐, 임금과 근로조건을 현재 수준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는 계약조건을 무기한으로 고용안정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근로보험을 포함해서 4대보험의 보험료 50%를 부담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하나씩 내놓으면 비정규직을 OECD 수준 25% 선으로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지났습니다. 권영길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은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시간 꼬박 일해도 월급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88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법,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 막아내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습시다만 끝내 막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악법 전면 개정해서 일시적 업무에만 비정규직 쓰고 노회노동 강제하는 파견제 철폐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특수고용직 삼권 보장하겠습니다. 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선도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금 3조원 조성해서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5년 이내에 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후보들께서 비정규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법 만들 때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야합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 통과시킨 사람들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자격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닦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만이 닦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문국현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경제와 일자리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이 법을 맡길 때 저희가 그토록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악용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야말로 경제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정치인도, 대통령

민주신당 정치인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하고 경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셔야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키우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 때 저희 회사에서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정규직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전체 근로자의 55%가 비정규직입니다. 미국처럼 4%가 비정규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정규직 악법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직접시공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8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비정규직 정규화에 집어넣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세계화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비정규직 입장에서만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비정규직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물론 고용의 유연성, 기업은 아무래도 한번 고용하고 나면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써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급료를 조금 올려줘도 됩니다. 생산성과 임금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60%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언제 또 해고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을 할 때에는 임금을 그래도 90% 가까이 주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비정규직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장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보호법을 만들지”, 그래도 지금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법을 보장해서 일자리만 쫓겨나게 됐다는 그러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호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토론 방식은 1차, 2차 토론회 때와 동일합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론하시는 후보들께서는 먼저 모두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해서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초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고유가 상태지속, 전 세계적인 주택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각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회창 후보부터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국민 여러분, 경제는 나라가 첫째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경제가 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안정 기초가 깨지면 경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국회 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격투를 벌리는 모양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전기톱이 등장하고 쇠사슬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 후보를 둘러싸고 온통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명박 후보가 가령 대통령이 된다 해도 5년 동안 이런 싸우고 서로 막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의 안정은 물론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정된 기초를 닦은 후에 경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것에 요체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그저 규제를 풀어주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면 열심히 뛰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업을 푸는 것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또한 획기적으로 정부와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강소기업, 저는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뛰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40%, 심지어 80%를 차지하는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반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정동영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회창 후보님께서는 늦게 출마를 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좋은 부분을 많이 고르신 것 같은데요. 공약집을 보면 6% 성장, 50만 개 일자리, 중소기업강국, 제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저는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 사회적 분위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뛰어보자는 분위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가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품소재기업, 임기 내에 1,000개 반드시 유치해서 국내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 일으키고, 그 투자가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것으로 좋은 경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강국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회창 후보께서는 1년 내에 기업규제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옹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께서는 2002년에 국민들 앞에서 정경유착, 돈 정치, 부패고리 청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재벌로부터 불법정치자금 848억원이나 차떼기로 받았습니다. 정경유착 없이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부패의 후보답게 차떼기로 정책 받으신 이회창 후보께서 삼성 특검 제대로 조사되면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청산해야 된다, 이회창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가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이회창 후보님께서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못된 자유가 일부 기업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 그 한 예이기도 합니다만 해고의 자유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광운대학에서 한 것을 보니까 BBK가 자기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한쪽에서 기업인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고 CEO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이 기업에서의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처럼 안전망이 있는 데라든가, 기업의 전업이 쉬운 데라면 모르지만 오늘날 사오정의 공포를 겪어보셨는지요? 40대, 50대, 여러 후보님들 그런 공포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사오정의 공포를 경험해보셨다면 절대 해고의 자유를 주셔서 안 됩니다. 또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자영업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회창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론 시간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반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간 이명박 후보가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이회창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한나라당 공약에 비슷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투자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도 중요하고, 같은 규정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회창 후보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부탁은 2002년도에 김대업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회창 후보께서 2007년 선거에서 반대편 입장에서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회창 후보께서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 정치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 정치가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개혁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부혁신에 대해서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규제만 풀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나 동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있을 때에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거미줄 같은 규제, 교통신호등처럼 간단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이제 이회창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2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업을 갖다 붙였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이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경우에 네거티브가 되는데 지금 이명박 후보, 자신의 말 한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탈법, 편법, 불법, 거기에다 자기 말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서 왜 네거티브 했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저는 이 점은 정말 이명박 후보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권영길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정경유착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대선자금 문제로 저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제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을 말한다면 민노당 권영길 후보, 액수는 작지만 민노총에서 정치자금 받지 않았습니까? 액수가 작으면 도둑이 안 되고 크면 도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의 자유를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도 어디까지나 정말 법적 요건에 따라서 또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경영자가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통하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다음에 정동영 후보께서 6%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 성장은 정동영 후보가 정치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훨씬 전인 '97년도 2002년도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역시 6%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정책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화려하고 포장지에 쌓지 않았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정책을 담았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한 상호토론, 정동영 후보가 모두발언 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거리에 붙은 한나라당 후보 현수막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10년 걸려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못 살린 것이 있습니다. 피부경제, 생활경제, 서민경제입니다. 우리의 전통 대가정에서 집안이 어려워지면 우선 큰아들부터 살립니다. 우리 경제의 큰아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막내를 아직 못 살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누구일까요? 중소기업입니다. 이것 살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중통령 시대 열겠다,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셋째 막내는 누구입니까? 재래시장 또 자영업, 신용불량, 서민경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막내를 살려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릅니다. 경제 운영의 핵심은 전문성과 인사입니다. 현 정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사일 것입니다. 저는 경험 많고, 나이도 좀 드시고 그리고 능력이 검증되고 국민의 고통을 뼈 속으로 잘 이해하는 분들로 최고의 경제드림팀 만들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과 함께 중소기업 중견기업 만들어 내고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것이 저의 경제 비전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십시오. 권영길 후보부터 시간은 1분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정동영 후보님, 경제 죽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사회양극화 더 심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동영 후보님 책임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1등 공신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권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념 상태에서 현대건설 회장 지낸 이명박 후보에게 좀 기대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님,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오락가락하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서 이제 족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말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민경제 붕괴시킨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제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제 죽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끝내 주시지요.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정동영 후보께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갖고 싶다는 청년들의 그 절규가 200만명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 200만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정규직 산모가 그 산모원에서 내 아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가 울부짖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외에 결국은 집 아닙니까. 원가공개하자는데 끝까지 반대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한 가구당 보통 3,000만원에서 1억원, 2억원씩 올라갔습니다. 이것 다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원가공개하자니까 대법원에서 옳다고 하니 지금 아파트 값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 이명박 후보,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설득력도 있습니다. 다마는 말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 의장을 두 번 하시고 또 당정회의를 쪽 해왔고 거기에서 장관도 했고, 또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과는 이 정권을 끝까지 가겠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것은 자기 입장은 피하고, 잘 된 것은 자기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문국현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 체감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서민을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서민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

니까 이것은 경제 면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부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서민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이어서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정동영 후보가 현실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대학 졸업생들 올해 취업률이 9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 변변한 일자리,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 가는 대학 졸업생 10%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의 꿈을 다 앗아가 놓고, 그리고 이 불경기와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이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또 아이를 제일 많이 안 낳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용불량자 300만명이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고 또 450만명이 신용불량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지금 깊은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끝으로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10년 만에 경제 살아났다, 이것은 아마 우리 정동영 후보가 말씀을 매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성장률이 4.1%입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 수준 이하로 역대 정부 중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또 양극화, 아까 권영길 후보 또 문국현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이태백' 또 '오사정'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정권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권에서 통일부총리까지 하신 정동영 후보, 어느 모로 보나 이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에 걸쳐 오히려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신 말씀은 매우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경제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 2분간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10년 전 IMF 터널을 빠져나온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애써 말씀하신 뜻을 이해합니다. 즉,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권영길 후보님,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님, 경제 정책을 말씀하기 전에 또 현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과탄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회창 후보님, 참여정부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두 부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대기업, 아까 큰아들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익은 2배 그리고 부채비율은 4분의 1, 대기업 중에 글로벌 스타 기업이 13개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둘째, 셋째, 중소기업과 그리고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5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기술, 자본, 자금, 판로, 제가 중통령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줄이더라도 중소기업부 만들어서 총괄지휘하고 독일이나 대만,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래시장 아들입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신용불량 270만명, 제2의 인생, 경제인생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168조원, 한나라당이 부도낸 나라 살리기 위해 대기업에 168조원 넣었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10조원의 잉여가 났습니다만 중소기업 살리고, 신용불량 해결하는데 써서 서민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후보들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알아보는 상호토론 세 번째로 권영길 후보가 갖고 계신 생각을 모두발언을 통해서 밝혀주시시오.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저는 진보적 경제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보적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며, 부자와 재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성장입니다.저의 진보적 성장은 6%, 7% 성장하는 양적 성장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다. 성장잠재율 5%를 유지하면서 매년 서민소득 7% 올리고, 불평등은 9% 줄이는 '서민79경제' '서민친구(79)경제'입니다. 저의 서민친구경제는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1,000만 고용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즉별 재벌경제 해체해서 서민경제를 육성할 것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서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벌, 땅 부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받아서 민생대혁명 이루겠습니다. 부자재벌들에게는 747 경제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서민친구 경제가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권영길 후보의 의견에 대해 1분간 차례로 반론해 주시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는 권 후보님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두 가지 기여하실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과로가 심합니다. 세계에서 허용한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허용한 것보다도 50% 이상 과로하는 그런 근로자가 많습니다. 거의 다 불법입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직장의 노예가 되어 가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불법 과로, 또 50%가 넘는 이 과로 없애도록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사교육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실 때 우리 근로자에게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권 후보께서는 항상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저는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표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화를 바꾸는데 한국노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성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협력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한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자의 권익보존보다는 정치적 안전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든가 강경노동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권 후보께서 일말의 책임이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는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새로 노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인제 후보가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권영길 후보님, 물론 당의 노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진보적 성장경제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진보가 새로운 세계적 변화환경에 맞는 그런 진보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또 지식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산업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을 발전해야만 일자리가 나오고 또 소득이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한테 그냥 돈을 뜯어서 나누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아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지금 권영길 후보는 대기업 횡포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결국은 경영에 압박을 가하니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격차가 심해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처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이회창 후보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권영길 후보, 진보적 경제성장론이라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성장, 분배 이 두 개념으로 경제를 보는데 진보적 경제성장론이라는 말은 권영길 후보가 그동안 즐기치게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다가 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하니까 슬쩍 경제성장론이라는 것을 써서 뭔가 그쪽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편법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권영길 후보, 민노당은 즐기치게 분배우선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쌀 두지에 쌀이 있어야 그것을 퍼서 나눕니다. 쌀 두지에 쌀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퍼가서 어떻게 경제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벌기업과의 중소기업 문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권영길 후보님, 경제에 있어서 이념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재벌 그리고 서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통합의 경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권 후보께서 대개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경제영토확장론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우리를 옴아매고 있던 이 섬경제로부터 탈출해서 이른바 대륙경제로 한국 경제의 영토로 확장해 가는 것, 만주 시베리아에 가서 일감도 찾고 일자리도 만들고 무역도 하고, 또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뺏어가는 것, 이 점에 관해서는 권영길 후보와 저의 견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 권영길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담 지운다, 아닙니다. 부자와 재벌들,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사회적 책임 다 하고 있습니까? 삼성 재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견희 회장, 불법경영으로 7조원의 비자금 조성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분배, 분배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분배 한 번 있어봤습니까. 한나라당 50년, 사이비 개혁세력 10년 동안 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살림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자주 철학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적으로 50년 보수정권, 사이비 개혁세력 10년에 안 되는 것, 이 기본적 틀을 바

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보적 경제성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동력 그 다음에 내수 동력, 풀뿌리 동력, 미래동력, 평화동력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님, 민주노총 대표로 나온 것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을 모르셔도 그렇게 모르셔서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기업인의 정당입니다.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님,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성노조를 어디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 타이어가 이명박 후보님 사돈 관계의 기업이지요? 그 한국타이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기용매, 노동탄압 때문에 노동자 15명이 한 해에 죽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중독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사돈기업에 노사관계 잘 만드세요. 그것 좀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제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가 모두발언 하실 차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1년에 120일 이상을 아시아의 각국 또 세계를 돌아다니던 글로벌 CEO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벌어들이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경향을 보니까 지금 육체경제 대 지식경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경제 대 녹색경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식경제 쪽으로 가야 될 때이고, 그 다음에 태안 사건이라든가 태안에서 기름유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검은 경제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녹색경제로 가야 될 때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7월에 전 세계 반부패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 세계가 이제 검은 경제를 벗어나 투명한 경제로 가자고 합니다. 한국만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는 한국만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부패 전선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 중에도 몇 분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데요. 부패에서 벗어나면 중소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500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경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파괴가 없어지면서 아토피 같은 병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녹색경제, 생명경제, 지식경제를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부터 1분씩 반론을 차례로 해 주시겠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우리 문국현 후보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귀담아서 들을 만한 것

도 있습니다. 또 제가 동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난 너무 환상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국현 후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3년이 되어서 교토의정서에 우리가 가게 되면 Co₂ 를 줄여야 되는 부담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저는 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외국 클라크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이지요. 그 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물론 말씀하십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현실에 입각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추상적인 것을 일하다 보면 실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문국현 후보는 성공한 CEO로서 우리 정치의 이상 또 경제의 비전, 지식경제, 친환경 그리고 반부패의 경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치경험이 전혀 없으신 문국현 후보께서 과연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 낼 수 있겠는가, 또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인데요. 미국의 대공황이나 또 70년대 산업공동화의 위기, 또 영국의 70년대 경제 위기, CEO 출신이 구하지 않았 습니다. 저는 CEO의 역할과 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CEO는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사회 모든 분야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지도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 반론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저는 문국현 후보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양심적인 CEO로 활동한 경력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CEO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명박 후보는 지금까지 경제 대통령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은 바로 이인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경력, 회사 경력이 있다 해서 경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에 공업화, 산업화를 이룬 유일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 분은 회사 사장 출신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가 그 위에서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대통령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국민의 신뢰를 모으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 위에서 경제가 떨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문 후보님의 글로벌 경제, 지식경제, 녹색경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8% 성장, 500개 일자리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다면 현 정부에서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것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사장은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늘리고, 원가절감을 하면 목표달성입니다. 돈만 잘 벌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내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경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000만의 이해관계가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잘 통합,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곧 국가 경영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경영을 잘 하는 것과 국가경영이 별개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권영길 후보가 끝으로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문국현 후보님,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 500만개 만든다고 강조하시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 2002년부터 한국통신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한국통신은 2만 5,000명 정리하고 했습니다. 2003년에는 분식회계 불법경영으로 618억원 추징당했습니다. 문국현 후보께서는 정리하고, 분식회계가 나쁜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외이사로 있을 때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KT 사장은 지금 문국현 후보님과 함께 창조한국당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이런 한국통신의 정리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국현 후보께서 오늘도 비정규직법,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조한국당의 김영천 의원이 바로 그 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가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너무 현실을 모르시고 경제를 모르시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T에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가서 사람 중심의 경제, 투명한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한 것은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유한킴벌리나 유한양행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우리 자체 R&D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와이트라는 상표가 지금 전 세계 33개 국가에 나가 있고, 순전히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R&D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가 기업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기업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

서 빌 클린턴은 이미 15년 전에 주장해서 성공했고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연방총리인 여성총리인데 기업형 정부 혹은 창조적 정부라고도 부르고, 아예 일자리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역할 그리고 정부의 예산, 인센티브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전부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불과 2년여 만에 아주 강한 독일을 다시 재건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역흑자 2,100억 달러나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으로 210조원 되는데 우리나라 무역흑자 60억 달러에 비하면 14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저희 같은 세계적인 경험이 있고 글로벌 CEO로서 수십만 조직을 경영해 봤고, 국제관계가 좋고, 어떻게 사람에게 혼을 불어넣고, 공무원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공무원 100만이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반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올리고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토론 다섯 번째는 이명박 후보의 모두발언 차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CEO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업이 마인드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업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긍정적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생활도 해 봤습니다.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일을 해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시장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인간 CEO뿐만 아니라 공익을 중요시하는 국가기관에서 4년간 비교적 서울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너무 반기업, 반시장적 정서가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 정권이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친기업적 또 친시장적 대통령이 된다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장기업이 300조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투자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노사문화 바뀌면 GDP 1%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제가 서울특별시장을 해서 경험했습니다만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면 경제성장 10% 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신지 1시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부터 차례로 1분씩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대표공약이 경부대운하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12년 전에

그 경부대운하 프로젝트를 어느 대학에서 가져와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축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부대운하 물류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창고 보관비가 비싸고, 또 기름값이 비싸서 운송비가 비쌉니다. 저는 경부대운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파괴도 그렇고, 그 강 안에 강을 또 만든다든지 또 보를 해서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무슨 경제성이 있겠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만 물류이고, 나머지 80%는 관광 등 삼면이 바다이고 다도해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앞에 이 문제를 클리어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지금 이인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경부대운하 문제, 저도 동감입니다. 경제대운하는 지식기반 사회 시대에 땅 파서 건설공사로 국부를 올리겠다, 저는 아주 시대착오적이다, 경제성 없는 것은 더 할 것도 없지만 환경문제, 지난번에 태안의 기름 유출 문제, 국민에게 실감 있게 이 경부대운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 경제성에 있어서도 속도의 시대입니다. 550km 가는 길을 우리가 2시간 30분이면 주파하는 세상에 사는데 대운하에서 항상 인용하는 독일의 대운하의 유속을 따지면 그게 7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가, 좀더 우리는 크게 미래를 내다본 나라 안에서 땅 파는 계획이 아니라 좀 큰 계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명박 후보의 친기업 친시장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 됩니다. 부패경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용파탄 지도자의 신용은 국가신용도입니다. 이명박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개인에게 신용이 파탄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경제에 신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 후보님의 신용관, 신용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BBK 동업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지요. “한국의 사이버금융 그 틀을 확 바꾸겠다” 그런데 결과는 확 사기당한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 경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한국경제가 부도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부패경제 되고, 정경유착 되면 제2의 IMF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명박 후보님, 국가 경영은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BBK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대박을 바라고 BKK를 만드셨는데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되었었습니다. 개인 손해 입는 것은 괜찮지만 소액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해서 울렸습니다. 국가경영을 도박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서해 원유 유출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명박 후보님의 대표공약, 상징공약인 대운하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 정말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께 지금 표가 도박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렇게 하다가 쪽박 차는 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이명박 후보님, 엔론사건의 레이 회장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고 결국 4~5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160년 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 CEO들은 24년으로 40년에서 감형이 됐는데 레이 회장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4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서 16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후보님을 보면 꼭 레이 회장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3,000, 5,000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1,000으로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반부패선언을 7월 4일, 5일, 6일 제네바에서 저희와 함께 했는데 한국에 왜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정경유착, 부패한 이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부패한 세력이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토론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범위 안에서 반론들 하신 것으로 일단 들었습니다마는 최종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늘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또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이 살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 하는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공약보다 역시 네거티브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26년간 일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16년간 최장수 CEO를 하면서 세계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세계 지도자 중에서는 저를 국제 CEO로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4년 했을 때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야당 시장에게 이 정부가 4년간 늘 평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또는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레이건이 무슨 경험을 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었냐고 합니다. 레이건은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두 번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CEO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세계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후보가 되어서부터 정동영 후보, 또 늘 평소에 인정해 주시던 이회창 후보까지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상호토론을 끝으로 이인제 후보의 모두발언 차례입니다. 국민들께서 경제 활성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것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1분 30초간 모두발언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노무현 정권이 IMF 때보다 더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이 불경기를 해결하고 또 실업대란을 잠재우는데 쏟아 붓겠습니다. 우선 세계 대개혁을 하겠습니다.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 허리를 휘게 하는 과중한 세금을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의 원천동력은 전통산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지식산업단지를 5개 정도 구상하고 제 임기 내에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영세상공인 내세워서 1년에 일자리 60만개 이상을 만들고, 10%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어디가 막혀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가, 또 어떤 곳을 새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매일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회창 후보부터 반론 시작해 주시지요.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두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제대로 굴러서 성장이 되고, 펴야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그만큼 경제 주체들에게 마음껏 펼 수 있고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다만 물을 지키도록

하는 공정경제의 틀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뭔가 계획경제, 즉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이인제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계개척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은 큰 방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만, 저는 4대 불안 해소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서울 마포에 있는 한 가정집을 방문해서 40대 가장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역시 확인한 것은 세금에 대한 고통,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고통, 이 사교육 고통만 덜어도 노후 준비에 여력이 생길 텐데 하는 그런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세금 고통, 고통이 되고 있는 세금을 확실하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못 파는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매, 인테리어, 이삿짐센터에 계신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이인제 후보는 오늘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경제 살리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막지 않으면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 8%입니다. 특히 전남은 23%, 전북은 13%입니다. 미FTA가 들어오면 전남, 전북의 농업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제 후보께서는 FTA를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미FTA 오면 완전히 다 죽게 됩니다. 정말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재래식 시장 동네 상가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 없이 재래식 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저도 농촌을 살려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업만이 아닙니다. 농업의 소득을 3배, 4배 올릴 수 있는 복합산업인

것입니다. 휴양도 가고, 관광도 하고, 문화 역사 전통을 공부하는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 성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FTA에서 농촌을 쉽게 버리는 듯한 것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금산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재벌도 금융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벌의 부패상이라든가 그 불공정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코 그런 것을 동의하셔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기업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고 하다 보니까 할인매장이 들어가는 곳마다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권 같은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도 재벌들이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이인제 후보께서 조금 전에 운하에 대해서 큰 재앙이다, 만일 서해안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계신 후보들께서는 운하에 대해서는 깊은 것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하에는 기본적으로 독극물이나 기름 탱크는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200년 역사에 세계에서 그런 사고도 없었지만 실제 다닐 수 없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2010, 21세기의 친환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운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운하계획을 2010계획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야기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인제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이회창 후보님께서 고용창출전략회의가 경제 주체, 기업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기업 주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부당한 간섭이나 규제, 금지를 합리적으로 과감하게 점검해서 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국가에서 지원하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 지원해서 노동시장, 경제시장이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답답하게 되어 있나, 이것을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전쟁을 선포하듯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께서는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당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세금폭탄 터트렸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세라든지 우선 잘못을 시인하고 접근해 주시면 참 좋겠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 사설 사교육학원이 67%로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 후보께서는 농업을 말씀하셨는데 FTA는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오히려 대응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창고추장 하나만도 우리가 지원해서 3억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농업이 살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래시장, 누구보다도 제가 국민들께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 재래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가, 또 영업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원형 농촌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복합적으로 살려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시간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꾸 말씀들을 중단하게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들 국민들께 말씀드릴 시간들이 부족하지요?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하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여섯 분이 나란히 국민들과 마주하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훌륭한 후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 공모를 통한 345개의 응모작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UCC 동영상 질문시간입니다.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이고, 순서상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 **박수희** : 마포구에 사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냈던 국민연금에 대해 물어봐도 되는데 솔직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국고가 많이 세어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국민연금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박수희 씨가 걱정한 대로 사실은 노후불안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인데요. 우리 국민의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이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200조원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500조원, 1,000조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부 부처의 다툼을 이 정부에서 해결 하지 못 했는데 헌법상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있

습니다. 이 아래에 국민연금을 다룰 수 있는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금문제를 제대로 추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국민연금 재설계하겠습니다. 현재 9% 받아서 50% 소득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낮추면 용돈 연금됩니다. 실질적으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과 함께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5세 이상 500만명 가운데 70%는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또 수입이 없어서 연금 못 내는 500만명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해결 없이 어떻게 복지사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재설계, 연금기금 운용 부분에 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서 차라리 국민연금 안 내고 그만 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강제적 징수를 하면서 서민들은 많은 불만을 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문 닫을 지경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액수가 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되지 않고 강제 징수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부모님들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연금 사각지대, 저 권영길이 해소하겠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 비전문가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들, 창조적이지 못한 정치인들과 행정관료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를 다 받아도 부족한데 이것을 40%까지 소요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1.1명이나, 지금은 1.3명 이하로 낳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친다고 본 것입니다. 왜 중소기업의 소득을 독일이나 일본처럼 2~3배로 올릴 생각을 못합니까.

2,000만명의 생산성을 2~3배로 올리면 중소기업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500만 일자리 만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만들면 그만큼 기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금을 적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자녀 이상을 마음 놓고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사교육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값을 내려주면 원가공개 같은 것 해 주면 왜 두 자녀를 안 낳겠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포기하도록 젊은이들한테 아기를 하나만 낳도록 만들고 연금을 줄일 생각을 합니까. 저는 두 자녀 마음 놓고 기르게 하고, 집값 안정시키고, 일자리 늘리고 소득 2배로 올려서 60% 지급하겠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이제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국민연금, 선진국 같이 많이 내면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한국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연금은 젊어서 내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9%의 보험료를 내고 40%의 소득을 받는다면 2060년이 되면 자금이 고갈되어서 한 푼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 봤자 16% 겨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지난번에 제안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한 달에 8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20만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쓰더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지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경제성장이 되게 되면 노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연금제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소득 7~8%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인제 후보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모든 국민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 연금 제도는 손을 조금 대어서 원래는 2042년이면 기금이 전부 고갈되게 되어 있었는데 계산상으로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년간 생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2060년을 넘어서도 계속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인연금은 기금이 다 고갈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도 거의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순점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으면 기업과 연금공단과 합의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계속 일을 하면 연금기금도 절약되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끝으로 이회창 후보 답변 1분 30초간 들겠습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아까 박숙희 씨가 가진 가장 큰 걱정은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연금지급률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국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춘다는 것이 원칙적인 해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했더니 노무현 후보가 말도 안 된다, 자기는 바로 높은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고 했다가 표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집권한 후 바로 제가 주장한 대로 고쳤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표를 의식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 된다, 현재 국회에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다음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어야 한다, 노인기초연금은 현재 8만원을 약 20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명박 후보께서 그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착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60%입니다. 이것을 저는 80%로 올리겠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사후를 위한 확실한 안전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 2가지 주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권영길 후보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와 환경공학기술 ET 등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차세대를 이끌 이러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첨단산업은 한국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우주기술 ST 등 8T의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환경당을 자부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환경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겠습니다. 국제에너지위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연 30%씩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까지 전력소비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산업은 2020년까지 8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기초과학기술 개발과 연구자의 고용안정입니다. 지금 연구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첨단산업이 육성되겠습니까. 연구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진을 정규직으로 만들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이나 특허개발 획득 수준은 세계 5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세계적인 특허나 연구결과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가 미국은 300만명이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50만명의 교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수는 전부 합쳐서 7만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끊임없이 교육에 반영하고 다시 응용해서 산업화를 해야 하는데 이 교육 분야도 아주 약하고 산업화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산업화 쪽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고 비슷한 것을 영남권, 호남권에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지식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때만이 인재가 지역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블루오션이고 금강과 같습니다. 전통산업에다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패션산업, 염색산업에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 환경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금강과 같은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첨단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서로 결부가 됨으로써 큰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자동차 반도체가 30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IT기술과 융합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조선은 지금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세계 5등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물론 1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기술의 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T, BT, NT, CT, ET, ST 등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미래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합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R&D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3% 정도에 있습니다만 민간, 정부가 더 해서 5% 정도로 하면 이것이 20~30년 후 대한민국에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대덕 같은 데를 가 보면 과학자들의 사기가 죽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사기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공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듭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될 때 1년에 1,000억원씩 연구비를 지원해서 과학자들의 사기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이인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융합기술에 앞서서 이 정도까지 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핵심기술 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명기술, 정보기술, 나노, 환경, 에너지, 문화, 항공우주, 융합기술 분야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식산업 단지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건설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가 보니까 첨단기술 R&D산업에 법인세 3년 면제, 2년간 50% 면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인도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가 보니까 10년간 법인세, 관세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산업 첨단과학기술은 과학자 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급과학기술자, 석사, 박사 과정은 정부가 모두 장학금을 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히 많은 과학자들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해서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 **사회 (방승인 송지현)** :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이회창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특히 첨단과학기술을 육성 발전하는데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매우 남다른 철학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로 예우하면서 우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시절에는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를 받고 사기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CEO로 비용 대 효과 같은 그런 경제논리만으로는 과학기술을 키울 수 없다,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 투자하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우선 돈을 퍼부을 필요가 있다, 지금 R&D 투자 비율이 현재 GDP 대비 2.8% 입니다만 이것을 5~6%까지 나눌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현재 과학기술 예산 중 25%입니다. 이것을 배로 확 늘리자, 만약에 50% 늘리면 기초과학분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매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동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섯 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간, 기술간 상호융합시대가 국가과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첨단형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거기를 보고 국민이 따라합니다. 대통령이 운하 파는 일에 골몰하면 나라는 과거로 갑니다. 항공우주로 가야 합니다. 금융산업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금융강국이 되어야 선진국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환경산업, 에너지산업이 미래 산업입니다. 특히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쏟아지게 하는 산업입니다. 엇그제 구로동 디지털 시티에 갔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만드는 회사는 작가 1,000명이 붙어서 어린이들 만화영화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몇 만명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일본 만화영화, 미국 만화영화 보면서 자랍니다. 거기에 민족혼이 없습니다. 거기에 역사 없습니다. 뿌리 없습니다. 이것 시급합니다. 후진파오 주석이 애니메이션 현장을 찾아가서 100만명의 문화콘텐츠 전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형 지도자입니다. 애니메이션, 문화와 산업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는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차기성장동력산업이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핵심전략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공통질문을 후보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요. 각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존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여러분, 누구나 다 어른이 됩니다. 저도 어느덧 60이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90세이십니다. 저는 자손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한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사회가 또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정말 선진화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어른들은 결코 소외되고 경제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모두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드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되신, 외로우신, 아프신, 소득이 없는 우리 부모님께 희망을 드리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4년 동안 노인의 날도 제정하는데 앞장섰고, 경로연금도 만들고 또 경로연금을 포함해서 장기요양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요즘은 휴대폰 전화 교육 같은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일자리가 있을 때 찾아뵙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집값, 사교육비,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자녀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명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우리 국가가 고령화 시대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노인들께서 가장 아파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가난, 무소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외로움입니다. 이 3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어르신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첫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소득이나 또는 기초노령연금 2가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해 봤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무소득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 독거노인을 보면 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를 가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 가다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사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때에는 독거노인을 한 곳에 모아서 1층에 두 분씩 계시면 덜 외로우시고, 또 2층에는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서로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은 귀가 어둡다던가, 틀니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다 주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인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너무 충격적으로 빠릅니다. 지금 시골은 이미 노령인구 비율이 33~35%입니다. 그야말로 초 노령사회입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첫째, 소득이고 둘째, 건강이고 셋째, 고독을 달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노인 어르신들의 소득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 받는 분들 또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증, 중풍이라든지 치매, 노인 어르신들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이 지옥과 같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증, 중풍과 치매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치료해서 가족들도 여기에서 해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 어르신들의 틀니라든지 보청기, 백내장 수술 등 기본적인 건강복지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쓰겠다고, 농촌에는 특히 전원형 농촌도시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함께 모여 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노인 분들께서 가장 다급하고 필요한 것은 노인으로서의 자존심, 떳떳함입니다. 어디 가서 일 없이 놀면서 눈치 보고 또 주머니에 돈 없이 아들, 딸 눈치 보는 것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노인 분들께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또는 환경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적절하게 찾아서 반드시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8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되

실 것이다, 지급범위도 60%에서 80%로 늘리려고 합니다. 건강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넓혀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틀니 또는 침해, 기타 당뇨,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힘차게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정동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고령사회가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정책과 철학입니다. 시장만능주의, 경쟁지상주의 이런 대통령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혜적 복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셨습니다. 자식과 나라를 위해서 모두 바치고 자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가진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도 70%나 되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8만 3,000원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은 너무 작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동의하십니다. 제가 당선 되면 임기 내에 2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건강, 연금 3가지 해결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강서 노인복지센터를 갔는데요.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구청에 하나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전국 3,500개 읍·면·동에 1개 정도씩만 있어도 10분 걸어가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권영길 후보 복지정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60~70년대 부모님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놔더니 노후생활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소득, 부양, 건강, 가사,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서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8만 4,000원인데 3배 정도 늘려야 됩니다. 지급대상도 80%로 늘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1인당 주치의 제도를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년 65세로 늘려야 됩니다. 업종별 정년제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년연장하면서 피크임금제 해야 됩니다. 연장 안하고 피크임금제 하면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밋빛 공약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공약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7월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대로 했으면 되었습니다. 한나

라당은 그때 열린우리당과 야합해서 용돈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쪽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께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이명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밤이 늦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불신이 많습니까? 저는 기업에 있으면서 또 서울특별시장을 하면서 비교적 최선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할 때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로부터 세계인물대상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2007년도 10월 달에 저는 타임즈로부터 세계환경영웅이라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어 부통령이나 몇 사람이 받는 곳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체험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선진국, 후진국 다니면서 했습니다. 저의 경영철학은 이제 대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길을 막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철학은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경쟁이고, 앞으로 7% 성장은 약자에게 돌아가는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인제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잘난 정치세력, 배우에 있는 언론 권력 강요하는 대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서민 중산층을 힘들게 한 국정을 파탄 낸 정치세력은 대안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은 도덕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철저하게 탄압받은 야당 중의 야당이고 중도 개혁정당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또 저 이인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써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노동부장관, 경기지사로서 서민대중을 위해서 모든 개혁과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혁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인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충직하게 여러분을 위해서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서민 중산층을 살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회창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02년 대선 후에 정치를 떠났습니

다. 다시 정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많은 욕설, 비판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고 망가진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교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다시 계속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혹덩어리 그리고 부패 이런 시대가 다시 계속된다면 무엇 때문에 정권교체를 합니까.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직과 성실과 신뢰로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저 이회창이 감히 이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정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즈가 엇그제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되면 한국은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썼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좋은 경제냐, 나쁜 경제냐, 진실이나, 거짓이나의 대결입니다. 특권 경제, 부패 경제, 거짓말 경제로는 절대로 선진국 못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선진국형으로 가 있습니다. 국민의식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표준입니다. 이제 대통령만 선진국 표준에 맞으면 대한민국은 한걸음에 선진국으로 갑니다. 더 깨끗해 져야 하겠습니다. 더 신뢰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권영길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꿈입니다. 1997년, 2002년, 2007년 대선에 나와서 피땀함 외침으로 호소하는 꿈입니다. 프랑스 특파원 생활 7년 동안 저는 외국인이면서도 누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 나라에서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지라도 저의 꿈만은 접을 수 없습니다. 저 권영길에게 보내는 한 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 투자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투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꿈꿉시다.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룹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문국현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상상하는 만큼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품격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존경하고 한국민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부패를 청산해야 됩니다. 부패는 약자의 적입니다. 이 부패의 청산을 통해서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애겠습니다. 사오정의 공포를 없애겠습니다. 집값 걱정, 사교육비 걱정, 부패만 없애면 됩니다. 경부운하에 양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고주의 때문에 경부운하를 동요하신다거나 건설 부패를 허용하신다면 우리 젊은이들 500만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부패와 500만 일자리, 2,000만명의 행복과 바꾸지 마십시오. 비정규직을 반 이하 없애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후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에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후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제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부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 직 선 거 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문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

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부 칙

- 제 3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정 당 법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 (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 (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설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②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③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

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05.8.4>)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

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거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 (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 (위원회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④토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4.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 (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②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 (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천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

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 (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 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 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 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 (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8.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2.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05.9.23>

1. 「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이하 “대담·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23>
2.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23>
3.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정당정책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23>

제3조(협조요구 등) 토론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규칙 제18조(자문위원 등)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제 2 장 대담 · 토론회

제4조(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

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 삭 제 <2005.9.23>

제5조(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당해 선거의 선거록 <개정 2005.9.23>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대담·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마다 사회자 1인을 둔다. 이 경우 동일인을 다시 사회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대통령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 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개정 2005.9.23>

③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에 대하여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후보자로부터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자의 순(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23>

④ 삭 제 <2005.9.23>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

회자 이외에 대담·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① 대담·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의 성격과 참석 후보자수를 고려하여 대담·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담·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 삭 제 <2005.9.23>

⑤ 삭 제 <2005.9.23>

⑥ 삭 제 <2005.9.23>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개정 2005.9.23>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대담·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책·공약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9.23>

④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마다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3>

⑥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23>

⑦제6항의 질문사항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작성된 질문사항은 선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할 수 없으며, 선정된 질문사항은 사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할 수 없다. <개정 2005.9.23>

⑧대담·토론회의 진행 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사항의 작성 또는 선정에 참여한 자와 사회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23>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 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대담·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대담·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대담·토론회의 주제
3.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대담·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대담·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중계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대담·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대담·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대담·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등과 협의하여 대담·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대담·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대담·토론회규칙 설명
7. 대담·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대담·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개정 2005.9.23>

②후보자는 대담·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정당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발언 요지를 정리한 낱장으로 된 자료(기조연설 또는 맺음말 원고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후보자는 지참한 자료를 방송화면에 직접 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23>

③대담·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의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사회자는 대담·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의 방송화면 구성은 중계방송사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제14조(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토론회

제15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정책토론회의 참석대상이 되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함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의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장 최근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된 정당을 말한다. <개정 2005.9.23>

②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담·토론회의 규정 준용)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선정,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공표·홍보·설명회, 정책토론회장의 설비, 정책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정책토론회의 진행 및 정책토론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일전 7일 현재”로, “후보자”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05.9.23>

제 4 장 보 칙

제17조(중계방송)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종료 후에 지체없이 중계방송 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의2(재방송 등) ①방송사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재방송할 경우 사전에 토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재방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에 그 재방송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토론내용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정당 또는 후보자(“토론참여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가 재방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토론참여자가 재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전직 임·직원이었거나 현직 임원과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재방송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토론회에서 토론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방송 중단 요청 등 사실 규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3]

제18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보고서 발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소위원회 또는 평가회를 통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선거종료후 1월 이내에,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에는 토론회 종료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종료 후 3월이내에 발간한다. 다만, 정당정책토론회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1회 발간한다. <개정 2005.9.23>


제20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5.9.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 선거방송토론백서

2008년 5월 인쇄
2008년 5월 발행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판권
소유

서울시 관악구 백제길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201호
Tel : 02-3473-9947,8

인쇄 : 정우문화사

<비매품>

